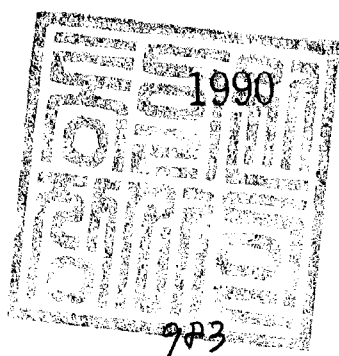


社會主義圈的變化와 北韓開放 問題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統一關聯 政治·軍事問題 研究事業」의 一環으로 推
進한 特殊課題 研究結果입니다.

本 研究에서는 社會主義圈의 變化背景과 北韓의 開放化方向을 探
索, 考察하는데 主眼點을 두고 北韓社會에서의 政治·軍事的 變動
要因과 對南政策變化要因, 南北韓關係 可變要素 및 社會變化에 따
르는 政治葛藤問題등의 多角的인 分析을 試圖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報告書가 關聯研究와 政策樹立에 參考資料로 많이
活用되어 지기를 바라며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內容은 반드시 當
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1990. 12

調 查 研 究 室

〈 目 次 〉

第1章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北韓의 認識과 體制變革可能性	金相俊
I. 研究背景과 目的	5
II. 社會主義體制的 變革要因	7
III. 社會主義圈의 變革에 대한 北韓의 認識	9
IV. 北韓體制的 變化要因과 變化可能性	11
V. 金正日體制와 北韓의 變化可能性	14
VI. 南北韓의 爭點과 展望	18
第2章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視角과 北韓의 反應	金江寧
I. 序 論	23
II.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視角	25
III.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北韓의 反應	43
IV.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實態와 展望	57
V. 結 論	67
第3章 社會主義圈의 變化要因과 北韓體制的 變化可能性	高性俊
I. 序 論	73
II. 社會主義圈의 變化要因	76
III. 改革없는 北韓의 開放	83
IV. 北韓의 變革可能性	88
V. 맺 는 말	100

第4章	北韓社會의 政治·軍事的 變動要因	金京壽
I.	序：北韓體制에 있어 權力承繼의 意味	105
II.	權力承繼의 不合理性과 不安定性	107
III.	權力承繼와 變形된 「하나의 朝鮮」政策	111
IV.	金正日과 北韓 軍部	115
V.	第2世代 「테크노크라트」의 浮上	119
VI.	北韓의 反體制 勢力	123
VII.	結 論	126
第5章	北韓의 對南政策變化要因 分析	崔完圭
I.	序 論	131
II.	對南政策의 一貫性	133
III.	對南政策의 變化誘引 要因	150
IV.	結 論	165
第6章	韓半島 安保環境과 南北關係 可變要素	李相軾
I.	序 論	171
II.	脫冷戰과 國際政治環境의 變化	173
III.	南北韓關係의 爭點	179
IV.	南北韓關係의 課題	194
V.	結 論	203
第7章	南北韓의 軍備統制와 政治關係	崔炳云
I.	머 리 말	209
II.	軍備統制의 方法	214
III.	南北韓 軍備統制의 主要方案	222
IV.	展 望 (結論)	235

第1章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北韓의 認識과 體制變革 可能性

— 金相俊 (韓國政治學會長)

I. 研究背景과 目的	5
II. 社會主義體制的 變革要因	7
III. 社會主義圈의 變革에 대한 北韓의 認識	9
IV. 北韓體制的 變化要因과 變化可能性	11
V. 金正日體制와 北韓의 變化可能性	14
VI. 南北韓의 爭點과 展望	18

I. 研究背景과 目的

최근 社會主義圈의 국가들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같이 지난해 동구의 社會主義國家들은 自由化, 民主化, 開放化를 요구하는 밑으로부터의 변혁운동에 굴복하여 공산당 1당독재와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정치적 多元主義와 市場經濟體制를 수용함으로써, 2차 대전이후 東歐社會를 지배하던 스탈린식 社會主義體制가 종식되었다.

이와같은 역사적 변화는 東歐社會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社會主義宗主國이라고 할 수 있는 蘇聯도 최근에 政治體制의 과감한 개혁을 실시하여 民主化, 多元化的의 변혁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 개최된 소련 공산당 제28차 전당대회에서는 공산당의 權力獨占을 포기하고, 당국가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최근에는 「샤탈린」의 「500일 市場經濟移行 計劃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같이 市場經濟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같이 蘇聯과 東歐 社會主義國家들은 모두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역사적인 실험을 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이나 東歐의 사회주의와는 달리 중국과 북한등 아시아의 사회주의국가들은 아직도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를 고수하면서 역사적 변혁의 물결에 저항하고 있다. 특히, 北韓은 主體思想과 主體體制를 더욱 강조하면서 社會主義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운동이 북한사회에 파급되는 것을 저지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2의 혁명은 북한을 비롯한 제3세계의 社會主義國家들에게도 直接, 間接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하겠다. 더우기 냉전적 논리에 입각한 세계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北韓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대결과 폐쇄의 논리를 고집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역사적 대변혁의 시기에, 한국정치학회는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北韓開放問題>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학술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主 研究 課題로 (1)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社會主義圈 體制의 변혁을 가져오게 한 요인과 변혁유형등을 검토하고, (2)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북한사회의 변화가능성과 방향을 예측하며, (3) 脫冷戰 時代의 南北關係, 특히 정치·군사관계의 변화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4) 平和統一을 모색하는 90년대에 北韓의 개방과 民族統一을 촉진할 수 있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특히 정치, 군사정책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 학회에서는 모두 6명의 연구원들에게 각각 위에서 제시한 연구과제를 요청하였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구위원들을 중심으로 多角的으로 토의한 결과를 抽出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Ⅱ. 社會主義體制的 變革要因

蘇聯 및 中國,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국가에서의 변혁운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변혁유형을 찾아보는 일은 북한에서의 변화가능성과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準據基準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견지에서 첫째, 社會主義圈의 대변혁을 가져오게 된 일반적 요인이 무엇이며, 둘째, 각국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변혁을 촉발한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인가를 구별하여 살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각국의 變革運動過程을 세부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 변혁운동이 발생하게 된 初期段階에 초점을 맞추어, 그같은 혁명적인 변혁운동이 폭발하게 된 요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회주의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i) 장기적인 經濟沈滯와 生活改善欲求의 좌절, (ii) 공산당의 영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당국가체제에서 발생하는 관료특권계급의 지배에 대한 저항, (iii) 産業化와 近代化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多元성과 시민사회적 성숙에서 비롯되는 自律性 증대, (iv) 혁명이후에 나타나는 이데올로기의 퇴조와 그에 따른 社會主義에 대한 信心의 危機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個別 社會主義國家의 개혁운동을 살펴보면, 이같은 공통적인 요인 이외에 각 나라의 특수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국제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다르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를테면,

(1) 蘇聯의 경우는 브레즈네프시대의 장기적인 관료지배로 인한 체제의

경제성과 만성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엘리트들의 공통된 위기감은 <위로부터의 급진적 개혁>을 진행하게 하였고, 특히 정치와 이념의 개혁을 통하여 經濟構造의 개편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비하여,

(ii) 中國의 경우는 文化革命이란 대재난을 경험한 구관료, 지식인들이 모택동사망을 계기로 동소평을 중심으로 결집하여 모택동과 좌파의 시대와 구별되는 중국적 社會主義를 건설하려고 하였으며, 蘇聯과는 달리 정치와 이념문제에는 保守的이면서도 경제적인 우선주의를 강조하면서 과감한 經濟改革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iii) 동구 社會主義의 경우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전통적으로 東歐의 시민사회적 전통과 스탈린식 社會主義의 모순이 소련의 동구정책의 변화를 계기로 <밑으로부터의 변혁운동>으로 폭발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럽질서에도 복귀하면서 사회주의체제가 沒落하는 유형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iv) 그러나 루마니아의 경우는 다른 東歐社會의 변화과정과 약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는 민중봉기와 집권 공산당과 군부의 반대세력이 결합하여 폭력적인 과정을 밟았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개별 社會主義國家들은 기존 공산당내부에 개혁의 전통, 유무, 經濟發展과 經濟危機의 정도, 사회적 多元化的의 정도와 국제적 개방도등의 변수에 의하여, 소련식, 중국식, 동구식, 또는 루마니아식의 변혁운동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Ⅲ. 社會主義圈의 變革에 대한 北韓의 認識

이미 잘 알려진 바와같이 北韓이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바라보는 입장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北韓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회주의권의 개혁을 ‘資本主義的 방식에 매달리는 것’ 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사회주의적 길’을 적극 옹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판의 주된 대상이 사회주의권의 정치개혁, 즉 ‘政治的 多元主義’ 또는 ‘思想的 自由化’에 대한 비판이 그 주된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언론들은 사회주의의 위기가 초래된 것은 “전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기 위한 思想革命을 소홀히 한 데 그 근본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社會主義社會에서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인민대중의 사상, 정치적 통일을 파괴하고 사회주의자체를 와해시키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인식에서 사상의 통일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북한에서는 社會主義的 危機를 경제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즉, 사회주의의 위기는 ‘물질적 빈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共產主義思想의 貧困’에서 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社會主義의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근로대중의 意識化와 革命化’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해서 北韓이 社會主義體制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北韓의 공식문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北韓經濟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부분적인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독립채산제라든가 농촌에서의 自由市場 許容, 도시의 常設市場 許容, 그리고 잘 알려진 바와같이 합영법의 제정과 외국과의 合作事業등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든 관료주의의 병

폐를 지적하면서, 대중의 정치참여를 강조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우당으로 알려진 衛星政黨을 活性化하려 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개혁, 개방”은 北韓體制의 강화를 위한 것이며, 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킨다는 입장에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개선책에 불과한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IV. 北韓體制的 變化要因과 變化 可能性

北韓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北韓體制的 變化를 “강요”하는 요인으로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냉전질서의 붕괴와 사회주의국가들의 對韓半島政策 變化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경제적 침체와 증가하는 생활개선욕구,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하는 南北韓 경제적 격차와 軍事的 지출의 압박증대라는 문제가 北韓의 變化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i) 國際的 要因 : 社會主義圈의 대변혁과 더불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냉전질서의 붕괴는 기본적으로 陣營論的인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 北韓의 “主體形 社會主義”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국가들의 변화로 고무된 南韓의 북방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낳게되자 北韓의 위기의식은 “독일식 흡수통합”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을 우려할 만큼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다. 남북총리회담에서의 연형북 北韓總理의 연설이나 그밖에 北韓에서 발간되는 공식문건에서 “먹고 먹히는 식”의 통일을 반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 변화에 대한 北韓의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사실 北韓으로는 헝거리를 비롯하여 동구 社會主義國家들이 앞을 다투어 韓國과의 國交樹立을 함으로써 외교적인 패배와 굴욕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터에 蘇聯마저도 한국과 정식 수교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한반도에 두개의 정부를 인정하고 나서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비록 中國이 아직은 北韓을 의식하여 韓國과의 政治的 關係를 발전시키는 데 약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北韓과의 관계보다도 더 밀접해지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무역대표부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에서 들어난 것처럼, 中國도 조만간 韓國과의 수교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北韓으로서는 외교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서도 기존의 對外政策과 對南政策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들 社會主義國家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韓半島에서 평화와 相互協力の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南北對話를 통하여 쌍방이 교류와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고, 日本, 美國등 서방 세계와의 관계도 正常化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ii) 國內的 要因 : 현재 北韓은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北韓의 지도자들도 이같은 경제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北韓의 경제적 침체는 1970년대이후 계속된 것이며, 그 결과 주민들의 衣, 食, 住 문제도 만족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장기적인 北韓의 경제침체는 주민들의 생활개선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여 체제적 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南北간의 경제적 격차를 더욱 심화함으로써 體制競爭에서 패배한 것이 명백히 들어 날 경우 독일식의 흡수통합이란 사태까지 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北韓의 집권자로서는 이같은 經濟沈滯의 극복을 최대의 당면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經濟問題는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의 구조적 개혁없이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北韓지도자들은 經濟問題의 원인을 자본부족과 기술 낙후에서 갖고 있으며, 이같은 投資支援의 확보와 현대적 과학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인식하고 對外貿易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日本과의 修交協商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고립탈피라는 목적과 함께, 北韓經濟에 긴요한 자본과 기술을 日本으로부터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北韓이 軍事問題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軍備縮小를 강조하고

있는 데에도 경제적인 곤란이란 北韓의 내부사정이 포함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전체 예산의 25%이상의 부담이 되고 있는 군사비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경제적인 投資資源을 확대할 수도 없고 인민생활의 개선을 위한 자원마련도 어렵다는 인식에서 軍備縮小問題를 보다 심각하게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V. 金正日體制와 北韓의 變化可能性

北韓體制的 특징중의 하나는 여타 社會主義國家와는 달리, 오래전 부터 金日成 - 金正日 권력승계문제를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후계자문제에 유달리 대비하고 있는 이유는 부자세습의 부자연성에서 파생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 정권과 政策路線의 안정적 계승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사실, 社會主義國家에서 최고지도자의 교체는 격렬한 權力鬭爭과 政策의 변화를 초래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中國과 蘇聯에서 대개혁운동이 발생한 배경에는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핵심적 權力構造의 변화라는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따라서 金正日體制에로의 권력승계가 北韓의 변화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北韓이 추진하고 있는 金正日體制에로의 권력승계가 北韓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로 양분되어 있다. 우선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金正日의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세력이 '혁명 2세대'로서 주로 기술관료와 젊은 세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냉전시대의 '혁명 1세대'보다는 현실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金日成과 같은 카리스마가 없는 金正日是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중들의 물질적 욕구'와 '民主化'에의 기대를 어느 정도 실현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대내적인 '經濟改革'을 포함하여 정치과정의 부분적인 民主化를 시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金正日에로의 권력승계가 社會主義圈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변화의 촉발요인'보다는 '억제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측면도

강하다. 왜냐 하면 현재 北韓은 社會主義圈 改革과 民主化 요구로 인하여 대내외적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韓國政府의 北方, 統一政策의 공세로 독일식의 흡수통합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식할 만큼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담한 政策轉換을 시도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金正日의 중요한 정통성 근거가 주체사상의 계승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金日成의 주체사상을 弱화시킬 수도 있는 改革政策을 단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권력위기를 자초한다는 점에서도 金正日體制가 기존의 정책과 제도를 바꾸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의 변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권력승계의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金正日體制의 성격을 규명하고 권력승계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심층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여러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면 金日成 - 金正日의 권력세습에 대하여 北韓 社會내부에 불만세력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와같은 反 金日成 - 金正日勢力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폭발적으로 들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를테면 金日成에게 유고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다면, 외세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다든가, 또는 北韓의 國際的, 國內的 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는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과연 金正日政權이 얼마나 지속할 수 있는 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正日에로의 권력승계가 무리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社會는 아직도 강력한 통제사회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말해서 조직적인 反金正日세력이 형성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지난 1956년 반종파투쟁이후 당과 정부내에서 反 金日成세력은 거의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에, 蘇聯이나 中國에서와 같은 改革運動의 전통이 없고, 따라서 대체세력이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란 점, 셋째, 지난 20여년동안 金正日是 당과 정부, 군부내에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강고한 지지세력을 확보함으로써, 이미 권력승계를 기정사실화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사실, 현재의 北韓社會에서 金正日의 권력승계가 좌절된다면 극심한 혼란과 權力鬭爭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배계층으로서 北韓體制의 안정을 위해서도 金正日에 의한 권력승계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金正日體制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金日成이후의 北韓社會를 당분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와같이 北韓社會에서 金正日體制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해서 北韓의 변화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한 것 처럼, 金正日體制의 등장은 단순히 최고 지도자의 교체라는 차원을 넘어서 北韓 지배엘리트의 성격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성향과 리더쉽 스타일등에 있어서 金日成의 北韓과 金正日의 北韓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北韓의 金日成 - 金正日體制는 지배엘리트의 구성에서 보여지듯이 항일투쟁의 경력을 가진 빨치산세대와 해방이후 성장, 교육을 받은 金正日세대의 실무관료들이 과도기적 연합을 구성하고 안정적인 권력승계를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아직도 혁명 1세대가 지배하는 社會主義國家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사상과 政治指導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産業化가 진전되고 사회적 복잡성과 다원성이 증가하면서 사상과 정치중심의 리더쉽보다는 실무적이고 실용적인 리더쉽이 더욱 요구됨에 따라 전문관료집단의 역할이 증대되는 것도 일반적인 경향이고, 이런 점에서 北韓도 예외가 아니다. 따

라서 金正日體制는 점점 더 이같은 실무관료에 의존하면서 北韓社會의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金正日體制의 北韓에서는 제한적이거나 개혁과 개방을 실현하고 南韓과의 平和共存을 받아들이면서 北韓의 체제적, 정권적 안정과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VI. 南北韓의 爭點과 展望

현재 南北韓間의 주요 爭點이 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 이를테면 정치, 軍事問題와 남북교류의 문제들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대결의 논리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상호불신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은 세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불신과 대결의식은 지난 40여년의 냉전질서가 낳은 유산이라는 견지에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문제는 이같은 冷戰的 秩序가 와해되면서 점차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 우리는 21세기 의 韓半島에서 새로운 평화질서를 구축토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i)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北韓의 軍縮提案은 과거와 같이 선전적인 성격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北韓 내부의 경제적 침체와 관련하여 점차로 절박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軍縮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양편의 軍縮提案을 면밀히 검토하면 상호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現實的이고 효과적인 군축을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어느정도 성과를 볼 수 있다. 유럽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군축이 없이 平和共存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군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韓半島에서 平和秩序를 구축하는 데 必要하다고 하겠다.

(ii) 韓國의 北方政策은 社會主義圈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상당한 성과를 산출하였다. 북방정책의 성과로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가지게 되어 獨逸의 統一을 보고는 마치 北韓이 東獨과 같이 하루아침에 붕괴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기도 하지만 北韓과 東獨의 차

이만큼, 南韓과 西獨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北韓體制는 어느정도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北韓에서 革命的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하겠다. 비록 北韓이 蘇聯을 비롯한 東歐國家와도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蘇聯과 헝가리를 제외한 다른 동구 국가들은 앞으로도 北韓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北韓의 완전 고립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北韓의 고립화와 北韓의 붕괴유도라는 저의를 가지기 보다는 北韓과의 平和共存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iii) 北韓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北韓의 어떤 변화를 원하고 있는가를 먼저 밝힐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 본다면, 北韓에서 루마니아식의 暴力的 變化가 반드시 統一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北韓에서 蘇聯式 페레스트로이카가 진행됨으로써 北韓의 사회주의도 보다 인간의 얼굴을 더 많이 가진 社會主義로 변모하고, 南韓 역시 民主化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이 그와같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北韓에 개혁적인 엘리트가 등장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北韓이 安保的 危機와 긴장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대북자세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여러가지 채널로서 北韓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北韓의 改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第2章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視角과 北韓의 反應

— 金江寧 (仁川大 教授)

I. 序 論	23
II.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視角	25
1. 社會主義圈의 變化를 보는 視角	25
2. 社會主義圈의 變化의 實態	29
3. 社會主義圈의 變化의 進行段階 및 促進要因	37
III.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北韓의 反應	43
1. 北韓體制의 特性	43
2. 北韓의 對內的 反應	45
3. 北韓의 對外的 反應	51
IV.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實態와 展望	57
1.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實態	57
2.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展望	61
V. 結 論	67

I. 序 論

최근 國際政治는 그 어느때보다도 많은 變化가 일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變化는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圈의 變化이다¹⁾. 우선 蘇聯에서는 1985年 3月 고르바초프가 書記長에 취임한 이래 政治外交, 經濟, 社會, 文化 등의 여러분야에 있어서 改革과 開放이 추진되어 왔다. 1917年 10月 볼셰비키革命에 이은 「제2의 러시아 革命」에 비유되는²⁾이 개혁과 개방이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이제까지 취해진 조치들만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變化를 유발시켰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蘇聯의 變化는 어느 地域보다도 東歐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었고 또한 다른 社會主義圈의 國家는 물론 國際秩序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戰後 衛星化過程을 통해 소련의 세력권으로 편입된 東歐 社會主義諸國에서는 개혁과 개방 그리고 脫蘇運動이 거세게 일고 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 시작된 民主化改革의 거대한 물결은 2차대전후 세계질서를 상징해온 베를린 장벽의 철쇄(89.11.19)와 동구공산정권의 최후의 보루로 간주된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독재정권의 비극적 몰락에 이르기까지 1년도 채 못되는 기간동안에 동구전역을 뒤덮었다. 이러한 동구 변혁은 그것이 함축하는 의의, 속도와 진폭,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 가히 혁명적, 세기적, 세계적이라 할만하다. 또한

註 1) 最近의 美·蘇, 中·蘇關係 새로운 變化와 관련된 論文으로는 李崗石“美·蘇 軍縮協商의 展望”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研究」 제1권2호(1989년 여름호) pp.230-259; 鄭千九, “中·蘇關係의 變化와 東北亞地域體系”, 國土統一院, 앞의 책, pp.260-294참조.

2) 김학준, “최근 공산권의 변화의 맥락에서 본 남북한관계의 장래”, 韓國理念教育教授協議會, 「共產圈의 變化와 韓半島의 統一展望」, 1990년 春季地域學術大會 論文集, pp.11-12;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Harper & Row Publishers, New York ; 1987), p 49.

이러한 蘇聯 및 東歐의 大變革은 아시아의 몽고, 중동의 남예멘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蘇聯을 위시한 社會主義圈의 變化는 알타체제(냉전체제, 이념적 대립과 충돌의 체제, 양극체제)에서 몰타체제(화해와 교류의 체제, 상호 이해와 다원적 가치의 체제)로의 전환 즉 脫冷戰 내지 신데팡뜨 시대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또한 역으로 社會主義圈의 自由의 결핍과 經濟沈滯, 인간의 삶의 질의 저하라는 참담한 현상이 社會主義에 대한 새로운 조명과 반성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으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와의 공존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후 세계인의 의식과 國家間의 行動儀式을 지배해 온 냉전적 대결구조의 청산과 동시에 탈사회주의화 및 民主化 革命으로 특징 지워지는 蘇聯·東歐의 大變革은 정부가 7.7선언이후 구체적으로 추진해 온 北方政策과 맞물려³⁾ 東歐圈을 포함한 社會主義國家들과의 修交러시를 이루었고 역사적인 6.4 韓·蘇 頂上會談이 이루어져 韓蘇修交가 연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의 아시아 社會主義國家들과 쿠바 등 다른 지역의 社會主義國家들은 여전히 맑스·레닌주의를 신봉하면서 전통적인 사회주의체제의 고수를 선언하고 있고, 前述한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새로운 國際秩序의 형성에도 불구하고 南北韓間에는 아직도 冷戰的 對決構造가 존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시점에서 社會主義圈의 變化의 向方 및 이러한 變化에 北韓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고 北韓이 體制의 改革·開放化를 과연 어떻게 추구하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

註 3) 한국은 7.7 宣言 및 10.7 經濟發展措置, 10.20 민족대교류선언 등을 통해 이제 名分보다 實利를, 北韓의 孤立化 追求보다는 국제무대로의 誘引을, 雙方的 相互措置의 要求보다는 一方的 措置의 斷行 등 보다 적극적인 협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논문은 最近에 전개되고 있는 社會主義圈의 變化의 實態 및 方向을 먼저 개략적으로 고찰한 후 북한체제의 특성과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反應實態를 분석하고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實態와 展望 및 北韓의 開放化를 위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視角

1. 社會主義圈의 變化를 보는 視角

最近의 蘇聯·東歐圈의 改革의 성격 및 방향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시각은 「收斂論的 視角」, 「共產主義 崩壞論的 視角」, 「새로운 全體主義로의 展望論的 視角」 등으로 分類해볼 수 있다.

1) 收斂論的 視角-民主社會主義로의 接近

도이처(I. Deutscher), 두베르저(M. Duverger), 사하로프(A. D. Sakharov) 등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自由民主體制(資本主義體制)와 共產主義體制(社會主義體制)의 接近方向이 예를 들면 스웨덴의 체제와 유사한 모델인 民主社會主義(democratic socialism)體制로 수렴될 것이라고 예단한 바 있다.⁴⁾ 두베르저의 표현을 빌린다면 東西 兩體制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전반적인 정부권력의 증대로 인해 정치적 갈등은 감소하고 사회적 및 정치적 통합이 증대

註 4) Alfred G.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Cha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336-337.

가 우리에게 있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논문은 最近에 전개되고 있는 社會主義圈의 變化의 實態 및 方向을 먼저 개략적으로 고찰한 후 북한체제의 특성과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한 反應實態를 분석하고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實態와 展望 및 北韓의 開放化를 위한 우리의 자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視角

1. 社會主義圈의 變化를 보는 視角

最近의 蘇聯·東歐圈의 改革의 성격 및 방향과 관련해서 제기되는 시각은 「收斂論的 視角」, 「共產主義 崩壞論的 視角」, 「새로운 全體主義로의 展望論的 視角」 등으로 分類해볼 수 있다.

1) 收斂論的 視角-民主社會主義로의 接近

도이처(I. Deutscher), 두베르저(M. Duverger), 사하로프(A. D. Sakharov) 등은 미국과 소련으로 대표되는 自由民主體制(資本主義體制)와 共產主義體制(社會主義體制)의 接近方向이 예를 들면 스웨덴의 체제와 유사한 모델인 民主社會主義(democratic socialism)體制로 수렴될 것이라고 예단한 바 있다.⁴⁾ 두베르저의 표현을 빌린다면 東西 兩體制는 기술적 발전에 따른 전반적인 정부권력의 증대로 인해 정치적 갈등은 감소하고 사회적 및 정치적 통합이 증대

註 4) Alfred G. Meyer, "Theories of Convergence," Chalmers Johnson(ed.), Change in Communist System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p. 336-337.

되며, “蘇聯은 自由化되고 美國은 社會主義化되어 東西 양대사회가 民主社會主義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다.⁵⁾

다시 말해서 기술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美國·西歐에서는 정치적으로 中央集權化와 사회통제의 강화쪽으로 변화되고, 경제적으로 國有化·計劃化 쪽으로 변화하며, 蘇聯·東歐에서는 정치적으로 分權化·自由化 쪽으로 변화되고 經濟的으로 私有化·市場化쪽으로 변화하여 양측이 유사해지고 결국에는 美·蘇 및 西歐·東歐가 모두 民主社會主義體制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요컨대 東·西體制가 民主社會主義로 접근하게 된다는 收斂論은 兩體制가 서로의 長點을 도입하고 수용하게 됨으로써 歷史가 필연적으로 합리성·관용·자유·인권·복지 등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쪽으로 발전해간다는 樂觀的 史觀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最近에 추진되어온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 改革, 再編) 및 「인간의 얼굴을 한 民主的 社會主義」 그리고 社會主義圈의 政治經濟改革(分權化, 自由化, 私有化, 市場化 등의 조치)을 「民主社會主義로의 接近」이라는 收斂論的 視角에서 分析·展望하는 이론들이 最近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關係해서 종종 거론되고 있다.⁶⁾

2) 共產主義 崩壞論的 視角

最近의 社會主義圈의 變革, 특히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성격 및 향방을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의 붕괴론 및 종말론이

註 5) Duverger, Introduction a la politique, p.379 ; Alfred G.meyor, op. cit., p.322에서 재인용.

6) 梁東安, 「韓國의 政治現實」(서울:三和出版社, 1989) pp. 407-408 ; 金江寧, “收斂理論의 觀點에서 본 東西體制의 接近可能性” 「東西體制의 接近과 未來社會, 仁川大 平和統一研究所主權 學術세미나(1990. 4. 4) 發表論文, pp.19-37 ; 金江寧, “收斂理論의 問題點과 適用問題, 민병천편 「전환기의 統一問題」 pp.34-65 ; 金 雄, “收斂理論과 中·蘇의 開放政策,” 弘益大 이데올로기 批判研究所編, 「産業社會와 이데올로기」(서울:1987) pp.164-173 참조.

나오고 있다.

「共產主義 崩壞論」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學者로서는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Zbigniew Brzezinski), 밀로반 질라스(M. Gilas), 方勵之, 후쿠야마 등을 들 수 있다.

브레진스키는 공산주의의 생명력에 대한 미사려구에도 불구하고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 : 開放, 資料公開)가 성공하기 보다는 다음 4가지 대안 결과 중의 하나로 귀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i) 경제문제와 소수민족문제를 수반한 체제위기의 장기화, ii) 사회적 소요의 평정 및 정치경제의 침체속에서의 과거 러시아 中央集權的 傳統의 소생, iii) 軍部나 KGB에 의한 쿠데타 발발가능성 iv) 장기적인 위기속에서의 공산주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안은 첫번째 ‘길고도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위기’로 이것은 점차 침체시기로 이어지면서 결국 소련과 세계공산주의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⁷⁾ 또한 그의 著書 「대실패」(The Grand Failure)에서 “소련 공산주의 체제의 운명적인 딜레마는 정치적 안정을 대가로 치르고서만이 경제적 성공을 이룩할 수 있고, 소련의 政治的 安定은 經濟的 失敗下에서 유지된다는 데 있다”고 지적하여 페레스트로이카 실패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⁸⁾ 또한 뉴욕타임즈지에 기고한 글에서 “어쨌든 우리 모두는 정말로 기념비적인 역사의 한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피를 흘렸고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사회적 실험(공산주의 혁명)을 가능케 했던 한 교리(이데올로기)가 서서히 사그라지는 그 마지막 고통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⁹⁾

註 7)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소련제국은 自滅할 것인가?”〈뉴욕타임즈 일요판 1989년 2월 26일자〉, 문명호 편역, 「공산주의는 끝나는가」 (서울 : 東亞日報社, 1989) pp.37-38.

8)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명순희 옮김, 「대실패」 (서울 : 을유문화사, 1989) p.127.

9) New York Times 1989. 2. 26.

질라스는 “고르바초프에 의해 스탈린주의는 사실상 종말을 고했으며, 레닌주의도 동구변혁의 진전으로 역사무대에서 퇴장될 운명을 맞고 있다…맑스는 위대한 정치사상가의 한사람으로 남겠지만 단지 학문적 탐구대상으로 존속될 것이다”라고 예단하고 있다.¹⁰⁾

上海 學生運動의 知的 지도자 方勵之는 中國共產黨에서 축출당하기 전에 행한 연설에서 “社會主義는 퇴조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시대에서 성공을 거두어 온 社會主義國家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속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경제의 모순을 지적하여 공산주의 국가에 시장경제와 사기업 도입시키는 일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곧 自由에 이르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다.¹¹⁾ 또한 일본의 후쿠야마 교수는 National Interest 紙 여름호에서 공산주의 종말론을 내세워 반대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¹²⁾ 最近의 社會主義圈의 變革과 關係해서 「종말론적 위기」, 「붕괴론」을 주장하는 것은 현단계에서는 무리가 있고,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된다.

3) 새로운 全體主義로의 發展論的 視角

이러한 視角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주의국가들이 改革을 추진하게 되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전체주의의 형태로 되돌아 가게 된다는 시각이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東歐의 개혁에 대한 西方의 지원과 원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점은 蘇聯·東歐圈의 改革의 失敗로 또 다시 새로운 전체주의의 형태로 되돌아 가게 된다면 西方側에게는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註 10) 朝鮮日報 1990年 2月 15日字 5面.

11) 문명호 편역, 앞의 책, pp. 49-50, p.212.

12) 金 應의(좌담회) “社會主義는 과연 붕괴하는가” 「月刊 朝鮮」 1990年 2月號(통권 제119호) p. 332.

다른 하나는, 蘇聯·東歐圈의 改革의 成敗는 論外로 하고, 이러한 社會主義圈의 變革이란 이른바 그들이 표방하는 「인간의 얼굴을 가진 민주적인 社會主義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의 공산주의체제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한 體制內的 變化로 보는 視角이다. 蘇聯·東歐圈의 改革 指導者들의 立場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社會主義圈의 變化는 단순히 체제내적 변화로만 이해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맑스와 레닌이 결코 예측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政治·社會體制로의 變化를 예고하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¹³⁾

2. 社會主義圈의 變化의 實態

우선 蘇聯의 경우, 1985년 3월 서기장에 선출된 뒤 몇 주후 고르바초프가 처음 내세운 슬로건은 우스꼬레니에(Uskorenie : 促進, 加速化)라는 것이었다. 나라의 社會經濟發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건, 아니면 거둬진 정체상태로 위기에 직면한 경제생활을 구출하기 위해서이건 고르바초프 서기장의 개혁정책이 經濟의 페레스트로이카로부터 시작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 경제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뒷받침하기 위해 政治, 社會, 文化, 外交 등의 분야에서 글라스노스트와 데모크라찌아(Demokratia : 民主化), 노보에뮤슬레니에(New political thinking : 신사고)라는 이른바 상구조의 페레스트로이카가 동원 되었다.¹⁴⁾

註 13) 鄭千九, “共產圈의 變化: 그 要因과 趨勢 및 展望,” 韓國國民倫理學會, 「統一의 展望과 共產圈의 變化」 1989년도 한국국민윤리학회 학술세미나 논문, pp.14-15.

14) Mikhail Gorbachev, op.cit.; 奇連洙, “페레스트로이카의 實際와 展望” 國土統一院, 「統一問題의 研究」 第2卷 1號(通卷 第5號) 1990년 봄호, p. 12.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1990년도 신년사 및 6월 27일 발표된 당 강령 초안(제28차 당대회기간중 발표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모든 페레스트로이카의 최종목표를 고르바초프는 “사회발전의 중심에 人間을 두는 인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주의 또한 自由와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의 건설”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고르바초프가 이러한 목표를 내세우기까지 대내적으로는 물론 동구의 大變革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몰고온 페레스트로이카는 앞서 열거한 그동안 크고 작은 여러가지 목표들을 내세우면서 전략·전술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다.¹⁵⁾ 즉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스탈린, 후르시초프, 브레즈네프 시대를 거치면서 강요된 平等主義와 빈곤의 평등위에 누적되어 온 소련의 동맥경화적 대내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일련의 果敢한 改革을 시도해 왔다.¹⁶⁾ 금년들이 취해진 정치·경제개혁조치로서 주요한 것을 든다면,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에서의 一黨獨裁廢棄決議 및 대통령제 도입채택(90. 2. 5)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대통령 선출(3.12), 土地私有法의 제정(90. 2. 28) 및 私有財産 許容法의 제정(90. 3. 7)을 들 수 있다.

중국의 경우, 鄧小平의 등장과 더불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혁명적인 변화를 보여 주었다. 덩소평은 이른바 ‘고양이 이론’(不管是白描黑描能捉老鼠的是好描)을 내걸고 새로운 변신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중앙위 전체회의를 계기로 그의 실용주의 노선은 ‘제2의 중국혁명’으로 세인의 주목을 집중시켰다.¹⁶⁾ 그러나 그후 정치제도상의 分權化作業着手, 경제특구의 지정, 지역대표의 경선제 채택 시장경제원리의 도입등의

註 15) 奇連洙, 앞의글, p.10.

16) 張公子, “中國의 民主化運動과 改革路線의 向方” 「統一問題研究」, 第2卷 1號, 1990 봄호, pp.46-47.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 및 “중국적 사회주의”를 내세워 중국의 개혁은 경제부문에서의 개혁이 중심이며 이에 필요한 한에서만 기타부문의 개혁이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¹⁷⁾ 90년 3월 12일 폐막된 제13기 중앙위 제6차전체회의에서 결의된 요지는 i) 개혁·개방정책 계속 추진, ii) 社會主義 固守 재확인, iii) 중도파 기용 대외관계개선 모색, iv) 天安門서 잃은 신뢰의 회복에 노력 등이다¹⁸⁾.

東歐圈에 있어서 폴란드의 경우, 노동자 중심의 自由化運動인 포즈나니暴動(56.6)이후 복수후보제 실시(1957.1) 고물카에 이은 기예레크정권하에서의 經濟改革실시(69-70)와 경제침체의 심화, 야루젤스키정권의 自由勞組(Solidarity)의 개혁운동진압(81.12) 등과 같은 政治經濟改革이 있었지만 좌절되었고¹⁹⁾, 또다시 民主化改革運動이 재등장하게 된 것은 88년 중반 이후이다.

고르바초프의 改革政策과 소련의 지원 내지 압력으로 88년 6-12월 사이에 보수파인사의 해임 및 개혁파세력의 등용, 복수후보제 비밀선거 등의 정치개혁이 추진되었다. 그후 89년 1월에는 複數 勞組와 複數 政黨制의 합법화가 이룩되었고 새제도에 의한 6월 總選에서 공산당이 패배하고 自由勞組가 승리함으로써 社會主義圈에서 최초로 비공산정부인 자유노조 주도하의 마조비에츠키내각이 출범하여 정치·경제개혁을 통한 民主化 自由化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반소폭동(56.10),²⁰⁾ 스탈린주의와의 결별선언(1962), 복수

註 17) 千光遠, “社會主義 初級段階의 經濟” 「中國社會科學」 第3期(1987) pp. 73-88 참조.

18) 민주문화아카데미, 「주간 이데아」 제1권 1호(1990. 3. 24)p.4 참조.

19) 安啓春, “東歐諸國의 勞動者階級” 金達中外 「東歐政治·經濟·社會論」(서울: 博英社, 1985), pp. 147-154; 金學俊·金寅永共著, 「蘇聯 및 東歐共產主義」(서울: 서울대출판부, 1984) pp. 197-204 참조.

20) 헝가리의 반소폭동에 관해서는 Noel Barber, Seven Days of Freedom: The Hungarian Uprising, 1956(N.Y.: Stein and Day, 1974) 참조.

입후보제 총선 실시(67.3) 등의 일부 정치개혁이 추진되었지만, 본격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된 것은 1968년부터이다. 기업의 자주성과 이윤추구의 용인, 시장원리 등을 골자로 하는 新經濟改革(New Economic Mechanism)은 여타 동구제국과는 달리, 경제이외의 사회문화부문에 도 영향을 미쳤고 전반적으로 진전을 보였지만²¹⁾ 80년대 중반 이후 기술개발의 정체, 수출부진, 외채가증 등으로 근본적인 經濟改革을 위해서는 政治改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게 되었다. 88년 이후 정치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치에서의 민주화 작업이 가일층 확대추진되었다.

그 후 89년 2월 複數政黨制가 합법화되었고, 헝가리 공산당은 10월 7일에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민주사회주의로의 이행”을 당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자유선거에 의한 다당제 헌정국가가 될 것임을 규정한 신강령을 채택하는 새로운 헝가리 社會黨을 결성했다. 이어서 89년 10월 18일 맑스·레닌주의 정당의 지도적 역할의 삭제, 시장경제원리 도입과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民主社會主義, 3권분립에 기초한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절충형 등을 골자로 하는 헌법을 채택하고 헝가리 공화국(Hungarian Republic)으로 國名을 변경했다²²⁾. 그 후 90년 3월과 4월에 걸쳐 실시된 자유총선거에서 민주포럼이 사회당(구 공산당)에게 압승을 거둔 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東歐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이고 역사적인 대변혁이 일어난 국가는 東獨이다. 東獨의 自由化運動이 처음 대두하게 된 것은 1953년 베를린 폭동이며 결국 폭동은 무자비한 소련군의 탄압으로 끝이났고 1961년 베를린 장벽이

註 21) Richard F. Staar, Communist Regimes in Eastern Europe, 3rd. ed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77) p.119.

22) 朴正洙, “東유럽 대변혁의 의미와 파급영향”, 『共產圈 研究』 1990년 1월호(서울: 極東問題研究所) pp.24-25; 자유평론사 편집부 편저, 『동구권 국가의 변혁과 갈등』(서울: 자유평론사, 1989) pp.134-135; 本人의 拙稿 “東歐變化와 北韓의 開放化” 韓國理念教育教授協議會, 앞의 책, pp. 182-183 참조.

설치될 때까지 大量移民이 속출하였다. 그후 이념적으로도 동독은 소련노선을 추구하고 독자적인 노선추구는 억압되었다. 그후 1968년 이념보다는 편의나 이익에 초점을 둔 소련의 리베르만(Yevsei Liberman)의 收益性 개념이 경제정책에 적용된 신경제체제(New Economic System)가 채택되어²³⁾ 서방세계 수준에는 미달하지만 동구에서는 소련 다음가는 경제력을 지니게 되었다²⁴⁾. 그러나 70년대 말부터 경제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개혁을 하기에는 소련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고, 1974년 헌법수정에 소련의 변함없는 盟邦임을 삽입할 정도로 소련블록에의 충성을 다진 국가가 동독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후 동독의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된 시기는 1989년 9월 批判的 在野團體 노이에스 포럼(Neues Forum)이 발족한 이후이다. 동독시민의 대량탈출과 국내반정시위의 확산으로 호네커와 크렌츠 서기장이 물러나게 되고 89년 11월 9일에는 냉전시대의 상징적 유물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그후 정치국과 중앙위원회의 폐지(12.9), 공산당의 사회민주당으로의 당명변경(12. 16), 복수정당제 승인등 일련의 개혁조치가 취해졌다. 그후 90년 3월 18일 자유총선거에서 기민당을 주축으로한 「독일연합」이 사민당(구 共產黨)에 압승을 거두고 로타르 드메지가 총리로 선출되어 연립정부가 구성된 후 동서독의 統獨論議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동서독은 7월 1일에 역사적인 經濟貨幣統合이 실현되고 국경개방 自由往來가 이루어짐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²⁵⁾

註 23) Richard F. Staar, op. cit., p. 98.

24) Robert Wesson, Communism and Communist System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Inc., 1978), p. 150.

25) 또한 통일후 NATO군에 잔류하고, 7월 17일 「2+4회담」에서 폴란드와의 기존국경(오데르·나이세線)을 인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외부문제까지도 사실상 해결되어 「12월 독일통일」이 기정사실화됐다.

체코의 경우에도 50년대 소련의 스탈린 비판운동에, 이은 헝가리사태, 폴란드 폭동 등의 물결이 밀어 닦쳤으나 이를 잘 극복해 나갔다. 그러나 6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東歐各國의 경제개혁 실시의 불가피성, 억압된 국민의 자유화에 대한 욕구가 일시에 분출되어 나오게 된 것이 이른바 1968년 1월의 「프라하의 봄」이라는 民主化運動이다. 이를 계기로 개혁파의 기수 두브체크 당제1서기가 노보트니 후임으로 임명되어 “人間的 얼굴을 가진 社會主義”라는 슬로건을 내걸고²⁶⁾ 정치·경제개혁정책을 추진하려 했지만 소련에 의해 무차별 진압되었고 이후 등장한 후사크 집권기간의 20여년동안 冬眠期에 접어 들었다.

체코국민의 민주화운동에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1989년 동독의 大變革이었다. 「시민포럼」 조직, 반정시위의 확산으로 11월에는 대폭적인 인사쇄신의 단행, 공산당 지도적 역할조향삭제, 자유선거등의 개혁조치가 취해졌다. 12월에는 동유럽에서 폴란드에 이어 두번째로 非共產聯立政府가 출범했고, 90년 6월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하벨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좌파인 「시민포럼」이 壓勝을 거두었고 공산당은 2위에 머물렀다. 현재 하벨 대통령은 체코가 시장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당면한 經濟難局을 타개해야 하는 과제와 민족주의문제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개혁에 착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가리아는 소련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동시에 소련의 영향력이 강하게 미치는 나라로서 불가리아의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소련과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해 왔다. 테러정치가 행해지기도 했지만 1972년에는 生活與件 향상을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가 취해졌고 1979년에는 헝가리를 모방하여 농업부문에 新經濟政策(New Economic Mechanism)을 도입하여 경제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시

註 26) 김학준, 앞의 글 P.23.

도가 이루어졌다²⁷⁾. 그러나 본격적인 정치·경제개혁의 움직임이 나오게 된 것은 1989년말이다. 전반적인 경제부진 현상의 심화와 함께 改革派를 중심으로 反지브코프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자, 베를린 장벽붕괴후 지브코프가 사임했고, 친소 穩健改革派인 블라데노프가 신임 서기장에 취임했다. 그후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시위가 지속되면서, 공산당 독점조항 폐기, 多黨制 도입,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체제의 도입이 선언되었다. 금년 6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사회당(구 共產黨)이 승리를 차지했지만, 점차적으로 정치·경제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마니아의 전후 지도층은 소련의 感情을 살피가면서 경제·문화정책뿐만 아니라 외교·국방정책에 있어서도 독자노선을 추구해왔다. 1965년 기오르기 우데즈의 사망으로 서기장이 된 차우세스쿠(Ceausescu)는 자주노선을 답습하여 국내적으로는 중공업을 중시하는 산업정책을 강행하고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억압정책을 써왔다.²⁸⁾ 그러나 작년 12월 25일 민중봉기에 의해 차우세스쿠 독재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세인을 크게 놀라게 했다. 그후 90년 5월 20일 총선에서 급격한 붕괴로 인한 시민세력의 조직미비로 前공산당원이 다수 포함된 구국전선이 압승을 거두고 일리에스쿠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후 점진적으로 정치·경제개혁에 착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동맹국인 유고는 이미 改革의 영향권안에 들어와 있으며 상당한 政治·經濟的 改革이 진행중에 있지만 극심한 民族紛糾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²⁹⁾

그간 동유럽을 휩쓴 개혁의 물결속에서도 고립폐쇄정책으로 일관해온 알바

註 27) NEM을 정책결정의 분권화, 국영기업의 책임, 자력운영능력이 없는 經濟組織들에 대한 점진적인 보조금 지불정지등을 강조하고 있다. 「Political Handbook of the World」, 1981(N.Y. : McGraw-Hill Book Company, 1981), p. 99.

28) 金學俊. 全寅永, 앞의책, pp. 205-206.

29) 유고의 民放紛糾에 관해서는 Richard F. Staar, op.cit., pp. 180-181; Political Handbook of the World; 1981, op.cit. p. 549참조.

나아도 조금씩 개혁조짐을 보이고 있다. 라마즈 알리아 제1서기의 대외적 開放·改革政策의 표방(90.4.11), 알바니아 개혁법안 통과(90.5.9) 경제자유화 수용의사 표명, 소규모의 반정시위 및 반체제인사들의 망명 등이 바로 그러한 조짐인데, 현재 알바니아는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이 이를 타개해 나가기 위해 改革政策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몽고는 지난 3월 23일 지난 66년간 계속되어온 共產黨 一黨獨裁를 정식으로 폐지하고 複數後補에 의한 선거를 승인함으로써 새로운 민주시대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그후 4월14일 인민혁명당(공산당)은 새로운 당헌과 강령을 채택, 共產主義란 단어를 당헌에서 삭제하고 「民主的인 人本的 社會主義」의 건설을 신당강령으로 명시하는 등 일련의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전술한 사회주의권 국가들 이외에도 쿠바, 베트남, 아프리카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있어서도 조금씩 改革開放에 착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蘇聯 및 東歐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국의 개혁실태를 종합해 볼 때, 변화의 성격과 방향은 자본주의의 市場經濟 原理의 도입을 통한 중앙집권적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의 修正 및 補完, 복수정당제 및 자유경진제 등 多元主義的 政治方式을 통한 市民的 利益의 제도화와 일당통치제도의 종식, 서방국가에 대한 개방정책을 통한 진영내 폐쇄경제체제의 탈피, 그리고 공산당 및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대등한 주권행사를 통한 國家의 自律性 增大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경제의 민주화(분권화, 자유화, 사유화, 시장화)를 위한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의 進路를 현 단계에서 조명해 본다면, 明暗이 교차하고 肯定·否定의 시각에서 제각기 합리성과 논거를 제시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대변혁 이전의 과거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가정은 현재로서는 상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변혁은 이제 돌이킬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며 현시대의 대세라고 볼 수 있다. 社

會主義圈의 變革은 물론 内部的 變數와 주변의 外部的 環境要因이 그때 그때마다 걸림돌로 작용하여 변혁의 내용과 速度를 조절내지 制限을 가할 것 이지만, 스탈린·브레즈네프적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체제를 확립 한다는 점에서 모든 개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국가들이 共同의 理解를 같이 하는 前向的 자세를 보이면서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다.³⁰⁾

3. 社會主義圈의 變化의 進行段階 및 促進要因

社會主義諸國 특히 東歐의 先行的 改革과 開放政策의 進行段階를 보면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몇 段階를 거쳐 발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各 段階에서는 改革과 開放 또는 開放과 改革이라는 두개의 정책이 일정한 時差를 두고 병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리고 제1단계에 있어서는 經濟改革이 先行的으로 실시되지만 제2단계에서는 政治改革이 必然的으로 뒤 따라야 하며, 제3단계에서는 政治改革이 주도하여 經濟改革의 結實을 맺게 되는 것이다.³¹⁾

<표 2-1> 改革과 開放의 進行段階(先行的 東歐의 경우)

段 階	時 期	進 行 過 程
第 1 段階	60年代 후반	經濟沈滯持續 借款導入型 開放
	70年代 초반	體制內的 同質變化 貿易赤字와 外債

註 30) 金江寧, “東歐變化와 北韓의 開放化” 앞의글 pp.188-189; 朴正洙, “東유럽 大變혁의 의미와 外債영향, 「共產圈 研究」 1990年 2月號 pp.36-40 참조.

31) 辛昇哲, “南北韓間의 經濟交流와 協力增進의 基本方向,” 國土統一院, 「東北亞經濟圈과 南北韓 經濟協力에 관한 研究」(서울: 國土統一院, 1989) p.90; 辛昇哲, “比較統制體制面에서 본 制度變動의 推移”, 「經濟研究」, 漢陽大學校, 1988, p.92참조.

段 階	時 期	進 行 過 程
第 2 段階	70年代 후반	投資誘致型 開放 體制內的 異質變化
	80年代 초반	成果不振 政治體制的 限界
第 3 段階	80年代 후반	政治改革 經濟改革
	90年代 현재	非共產政權 市場社會主義 (體制外的 異質變化) 民主社會主義

出處：辛昇哲, “南北韓間的 經濟交流과 協力增進의 基本方向” 國土統一院編, 「東北亞經濟圈과 南北韓 經濟協力에 관한 研究」(서울：國土統一院, 1989)를 다소 수정하여 작성.

社會主義의 모든 改革은 위로부터의 改革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執權改革派가 主導하게 되며 이들은 反對保守派나 強硬改革派 등을 견제하거나 흡수할 수 있는 政治的 黨內改革을 스스로 단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1단계에서 「테크노크라트」형 改革(Technocratic Reform)으로서 體制的 基本理念과 基本原理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矛盾點만을 修正補完하는 改革을 뜻하는 體制內的 同質變化가 추진된다.

그러나 第2段階의 體制內的 異質變化 즉 體制的 基本理念은 그대로 固守하면서 基本原理의 一部만을 다른 體制的 原理를 도입하여 변질시킴으로써 다른 體制와 더불어 收斂化되어 가는 改革이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는, 밑으로부터의 改革에 대한 加速化 要求나 政治的 民主化的 促求示威가 분출하게 된다³²⁾. 最近 東歐圈의 保守派 國家에서 일어나고 있는 民衆示威는 곧

註 32) 그러나 이러한 東歐改革의 進行過程에서 특히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신사코가 東歐改革의 環境變數로서 커다란 觸媒役割을 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밑으로부터의 改革이며 改革派가 주도하는 國家에서의 政治的 改革도 일종의 밑으로부터의 改革이라고 할 수 있다.

社會主義體制를 채택한 蘇聯, 中國 및 東歐諸國은 初期에는 比較的 높은 성장을 순조롭게 달성하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成長은 鈍化하고 또다른 형태의 長期停滯 또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게 되었다. 말하자면 誘因不在(non-incentive)로 인한 硬直性(rigidity)과 非效率性(inefficiency)이 만연하게 됨으로써 計劃의 실패(plan failure)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經濟成長鈍化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됨으로써 야기되는 經濟的 危機를 느끼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經濟改革이 試圖되어 왔다.

대부분의 社會主義國家는 1950年代 후반에 진입하면서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고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개혁을 착수하였다.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전당대회에서 후르시초프가 Stalin을 비판하고 또한 대외적으로 평화공존을 모색함에 따라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소련을 비롯한 東歐諸國들이 脫스탈린화를 시도하는 한편 자본주의적 경제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려는 경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對症療法的인 改革으로서는 多元的인 源泉의 誤謬를 근본적으로 治癒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침체는 해소될 수가 없었다. 따라서 體制內的 同質變化에 뒤이어 西方世界の 資本과 技術을 도입하기 위한 開放政策이 실행되기에 이른다.³³⁾

그러나 初步的인 外資導入方式이 輸出增大政策과 관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貿易赤字와 外債의 累增現象만을 초래하였고 그후 投資誘致型 開放政策도 그 實效性이 별로 없었다. 이와 같이 第2段階의 改革은 投資開放政策으로

註 33) 초기에 차관도입형 개방정책을 채택하는 이유는 임의로 활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外部世界와의 遮斷의 壁을 그대로 보존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辛昇哲, 1989, 앞의 글, p.56, 91참조

부터 시작되었으나 그 成果가 부진하자 유리한 投資環境을 조성하기 위한 體制內的 異質變化가 뒤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體制內的 異質變化라는 經濟改革이 外國人投資라는 開放政策과 더불어 본격화되면서 政治改革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의 總體的 體系란 政治, 經濟, 社會, 文化라는 네개의 下部體制가 平衡的으로 조화를 이룰때 원만하게 발전하게 되므로 어느 하나의 下部體制가 주어진 일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발전하게 되면 나머지 다른 下部體制도 이와 보조를 맞추는 後行的 變革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經濟面에서의 運營權의 分權化나 民間部門의 出現과 보조를 맞추어서 政治面에 있어서도 多黨制에 의한 政治運營의 分權化나 民主化의 出現이 요구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볼때, 改革政策을 일찍부터 추진해온 東歐 특히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유고 등에 있어서는 제2단계의 대내적 경제개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政治改革에 있어서는 다당제에 의한 議會政治가 출현하면서 共產黨一黨獨裁體制가 서서히 붕괴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그 후속조치로서 확대개방정책이 적극적으로 실시될 것이다. 새로 등장하게 될 非共產黨 新政府는 앞으로 對西方 開放과 協力을 적극화하면서 市場社會主義(Market Socialism) 또는 더 나아가 그들중 다수의 國家들이 표방하고 있는 民主社會主義(Democratic Socialism)라는 收斂體制로의 變革을 위한 제3단계의 體制外的 異質變化를 서서히 追求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先經濟改革 後政治改革을 표방하고 있는 中國은 經濟改革과 開放의 성과는 어느 정도 거두고 있으나, 政治改革의 기피로 인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내부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역류현상의 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中國은 정치개혁의 후유증이 두려워 民主化 要求를 무력으로 진압하였으며(89. 6. 4 천안문사태), 강경개혁파를 축출했다. 蘇聯은 強硬保守派와 急進改革派의 相

反된 主張의 交叉속에서 점진적 方法으로 經濟改革과 더불어 政治改革을 처음으로 並行하여 실시해 왔다.³⁴⁾

중국적으로 中國이나 蘇聯의 경우도 最近의 東歐諸國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變身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저절로 변화하는 것은 아님은 말할 나위도 없다. 內的 改革要因과 外的 環境要因의 變數의 結合에 따라서 改革이 빠르게 促進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最近에 확산되기 시작한 社會主義 國家 특히 東歐 社會主義 國家의 體制變化를 낳게 한 要因으로 들 수 있는 것은 본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內部的 직접적인 要因으로서 社會주의 통제적인 계획경제의 한계 또는 모순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체제내적 동질변화 또는 체제내적 경제 개혁의 실패를 들 수 있다. 이러한 體制變化要因 이외의 다른 促進要因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要約해 볼 수 있다.³⁵⁾

첫째, 1985年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이후 蘇聯의 國內外政策이 改革과 開放路線에 입각하여 획기적인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東歐와 관련하여 88년 3월 유고를 방문하여 東歐圈 國家들의 自主路線을 인정하는 宣言을 했고, 1989년 7월에는 바르샤바조약국 정상회담에서 東歐改革不干涉을 선언함으로써 東歐의 民主化和 자율성을 촉진시켰다. 고르바초프의 목인이나 용인이 없었더라면, 과거의 전례로 보아 그렇게 變革이 확산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둘째, 美·蘇間, 東·西間의 활발한 관계개선과 協力關係의 증진으로 말미암아 蘇聯에 대한 東歐 國家들의 政治·軍事, 經濟的인 依存關係가 약화되

註 34) 辛昇哲, 1989, 앞의 글 pp.59-60, pp.92-93 참조.

35) 자유평론사 편집부 편저, 앞의 책, pp. 131-132 : 全正煥, “東歐圈의 變化” 「國際問題」, 通卷 229號(1989.9), p.49.

고 國家利益 中心의 實用主義的인 接近態度를 모색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소련의 군비부담의 누증에 따른 경제침체의 심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동 노력이 크게 작용하여 열리게 된 美蘇間의 신데팡트시대를 맞이하여 東歐의 變革이 가속화된 점을 들 수 있다.

셋째, 美國을 포함한 西方先進國들이 蘇聯 및 東歐에서 民主化 運動을 적극 고무·지원한 점을 들 수 있다. 89년 7월 폴란드와 헝가리를 방문한 바 있는 美國의 부시대통령은 이들 나라의 民主化에 대한 經濟的·外交的 支援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經濟的 危機에 처해 있는 東歐圈 國家들에게는 서방측의 이러한 지원약속이 자신들의 國內問題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원천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最近 7월 10일 7個先進工業國(G7)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에서 蘇改革 支援을 합의한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아직도 東歐地域에는 改革과 開放을 반대하는 保守主義 勢力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東歐 國家들 내에는 改革과 開放을 주도하는 勢力들이 점차로 증대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東歐의 變化를 주도해 나가는 세력들은 대체로 기존의 蘇聯中心體制에서 소외되어 있던 在野團體로서 집중적으로 부상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헝가리의 「민주포럼」, 폴란드의 「自由勞組」, 동독의 「노이에스 포럼」, 그리고 체코의 「77현장」 그룹과 같은 재야단체들이 東歐變化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러한 要因들 이외에도 유고나 루마니아 등의 자주노선, 및 동구의 공산화 이전의 의회정치, 自由化運動 등의 경험과 같은 내부의 정치문화도 간접적으로는 東歐變革을 促進시키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北韓의 反應

1. 北韓體制的 特性

北韓問題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들의 견해에서도 北韓社會를 보는 視角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은 北韓社會가 中國이나 蘇聯 및 東歐社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진 나라라는 데 있다. 또한 반세기 가까이 一人統治와 승배로 일관된 폐쇄적인 전체주의사회가 필연적으로 갖게되는 모순과 문제점들을 짐작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36)

한나라의 국제사회의 變化에 대한 자국의 대내외적인 반응은 어느정도 자국의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나오게 된다는 관점에서 社會主義圈의 變化에 대한 北韓의 反應을 살펴보기에 앞서 北韓體制的 特性을 먼저 간략히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

지난 반세기 가까운 세월속에 북한은 가장 완벽한 맑스·레닌주의적 全體主義社會로 성장했다. 전체주의정치는 專制政治(autocracy)로서 통치자가 통치를 함에 있어서 오직 자기에게만 책임을 지며, 어떠한 선례에도 구애됨이 없이 統治行爲를 자의로 행하는 것이다. 전체를 귀한다는 주관적인 도덕적 정당성을 토대로 專制를 하는 政治體制가 전체주의 정치체제인데, 全體의 근거를 이데올로기체제로 합리화시킨 것 외에는 본질적으로 神政體制의 전제정치나 절대왕조시대의 전제체제나 다를 바가 없다.

註 36) 박하일, “北韓體制變化的 政治的 要因,” 민병천편, 「전환기의 남·북한관계」(서울: 大旺社, 1990) p.150.

프리드리히(Carl J. Friedrich)와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는 全體主義 獨裁政治體制가 지니고 있는 공통적 특징으로서 i) 인간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적인 정교한 이데올로기, ii) 1인독재자에 의해 영도되는 唯一政黨에 의한 통치, iii)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恐怖體制, iv) 대중매체의 독점, v). 폭력의 독점, vi). 집단적으로 중앙에서 통제되는 경제 등을 지적하고 있는데³⁷⁾, 이러한 모든 특징들을 북한사회에서는 고루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완벽한 全體主義體制的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권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체제의 특성은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³⁸⁾

첫째, 정치이데올로기로서의 主體思想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북한사회의 특징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서 개인 숭배를 강요하는 통치이념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金日成·金正日 부자세습체제를 들 수 있다. 김일성이 1인독재체제에 의해 가장 권위적이고 그러면서도 지구상에서 최장기통치자로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도 세계적인 기록이지만, 여기에다 그의 長男·金正日에게 자기의 모든 권력을 승계한다고 하는 왕조세습 또한 기록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부자세습체제가 확실하게 구축되어 권력승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다수의 견해이다.

셋째, 經濟·技術에 있어서 自力更生을 들 수 있다. 농업집단화와 산업국

註 37) Carl J. Friedrich and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2nd ed.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p. 27.

38) 박하일, 앞의 글, pp. 152-162; 李相禹 共著, 「북한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p. 21; 李容弼 編著, 北韓政治體系(서울: 教育科學社, 1985) pp. 41-101; Chong-Sik Lee, "Evolution of Korean Workers, Party and the Rise of Kim Chongil," Asian Survey, Vol. XXII, No. 5 (May, 1982), p. 435; Byung Chul Koh, "Political Succession in North Kore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8, No. 3 (Fall 1984) p. 567 참조.

유화는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확립에 있어, 核心을 이루는 근간이다. 따라서 북한의 기본경제정책은 i) 主體思想에 기초한 정경일치, ii) 폐쇄적인 자립경제로서의 自力更生原則, iii) 軍事·經濟併進의 重工業優先政策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넷째, 폐쇄적인 社會體制를 들 수 있다. 북한헌법 49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集團主義原則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에 준거한 조직생활을 통해 언론 및 來往의 자유 조차 철저히 통제와 감시를 받고 있는 閉鎖社會라는 점이다.

다섯째, 대남적화전락을 들 수 있다. 3대혁명역량 강화정책 즉 i) 북반부에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ii) 남반부에서 革命力量을 강화하며, iii) 국제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2. 北韓의 對內的 反應

1) 住民思想統制의 強化

北韓은 그간 最近 蘇聯 및 東歐諸國의 개혁·개방정책과 관련하여 싫든 좋든 나름대로 대내외적인 반응을 보여오고 있다³⁹⁾. 이러한 社會主義 國家들의 개혁·개방정책의 거센 물결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1당재배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北韓은 외부세계로부터의 이같은 변혁의 물결이 유입되는 것을

註 39) 서극성, “동유럽의 개혁과 한반도의 통일문제” 서원대 사회과학연구소, 「동구의 개혁과 한반도의 통일문제」 통일문제 학술심포지움(1990. 5.) 논문집 pp.9-13; 박재규, “북한의 민주화와 개방을 위해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것” 「주간 북소리」, 1990년 6.1. pp.25-26.

우려하여 최근에는 갖가지 방법으로 住民들에 대한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⁴⁰⁾

북한은 지난 90년 1월 1일 金日成신년사를 통해 東歐圈에서의 改革·開放政策에 따른 변혁을 제국주의 세력의 「反社會主義策動」으로 비난하면서 “인민대중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에로 나가야 한다는 근본원칙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하여 東歐國家들의 변혁에 따른 새로운 思潮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住民思想統制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⁴¹⁾

물론 북한은 그동안 金日成 1인에 의한 독재정치와 그의 아들 金正日로 이어지는 父子權力世襲體制의 구축등 시대착오적인 정치행태를 「당연한 일」로 호도하기 위해 주민들을 외부세계와 차단한 채 북한사회에 적합한 인간개조를 위한 思想統制를 부단히 실시해왔던 터이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北韓이 금년들어 보이고 있는 住民思想統制가 관심을 끄는 것은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하고 있다는 現象的인 問題 보다는 이러한 행위가 東歐에서의 변혁과 함께 동서간의 냉전기류가 화해기류로 바뀌고 있는 世界史的인 潮流에도 불구하고 북한 스스로 이같은 흐름을 외면하기 위한 反作用에서 나왔다는 것과 金日成 신년사에서 남북한간의 자유왕래와 전면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⁴²⁾ 북한사회내부에서는 오히려 더욱 강압적인 주민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등의 북한의 現實認識과 이에 대한 對應戰略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 있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최근 社會主義制度和 金父子의 지도력 선전등 北韓體制의 優越性 선전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선택지를 삼제함으로써 북한체제에 순응하는

註 40) 内外通信, 第677號, 1990. 2. 2; 内外通信, 第669號 1989. 12. 8.

41) 内外通信, 第677號, 같은글.

42) 金日成 90년 신년사에 대한 分析으로는 内外通信 第673號 90. 1. 5.

이른바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住民思想統制가 이루어지고 있다.⁴³⁾

첫째는 金日成·金正日 父子에 대한 충성심을 촉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44) 北韓은 1990年初 金日成신년사가 발표된 이후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전체 당원 및 근로자들의 사상적 각성을 촉구하는 가운데 “부모를 따르고 존경하는 자식의 마음으로 당과 수령을 충성다해 모시고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영도따라 사회주의의 기치높이 당의 위업수행에 한 몸 바쳐 나가자”고 金父子에 대한 충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金父子에 대한 혁명전통을 강조하여 주민들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口號문헌」을 통한 우상선전을 최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선전매체들은 89년말 현재 9천여점의 구호문헌이 발굴되었다고 전하면서 금년에도 이러한 발굴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⁴⁵⁾

둘째는 社會主義制度 및 北韓體制의 優越性을 선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46) 금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북한은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지위를 확고히 보장해주는 가장 인민적인 제도”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해 “인민대중이 당의 올바른 영도밑에 革命과 建設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북한은 북한체제가 주체사상으로 인해 여타 사회주의국가들보다 월등히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註 43) 内外通信 第677號 앞의 글.

44) 金正日에 대한 個人偶像化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3年 9月 勞組織 및 思想擔當 秘書로 임명된 이후부터이며, 金正日에의 권력승계를 위한 制度化가 명백히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1980年 10월에는 개최된 제6차 勞動黨大會이후 부터이다. 李容弼編著 앞의 책, p.104, p.63 참조;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수령지도자이시다” 「철학연구」(사회과학출판사) 1990년 제1호 참조.

45) 内外通信, 第677號 앞의 글; 「구호나무발굴」소동의 전말에 관해서는 内外通信, 第671號 89. 12. 22.

46) 勞動신문 1990년 4월 15일자 사설참조.

셋째는 主體思想敎養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⁴⁷⁾ 북한은 지난 1월 28일에도 “주체사상은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길로 이끄는 기치”題下의 노동신문사설을 통해 “주체사상은 우리인민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사상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담보하는 불멸의 기치”라고 주장하며 모든 주민들이 주체사상을 具現하는데 앞장설 것을 촉구했다.

2) 住民勞動員의 강화

이것은 「지상낙원건설」이라는 미명하에 북한주민들을 각종 경제건설장에 투입하여 이른바 집단주의적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自由主義思想을 배격하려는 것으로서 또다른 차원의 住民思想統制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⁴⁸⁾ 일찌기 레닌은 공산주의 건설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은 人間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여유시간을 주지 않고 배불리 먹이지 않는 것이 住民統制의 관건이라고 말한바 있다.⁴⁹⁾

北韓은 금년들어 새로이 「9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사회주의건설의 총노선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이 이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북한은 이 운동을 “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켜 나가는 새로운 總進軍運動”이라고 주장하고 당원과 근로자들, 그리고 모든 住民들이 自力更生의 정신아래 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진력할 것을 촉구했다.

北韓이 이와같이 주민노력동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낙후된 경제건설을 도모하는데 있지만 이와함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集團主義에 입각한 노력동원을 통해 주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뿐만 아니라 주

註 47) 같은 글.

48) 内外通信 第677號 앞의 글 참조.

49) 박하일, 앞의 글, p.156.

민들의 자유주의적 사고를 억제하려는 속셈을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

北韓은 최근들어 확산되고 있는 주민노력 기피풍조와 특히 東歐共產圈의 개혁에 따른 내부사상동요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연초부터 각 분야별 「熱誠者대회」를 잇달아 소집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집회들을 통해 북한은 金日成新年辭와 당6기 17차 전원회의(90. 1. 5~9)에서 제시된 해당 산업부문별 증산 및 절약목표달성을 강력히 독려하는 한편 이를 위한 공장·기업소들의 設備稼働率 提高를 촉구하고 또한 특히 집회에 동원된 분야별 열성자들의 충성심 및 사기진작을 선동함으로써 노력동원 극대화분위기를 유도하고 특히 동구개혁으로 확산되고 있는 住民들의 사상동요 현상을 억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⁵⁰⁾

3) 住民監視·監督의 強化

北韓은 지난해말 東歐의 大變革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때 東歐 유학생 1천4백여명(헝가리 120명, 동독 500명 포함)을 모조리 평양으로 소환했는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최근 이들 留學生들의 잇달은 탈출망명사건에서 보여주듯 앞으로 이같은 사태가 더욱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판단과 함께 이들 유학생들을 통해 民主化改革바람이 그들 내부에 파급·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한다는 다급한 이유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⁵¹⁾

日本の 「軍事研究」紙 最近號의 “38도선 벽은 무너지는가, 공포의 金日成親衛隊”라는 글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의 격렬한 개혁의 바람에도 아직도 北韓의 김일성 1인독재가 유지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철저한 주민감시·감독과 무자비한 처벌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다. 그 핵심은 김일성직속의 國家政治保衛부와 社會安全部라는 비밀경찰조직

註 50) 内外通信, 第683號 90. 3. 16; 内外通信, 第690 90. 5. 4; 内外通信, 第672號 89. 12. 29.

51) 内外通信, 第669號 (89. 12. 8); 内外通信, 第680號 (90. 2. 23).

이며, 반혁명행위등의 감시감독에서 우편물검열, 전화도청 등 黨·政·軍·기업·민간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2중 3중의 거미줄로 감시하며 불순분자를 처벌한다. 또한 모든 주민을, 다섯 가구를 한 단위로 상호 감시케 하는 이른바 5號擔當制로 묶어놓고 있고 비밀경찰은 주민 30명에 한명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⁵²⁾

전주민 상호감시체제로 불신을 조장하고 무자비한 처벌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김일성을 초상화나 사진을 훼손해도 「9번사건」으로 重刑을 처하는가 하면, 한가족이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特別獨裁對象區域」이라는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져 이곳에서 삶을 마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금년 1월 17일 관계당국이 밝힌 바에 의하면 北韓은 최근 세습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東歐改革의 물결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82년 이후 「정치범집단수용소」 4개를 증설 모두 12군데에 15만 2천여명의 정치범을 집단수용하고 있다. 또한 각 수용소는 북한당국에 대한 반당·반혁명·종파분자와 세습체제 반대자, 개방정책을 요구하는 改革勢力등 정치범과 그 가족이 강제수용돼 있고 체제불만세력의 증가에 따라 수용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범 수용소와 수용된 주요인사는 <표 3-1>, <표 3-2>와 같다.⁵³⁾

<표 3-1> 北韓의 政治犯 收容所

地名	收容人員	備考 (82년 이후 신설:○)
운성	27,000	
회령	20,000	
경성	15,000	
덕성	10,000	○
정평	10,000	
요덕	13,000	
동신	7,000	○

<표 3-2> 收容된 主要人士

姓名	肅清 當時 職責
이근보	총리
홍성룡	부총리
김경련	부총리
김병하	국가보위부장
김동규	부주석
유장식	당정치국 후보위원·비서
김광협	당비서

註 52) 内外通信, 第687號 (90. 4.13).

53) 한국일보, 1990년 1월 18일자 1면.

地名	收用人員	備考 (82년이후신설:○)
회천	10,000	
영변	15,000	
용천	5,000	
개천	15,000	○
북창	5,000	○
계	152,000	4곳신설

※수용소 총면적: 1508 km²(북한면적 1.23%)

※소당면적: 50~250 km²

※총수용인원: 152,000명(전체인구 0.7%)

출처: 한국일보, 1990년 1월 18일자 1면.

姓名	肅清 當時 職責
허 봉 학	대남사업총국장
정 병 갑	3집단군사령관
김 양 춘	7집단군사령관
김 창 봉	부수상 겸 민족보위부장
박 금 철	부수상 겸 당정치위원
김 도 만	당비서

출처: 한국일보, 1990년 1월 18일자 1면

3. 北韓의 對外的 反應

1) 蘇聯 및 東歐圈의 改革에 대한 소극적 인정

蘇聯과 東歐의 改革에 대해서 北韓은 지난해 말까지 거의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 또는 왜곡하여 보도했다.⁵⁴⁾ 심지어 베를린장벽이 개방되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서독장패들의 亂動」이라고만 보도했고 루마니아사태에 대해서도 사태의 초기에는 보도하지 않고 있다가 차우세스쿠가 처형당하기 전날인 12월 24일 비로소 反政府騷擾事實을 보도했고⁵⁵⁾ 그후 태도를 바꾸어 이온 일리에스쿠를 의장으로 하는 「구국위원회」를 루마니아의 새로운 정부로 공식 승인했다.

아마도 북한이 東歐改革이 급격하게 진행된 1989년 11월 이후 최초로 체계화시켜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은 노동신문 12월 22일자 1면 기사일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註 54) 북한이 보여준 일관된 태도는 i) 사태 또는 사건자체에 대한 철저한 함구 내지 묵살 ii) 시간경과로 상황의 북한내부전과 또는 유입역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사태 또는 상황전개의 본질은 일체 외면한 채 그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측면만 부각시켜 이를 철저히 매도함으로써 왜곡내지 호도하는데 주력해왔다. 內外通信, 第648號 (89. 7. 14).

55) 內外通信, 第680號 (90. 2. 23); 內外通信 第672號 (89. 12. 29).

라는 제하의 장문의 기사에서 동구개혁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思想的인 측면에서 동구인민들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이념에 대한 同一視(identification)가 점차 퇴락했고 그 원인은 바로 帝國主義者들의 선동때문이라고 보고 북한 자신은 이러한 변혁에 하등의 영향도 받지 않을 뿐더러 獨自의인 노선을 계속해서 견지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⁵⁶⁾

그후 북한의 태도는 90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社會主義發展이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외국의 일」로서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 또한 북한의 政務院 기관지 「민주조선」은 1월 4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 “소련인민은 사회주의 변화를 지향하는 개편사업을 위해 社會經濟發展을 추진하고 있다”, “형제적 소련인민의 성과를 기뻐하는 동시에 세계평화와 안정옹호를 위한 소련정부의 이같은 노력에 支持와 連帶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90년 2월 4일자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은 논설을 통해 “소련인민은 社會主義 갱신을 위한 개편작업을 심화시키고 사회·경제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인민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소련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라고 부추기는 등 소련의 改革·開放政策에 대해 최소한 「외국의 일」로서 인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⁵⁷⁾

그리고 그간 한국과 소련의 접촉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韓·蘇間의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일견 무반응 무관심의 입장을 견지하는듯 했다. 그러나 최근 김영삼최고위원 일행의 방소와 관련해서 4월 6일자 노동신문 논평의 글이라는 형식을 통해 “두개의 조선을 인정받기 위한 分裂外交” “조·소사이의 험악한 사태가능성”등의 비난을 표시했고, 6.4한소정상회담과 관

註 56) 박재규, 앞의 글, pp. 25-26.

57) 内外通信, 第680號 (90. 2. 23).

런해서 北韓 中央通信은 6월 7일 “용서할 수 없는 반역적 흥정” “엄중한 정치적 後果가 있을 것”이라는 등의 신랄한 비난을 표시했다.

이처럼 북한은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서는 표면상 최소한 묵인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한·소접근에 대해서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양면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소련노선에 따라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려는 입장이라기 보다는 소련과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이고, 또한 韓蘇接近에 대한 비난은 그것을 계속 방치할 경우 북한이 고립화되는 것을 사전 봉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東歐諸國의 改革·開放에 대한 북한 반응은 특히 한국과 東歐諸國과의 修交와 관련하여 나오게 된 외교적 마찰을 들 수 있다. 작년말까지 대체로 동구권자체의 개혁·개방에 대해 사실보도마저 억제한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資本主義의 폐해를 부각시켜 우회적이며, 추상적으로 개혁·개방을 비판해 오다가 한국과 수교국가인 헝가리, 폴란드에 대해 「배신행위」, 「죄행」, 「쓴맛을 볼때가 있을 것」이라는 등 직설적이고 원색적인 용어로 격렬히 비난했고 헝가리의 경우는 外交關係를 대리대사급으로 격하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그 이후에도 한국과 수교하는 동구국가들에 대한 불만이 계속적으로 표출되었지만, 작년 12월말, 루마니아 사태 직후 긴급 소집된 在外公館長會議(89. 12. 26~90. 1. 10)를 계기로 비난이나 제재조치를 별로 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주민사상통제 단속에 치중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⁵⁸⁾ 이와 같이 북한이 동구제국의 개혁개방에 대해 態度變化를 보인 것은 동구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면서도 계속 이를 외면할 경우 國際社會에서의 외교적 고립과 국제적 비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시대적 조류에 일부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現實認識에서 비

註 58) 서극성, 앞의 글, pp. 10-11.

못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90년 3월말 현재 남북한 수교현황 및 동구권 수교현황을 살펴보면 <표 3-3>, <표 3-4>와 같다.

<표 3-3> 南北韓修交現況(90. 3. 30현재) <3-4> 東歐圈 修交現況(90. 6. 30현재)

地 域	韓 國	北 韓
垂 洲	28	19
美 洲	34	12
歐 洲	27	14
中 東	18	14
아프 리카	33	42
계	140	105

출처: 内外通信, 第686號(90. 4. 6)

國 名	修交日字	備 考
헝가리	89.2.1	※기타지역국과의 수교:
폴란드	89.11.1	알제리(90.1.16)
유 고	89.12.28	방고(90.3.26)
체 코	90.3.22	※동구미수교국:
불가리아	90.3.23	알바니아 동독
루마니아	90.3.30	※아시아미수교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중국

2) 中國 및 베트남 등과의 協力強化

소련과 동구제국에서의 개혁과 관련하여 북한은 89년 6월 天安門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북한이 중국당국의 천안문사태의 처리방식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이후 쌍방은 각급 고위대표단의 교환을 통해 社會主義 守護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해왔다. 특히 작년 7월 동구에서의 개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을 때의 金日成의 중국비공식방문과 금년 3월 中國黨 總書記 江澤民의 북한 공식방문과정에서 쌍방 최고지도자들이 사회주의 순결성 고수에 합의한 점이 관계긴밀화의 추세를 대변해주고 있다.

또한 90년 1월 동소평이 중국 북한 베트남 3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社會主義 大義의 수호를 주장한 일이 있는데, 최근 북한과 중국의 베트남·라오스관계강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북한이 베트남과의 수교40주년이라던가 베트남공산당창건 60주년을 명분으로한 기념행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쌍방간의 親善協力強化와 함께 反帝투쟁연대성을 다짐하는 것에서 그러한 움직임을 찾아볼 수

있다.⁵⁹⁾

이러한 일련의 동향은 동·서공산권의 양극화와 北方3角關係의 균열잠재성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나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될 것인지는 미지수이다. 북한 중국 베트남 라오스 등 아시아 공산권이 동부공산권의 붕괴에 따라 개혁세력이 전례없는 理念攻勢를 전개할 것에 대비, 기존체제 수호를 위한 연대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상호간의 역사적 증오심이 공식적인 동맹관계형성을 어렵게 하며, 또한 북한과 중공간에도 동구의 개혁과 개방과 관련해서 미묘한 인식과 시각차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지난 3월 江澤民 중국당총서기의 방북시, 金과 江의 연설가운데 金日成이 대외개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고 사회주의 고수를 역설한 반면에 강택민은 세계 모든나라와 관계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對外開放政策不變을 강조한 점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⁰⁾ 요컨대 북한과 중국간에 체제문제에 관한 전략적 연계가 형성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것이 곧 공개적인 反蘇同盟으로 可視化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3) 美·日과의 關係發展의 摸索

蘇聯의 개혁에 의하여 직접 야기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연관된 변화로서 美·蘇間의 데탕트, 그리고 한국의 北方政策의 진전으로 인한 미국과 일본 등 서방국가들의 대북한 접근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⁶¹⁾ 금년 2월 1일 베

註 59) 内外通信, 第656號 (89. 9. 8); 内外通信, 第678號 (90. 2. 9); 内外通信, 第690號 (90. 5. 4) 참조.

60) 内外通信, 第683號 (90. 3. 16).

61) 最近의 美·北韓, 日·北韓 關係에 관해서는 白光日, “美國과 北韓關係의 變化趨勢와 展望”,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研究」, 第2卷 1號, 1990년 봄호, pp. 278-300; 金鴻洛, “最近의 日本과 北韓關係”,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研究」 第1卷 4號, 1989년 겨울호, pp. 171-209; 國토통일원 조사연구실, 「최근 미·북한 교류증진」; 安秉俊, “美國과 日本, 北韓접근에서 노리는 것”, 「신동아」 1989년 5월호; Katsumi Sato, “Current and Problems of Japan-North Korean Relations”, in Masao Okonogi(ed.), North Korea at the Crossroads(Tokyo: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88); 張達中, “日·北韓關係와 韓半島의 統一環境”, 「韓半島平和와 統一環境研究」 (서울: 國토통일원, 1989) 참조.

이커국무장관은 북한과 관계개선을 희망한다고 의회의 청문회에서 증언하였다. 일본 역시 다케시다정부의 對北韓關係改善 용의표명이래 최근 일본의무성은 제3국에서 북한의 외교관과 무조건 접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蘇聯의 개혁과 함께 진행된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北韓의 反應은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美·日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북한은 한국과 헝가리의 수교시에 외교관계를 격하시키고 大使를 소환하였던 행동을 그 후에 외교관계를 맺었던 폴란드나 유고등과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았다.

한편 미·일과의 관계의 경우, 北韓은 미국과 북경에서 7차례에 걸쳐서 비공식 외교접촉을 가져왔고 그러한 미국과의 접촉을 기존의 政務參事級에서 大使級으로 격상시킬 것과 뉴욕常駐 美·北韓대표간의 제2 대화통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아직은 관광객 형식이지만 금년 김일성생일(4.15)에 많은 在美僑胞를 초청하였다는 것도 그들을 통하여 미국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를 읽을 수 있게 한다.

북한의 서방국가들과의 관계개선 의도는 무엇보다 지난해 말 최고인민회의 내에 外交委員會를 구성하고 그 위원장에 許談을 임명하여 그 기구를 강화시킨 사실에서 나타나고 있다.⁶²⁾ 사회주의국가의 외교가 공산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議會가 외교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내에 외교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를 강화하였다는 것을 자유민주주의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준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韓國戰參戰 실종미군의 遺骸送還(90. 5. 28) 및 동북아 국제학술회의(조지워싱턴대 주최)에서의 북한의

註 62) 内外通信, 第680號 (90. 2. 23); 内外通信, 第682號 (90. 3. 9).

대사급 외교관의 최초의 참석허용(90.5.17) 등의 변화에서도 미·북한접근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美·北韓關係의 현실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核安全協定 거부문제나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對北關係를 조정하려는 정책을 견지할 것이고, 북한 역시 對美關係의 급속한 개선에 따른 이해득실관계 특히 엄청난 體制否定的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존의 對南革命戰略과의 상충에 따른 한계성 등을 면밀히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쌍방관계의 획기적 변화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日·北韓間에도 관계개선촉진요인 못지않게 억제요인(북한측의 급속한 관계변화 유보입장) 때문에 쌍방관계의 조속한 급진전은 예상할 수 없다.

IV.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實態 및 展望

1.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實態

北韓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金日成 專權以來 40여년 동안 줄곧 일당독재체제 및 부자세습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主體思想과 自力更生을 주축으로 한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다. 經濟的인 면에서는 自力更生原則을 기본정책노선으로 채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段階에 걸친 경제계획을 실시해 왔다.

대사급 외교관의 최초의 참석허용(90.5.17) 등의 변화에서도 미·북한접근이 모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美·北韓關係의 현실적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核安全協定 거부문제나 남북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對北關係를 조정하려는 정책을 견지할 것이고, 북한 역시 對美關係의 급속한 개선에 따른 이해득실관계 특히 엄청난 體制否定的 파급영향에 대한 우려와 기존의 對南革命戰略과의 상충에 따른 한계성 등을 면밀히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쌍방관계의 획기적 변화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日·北韓間에도 관계개선촉진요인 못지않게 억제요인(북한측의 급속한 관계변화 유보입장)때문에 쌍방관계의 조속한 급진전은 예상할 수 없다.

IV.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實態 및 展望

1.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實態

北韓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金日成 專權以來 40여년 동안 줄곧 일당독재체제 및 부자세습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主體思想과 自力更生을 주축으로한 폐쇄체제를 유지해 왔다. 經濟的인 면에서는 自力更生原則을 기본정책노선으로 채택하여 자립적 민족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표 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段階에 걸친 경제계획을 실시해 왔다.

<표 4-1>

北韓의 經濟計劃段階

段 階	計 劃 期 間	特 性	備 考
1 ('4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1개년계획 ('47) · 제2차1개년계획 ('48) · 제1차2개년계획 ('49-50') 	사회주의체제 형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46년은 조정기간 · 토지개혁과 주요산업의 國有化 단행
2 ('5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3개년계획 ('54-'56) · 제1차5개년계획 ('57-'60) 	戰災復舊와 사회주의이행 완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개년계획을 앞당겨 60년에 완성 · 전체산업시설국유화, 농업의 협동화를 통한 集團化, 상업유통부문의 사회주의적 집단화 · 천리마운동을 통해 한국보다 우위의 경제유지
3 ('6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7개년계획 ('61-'70) 	사회주의체제 확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연장하여 70년에 완성 · 중공업우선전략, 농업에서의「청산리방식」, 공업에서의「대안체계」, 4대군 사노선 채택 주체사상형성 · 60년후반부터 남북한 經濟優劣關係 역전
4 ('71-'8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6개년계획 ('71-'76) · 제2차7개년계획 ('78-'84) 	停滯期 진입과 정책전환의 기점화(사회적 긴장과 고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속되는 실패로 76-77년과 85-86년 두번의 조정기간 · 김정일주도하의 3대혁명(사상·기술·문화)운동, 10대전망 목표달성을 위한 속도전 전개 · 合營法제정
5 ('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7개년계획 ('87-'93) 	新政策의 방향 모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기적 딜레마 ·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한 물리적 기술적 토대 구축이라는 테마의 선정으로 출발 · 생산능력제고, 의식주개선, 대외무역확대등의 改革과 開放意志를 表明한 과업 선정

출처 : 辛昇哲, 1988, 앞의 글, p.63을 참고하여 작성.

북한에 있어서는 제1차7개년계획의 실패로 남북한 경제력의 逆轉現象이 표면화되면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제1단계의 개혁(체제내적 同質變化에 의한 借款導入型開放)이 착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外貨不足과 外債累增(88년 현재 52억불)⁶³⁾ 또는 성장둔화와 군사력강화라는 難題를 안은 채 이제는 불완전하나마 제1단계 개혁을 종결짓고 제2단계 개혁(投資誘致型開放을 위한 體制內的 異質變化)에 진입하지 않으면 안될 局面에 놓여 있다.⁶⁴⁾ <표 4-2>은 북한의 경제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표 4-2> 南北韓 主要經濟指標 比較(1988年末 基準)

區 分	單 位	韓 國	北 韓	韓國/北韓(倍)
人 口	萬 名	4,197	2,103	2.0
G N P	億 \$	1,692	206	8.2
1人當 GNP	\$	4,040	980	4.1
經濟成長率	%	12.2	3.0	-
軍 事 費	億 \$	78.4	44.2	1.8
輸 出	"	607	19.9	30.5
輸 入	"	518.1	31.6	16.4
貿易規模	"	1,125.1	51.5	21.8
外 債	"	312.0	52.0	6.0
貿易依存度	%	66.5	25.0	-

출처: 辛昇哲, 1989, 앞의 글, p. 80.

지금까지 북한의 실시해온 改革은 計劃方法的 改善과 企業에 대한 自律性 賦與라는 두 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i) 地方經濟機關의 역할을 강조하는 分權化를 실시하기 위한 道 經濟指導委員會의 설치, ii) 기업운영상의 분권화 확대를 위한 기업수준의 工業團地(industrial complex)의 건립을 들 수 있고, 후자의 경우 i) 기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獨

註 63) 内外通信, 第653號 (89. 8. 18).

64) 辛昇哲, 1989, 앞의 글, p. 93.

立採算制(independent accounting system)의 도입, ii) 개인의 근로의욕提高를 위한 능력임금제도 등의 각종 物質的 誘因制度(material incentive system)의 도입을 들 수 있다.⁶⁵⁾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내부적 개혁은 東歐의 경우와는 달리, 극히 부분적 또는 하나의 시범적인 사업으로 전개된 아주 소극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對外的 開放에 있어서는 다소 적극적인 면도 보이고 있는데, 「合營法」제정(1984), 「합영시행세칙」, 「합영회사 소득세법 및 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및 세칙」 등의 제정(1985) 그리고 조선국제합영총회사의 설립(1986), 合營工業部の 설립(1988) 등을 통해 外國人 投資를 장려하고, 觀光總局을 설치하여 관광객 誘致運動을 전개하는 것이 그 좋은 실례이다.

그러나 投資에 대한 수익성보장의 불확실, 투자에 따른 법적미비, 외채상환지연에 따른 대외신용도문제, 自力更生式의 경제체제의 경직성, 및 시장성협소 등으로 성과가 저조하여 84년 9월부터 89년 9월까지 5년간 총합영건수는 <표 4-3>과 같이 53건에 불과하고 이중 27건이 朝總聯과 합작한 것이며, 공산권에서는 소련이 9건으로 제일 많고, 서방선진국으로는 불란서가 단 1건을 합작했을 따름이다. 또한 합영의 내용도 피복, 식료가공, 식당, 호텔 등이 대중을 이루며, 최근 금융, 전자, 화학분야로 質的인 사소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⁶⁶⁾

이상에서 볼때 북한은 체제는 고수하면서 일부 경제개방을 시도하고 있는 현단계로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개혁·개방의 조짐이 아직 북한에는 거의 微微하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註 65) 같은 글, pp. 103-107 참조.

66) 韓鎔源, “北韓의 改革과 開放의 實相”, 韓國理念教育教授協議會, '90夏季 全國大學理念教育擔當教授세미나 논문 「北韓의 改革과 開放 - 그 實相과 展望」 pp.30-31 참조.

(단위 : 건)

일본 (조총련)	소련	중국	폴란드	헝가리	몽고	불란서	기타	계
27	9	2	1	1	2	1	10	53

출처 : 内外通信, 第 657號 (1989. 9. 15)

2.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展望

1) 改革·開放의 沮害要因과 促進要因

前述한 바와 같이 蘇聯을 비롯한 東歐國家들이 改革과 開放의 變革을 겪고 있는데 북한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 어느 국가보다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같은 분단국으로서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이다. 먼저 北韓의 改革과 開放의 沮害要因으로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北韓의 體制的 特性을 들 수 있다. 북한사회에는 공산주의의 일반적 속성이라할 수 있는 1당독재와 획일주의가 사회를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다른 그들 특유의 독재이데올로기로서의 이른바 「唯一思想體系」 부자권력세습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북한사회는 전체주의 바탕위에 세습체제가 着根됨으로써 권력관계의 발생 및 변동을 억제하고 있고 이것이 개방화추진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⁶⁷⁾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지연시키고 있고 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 肯定的 효과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 否定的 효과를 두려워하는데 있다. 현재 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사회주의진영의 改革과 개방으로 인한 후유증 즉 필연적인 부산물에 대하여 너무나 정통하고 있기

註 67) 이와 관련해서 權威主義政治文化의 만연 즉 북한주민은 우물안 개구리인 양 다스려지는 철저한 폐쇄독재에 익숙해 있는 것도 改革·開放化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극성, 앞의 글, p. 13 참조.

때문이다. 특히 北韓 指導部는 개혁과 개방에 아직 成功한 나라는 없으며, 개혁과 개방이 문제를 해결하였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믿고 있다.⁶⁸⁾ 그리고 <표 4-4><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러가지면에서 東歐圈과는 다르며, 특히 혁명1세대이며 건국 당사자인 金日成이 강경보수파와 더불어 집권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自主的인 改革動因의 誘發을 가로막고 있다.

<표 4-4> 東歐와 北韓의 現實狀況 比較(서로 다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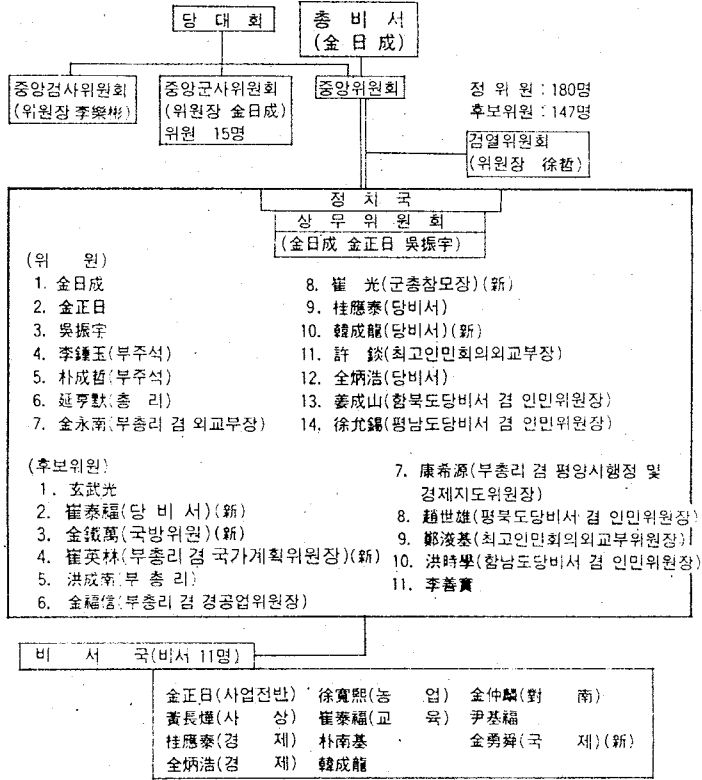
區 分	東 歐 및 東 獨	北 韓
理念面	○탈이념현상 ○사회주의에 대한 한계성 인식 ○유럽문화의 정신적 기조 강함	○김일성 주체사상 일색화 ○사회주의 우월성 맹신 ○한민족 전통문화 배격
周邊環境面	○동구의 전반적 개혁 지향 ○서구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 ○개혁추진에 대한 서구진영의 지원·협력	○개혁 노선의 철저한 외면 ○메스컴, 여행 등 철저한 정보 차단 ○남한과 교류·협력 거부, 자유진영에서 경원시
權力構造面	○장기 독재의 퇴진·몰락 ○테크노크라트에 의한 정치 권력 장악	○44년 1인독재 및 세습화 ○혁명 1세대의 정치권력 장악
地圖層 姿勢面	○국민의 민주화 욕구 수용 ○자기 개선의지의 충만 ○지도층의 개혁 의지	○국민의 민주화 욕구 삼제·억압 ○자기 영웅화·합리화 ○개혁의지 부재, 改革忌避
國民意識 構造面	○자유화, 민주화에 대한 욕구 분출 ○서구사회에 대한 동경심 팽배	○자유사조 침습방지 부심 ○자본주의에 대한 반대·憎惡心 강조

※ 89한국이념교육교수협의회 세미나(강원지역) 발표문
出處: 金注完, “東歐와 北韓比較” 自由公論 1990年 1月號 p. 26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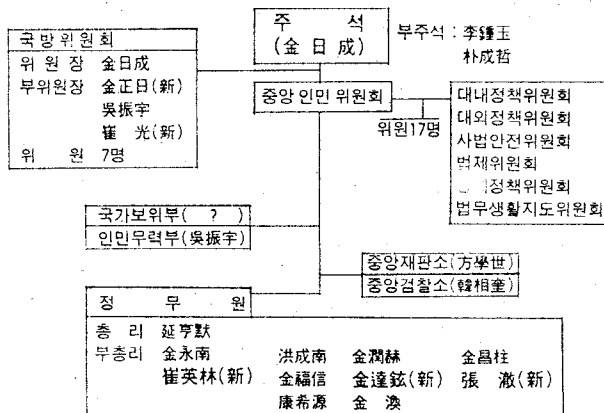
註 68) John Merrill, “North Korea's Economy Today: The Limit of Juche”,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主催 第4次 韓·美·北韓 會議資料集, 1989. 8.

<表 4-5>

노동당기구표 (90년 5월말 현재)



행정기구표 (90년5월말현재)



출처 : 「月刊 朝鮮」 1990년 7월호 p. 226

둘째,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의 저해요인으로서는 그들의 남조선혁명노선과 「人民民主主義革命」전략을 들 수 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한국이 “미제의 강점하에 있는 식민지이기 때문에 남한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과 해방성취는 전쟁이나 또는 暴力革命의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해방론이요, 통일의 평화적 방도 즉 혁명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남조선혁명」노선은 北韓治下의 통일로로의妄想에 기인된 것으로 민족과 통일 그리고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階級鬭爭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며 따라서 그들의 혁명노선은 독재체제의 명분을 제공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체제와 강경혁명노선은 통일연장선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相互保完關係에 있기 때문에 노선의 후퇴 내지 완화는 곧 체제의 붕괴위기를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⁶⁹⁾

다음으로 개혁·개방의 促進要因은 크게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주변환경변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内部의 개방촉진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경제침체 및 김일성의 노쇠현상이다. 북한은 아직은 외부세계에서 느끼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경제위기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른 사회주의권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앙통제적 計劃經濟의 모순 또는 한계로 인해 외채누증, 무역적자, 성장둔화 등으로 경제침체가 점차 심화되어 결국 집권층 주도에 의하든 개혁파에 의해서든 개혁·개방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내부촉진요인으로는 김일성의 노쇠현상과 관련해

註 69) 内外通信, 第660號(89. 10. 6). 그러나 崔東熙, “北韓의 變化可能性”, 國土統一院, 「統一問題研究」 第2卷 1號(通卷 第5號) p. 214에서 崔教授는 北韓의 改革·開放化의 沮害要因으로 i)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로 나옴대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는 점과 ii) 정치적인 면에서의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체제 固守를 들고 있다.

서 改革開放說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i) 김일성 死後說 즉 김일성 사후에 改革派가 權力鬭爭을 통하여 金正日을 몰리치고 집권하면서 개혁·개방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이라는 說과 ii) 金日成 死前說 즉 카리스마적 정통성이 없는 김정일이 김일성을 등에 업고 개혁·개방을 단행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확고한 통치기반을 구축할 거라는 설이 있다. 이에 추가해서 또한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은 김일성의 급작스런 사망, 돌발적인 군사쿠데타등으로 인해 나오게 될지도 모르는, 어쨌든 현재보다는 더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혁·개방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外的인 환경변수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i) 韓國의 社會的 安定(안정된 민주정치와 창출, 配分的 正義의 구현, 지역적 갈등의 해소 등)과 북한에 대한 적극적 후원, ii) 중국과 소련·동구의 성공적인 개혁·개방의 추진과 한국과의 수교 및 북한에 대한 影響力 발휘, iii) 동·서간, 미·소간의 화해 및 협력관계 증진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한국의 社會的 安定과 북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북한의 개방 및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東獨의 변혁이 서독의 안정과 적극적 후원이 없었다면 가능했겠는가를 물으면 답은 분명해진다.⁷⁰⁾ 한국사회의 갈등은 평화적·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해소되어야 한다. 한국의 내부 갈등이 激化되면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북한체제를 더욱 고수하려고 하게 될 것이다.

다음에, 동구의 변혁과정에서 보았듯이, 東歐의 개혁과 개방정책의 추진에

註 70) 鄭鎔碩, “東西獨 統一模型의 南北韓適用可能性”, 仁川大平和統一研究所, 「獨逸統一模型과 南北韓關係의 展望」 仁川大平和統一研究所 주최 교수·학생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논문집(1990. 5. 30). pp. 1-19; 徐丙喆, “獨逸統一模型과 推進過程” 같은 책, pp. 21-29 참조.

소련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는 소련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中國의 影響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만약 소련·동구제국이 개혁과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다면 북한도 점차로 고립을 피하기 위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게 되고, 만약 중공이 평화적이든 그렇지 않은 개혁과 개방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또한 韓國과 修交가 모두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북한체제의 개혁과 개방에 거의 절대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신데맷트가 어느정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동구의 경우가 그러했듯이 北韓의 改革·開放化에도 環境變數로서 촉매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 展望

北韓의 改革·開放政策의 추진 가능성은 金日成·金正日 父子世襲體制的 特性, 남조선혁명노선 등의 고수와 같은 北韓内部的 改革·開放 沮害要因과 경제난 해소, 김일성 노쇠현상, 대내외적인 압력과 지원 등과 같은 改革·開放 促進要因의 複合的인 均衡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단기적인 견지에서 볼때, 개혁·개방의 沮害要因이 促進要因을 능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페레스트로이카나 글라스노스트, 루마니아 인민봉기와 같은 급격한 체제변동은 있을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 북한은 현체제를 고수하면서 制限的인 改革·開放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최소한 김일성 생존기간 동안은 제1단계의 체제내적 동질변화를 진행시키면서 제2단계의 投資誘致型 開放政策의 추구하는 變則的 方法을 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딜레마는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하되, 주체사상은 오염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데 있다.

그러나 長期的인 견지에서 볼때, 김일성의 노쇠에 이은 사망, 김정일의 정통성의 약체성, 경제침체의 심화, 개혁세력의 점차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투자유치형의 개방에 이은 체제내적 異質變化(체제변혁)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있어서도 환경변수(신데짱트와 사회주의권의 반전없는 개혁·개방물결의 지속, 한국의 민주화의 健全한 발전과 대북지원 등)의 작용에 의해 북한의 개혁·개방의 速度와 내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단기적, 장기적, 돌발적 改革·開放의 모든 가능성을 전망해 보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매서운 바람이 아닌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어 두터운 옷을 벗게 한후, 共存共榮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나아가야 할 것이다.

V. 結 論

최근 蘇聯·東歐를 중심으로한 社會主義圈의 變革의 성격과 방향을 「收斂論」, 「共產主義 崩壞論」, 「새로운 社會主義로의 發展論」의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스탈린주의 및 맑스·레닌주의를 모델로 하는 社會主義體制가 여러가지 면에서 특히 政治經濟面에서 限界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⁷¹⁾ 사회주의국가들은 초기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體制內的 同質變化와 消極的 開放을 통해 경제침체를 극복하려 했으나 성과부진으로 投資誘致型 開放과 體制內的 異質變化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註 71) 金江寧, “東歐變化와 北韓의 開放化” 앞의 글 pp. 194-195.

투자유치형의 개방에 이은 체제내적 異質變化(체제변혁)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있어서도 환경변수(신데짱트와 사회주의권의 반전없는 개혁·개방물결의 지속, 한국의 민주화의 健全한 발전과 대북지원 등)의 작용에 의해 북한의 개혁·개방의 速度와 내용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분단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로서는 북한의 단기적, 장기적, 돌발적 改革·開放의 모든 가능성을 전망해 보는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에 매서운 바람이 아닌 훈훈한 바람을 불어넣어 두터운 옷을 벗게 한후, 共存共榮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나아가야 할 것이다.

V. 結 論

최근 蘇聯·東歐를 중심으로한 社會主義圈의 變革의 성격과 방향을 「收斂論」, 「共產主義 崩壞論」, 「새로운 社會主義로의 發展論」의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스탈린주의 및 맑스·레닌주의를 모델로 하는 社會主義體制가 여러가지 면에서 특히 政治經濟面에서 限界를 보여주었다는 점이다.⁷¹⁾ 사회주의국가들은 초기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體制內的 同質變化와 消極的 開放을 통해 경제침체를 극복하려 했으나 성과부진으로 投資誘致型 開放과 體制內的 異質變化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註 71) 金江寧, “東歐變化와 北韓의 開放化” 앞의 글 pp. 194-195.

사회주의체제내에서의 경제개혁은 경제만이 아닌 정치에서의 改革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환경변화 특히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新思考에 힘입어 대부분의 동구제국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社會主義圈의 대변혁에 직면하여 북한은 대내적으로는 주민사상통제 및 단속을 강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社會主義의 變革을 소극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天安門사태후 보수화된 中共과 협력을 강화하고, 또한 미·일에도 접근조짐을 보이는 양면성을 지닌 반응을 보여왔다.

오늘날 社會主義圈을 휩쓸고 있는 대변혁의 물결은 북한에도 조금씩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같은 社會主義國家라 할지라도 북한의 경우는 경제침체현상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내외적 면에서 동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동구에서와 같은 소련의 개혁바람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침체 또는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經濟改革과 개방을 추진해야 되지만 경제개혁은 경제만이 아닌 정치에서의 개혁도 필연적으로 수반되어 현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기반을 威脅하게 되는 것이 현재 북한이 처한 딜레마이다. 따라서 현재 改革·開放의 촉진요인보다 抑制要因이 강해서 개혁과 개방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長期的인 견지에서 볼때 북한의 改革·開放은 필연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러한 國際狀況 및 북한내부의 상황을 綜合해 볼때 우리의 과제는 독일 통합노력을 교훈삼아 북한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원·유도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북한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남북교류 및 협력 더 나아가 통일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우선 南北韓 모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쉬운 것부터 실천해 가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

고 우리의 北方政策이 북한의 孤立化가 아닌 開放化 촉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일관된 체제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第3章 社會主義圈의 變化要因과 北韓體制的 變化可能性

— 高性俊 (濟州大 教授)

I. 序 論	73
II. 社會主義圈의 變化要因	76
1.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76
2. 東歐에서의 脫共產主義化	80
III. 改革없는 北韓의 開放	83
1.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	83
2. 選擇的 對外經濟 開放化	85
IV. 北韓의 變革可能性	88
1. 改革의 促進要因과 制約要因	88
2. 北韓式 페레스트로이카의 序幕	93
V. 맺 는 말	100

I. 序 言

20세기가 시작되어 10년이 지나면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共產主義革命은 온 세계를 경악케 했다. 그 후 공산주의는 확산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그 세력을 동유럽, 北韓, 中國 등으로 퍼져 나갔고 이어 越盟, 쿠바 등 제3국에까지 미쳤다. 그리하여 공산당이 집권하는 나라는 최고에 달했을 때 24개에 달했고 전세계인구와 영역의 3분의 1이상을 장악할 정도로 그 위력을 과시했었다.

그렇게 強勢를 보이던 공산주의가 1980년대에 들어서서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이후 쇠락하기 시작하여 드디어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남겨두고 스스로 終말을 고하고 있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동구에서의 脫共產主義 흐름은 프랑스대혁명 200주년이 되는 1989년 폴란드에서 있었던 총선에서 공산당이 참패하면서 동유럽 최초의 非共產黨員이 정부의 수반이 되는 이변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헝가리의 공산당이 스스로 일당독재를 해체하고 다당제를 도입하고 시장경제체제를 부활시키는 개혁을 실시했고 이것이 東獨으로 비화되어서는 인민들에 의해 베를린장벽은 허물어지고 西獨과의 통일 길을 찾는 대변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변혁은 도미노이론의 효과를 나타내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도 평화적으로 일어났고 급기야는 루마니아에서는 독재자인<차우세스쿠>부부가 전격적으로 처형되는 流血革命이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新思考'에 입각한 蘇聯의 對外政策의 변화에 기인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동구를 강점해 오던 蘇聯이 1989년에 들어서 이른바 시나트라 독트린을 선언했다. 美國의 歌手인 후랑크 시나트라가 유명한 노래 'My Way'를 상징해서 붙인 이 독트린은 동구 여러 나라가 자신의 길을 찾아가라는 뜻이다. 그래서 폴란드

가 기점이 되어 一大脫共의 행진이 시작된 것이다.¹⁾

1990년에 들어와 유럽에서는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이 집권당을 선택하는 선거가 있었다. 선거는 지난 3월 東獨에서 시작되어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 등에서 실시되고 6월 17일 불가리아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들 동유럽 5개국 국민들은 그동안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내세워 집권해온 공산당을 소수야당으로 전락시키는 '선거혁명'을 이룩했다. 특히, 北韓이 사회주의의 아성으로 높이 평가해온 東獨에서의 자유총선거 결과는 두가지 면에서 주요한 특징을 나타냈다.²⁾

첫째는 東獨국민들이 기민당(CDU)을 중심으로 한 우파의 3당이 결속한 독일연합에 압승을 안겨줌으로써 현실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둘째는 동독국민들은 통일의 방법으로 東獨 共產體制를 포기하고 신속하게 서독체제로 흡수하는 길을 택한 점이다.

그 결과 동독은 지난 7월 1일 모든 經濟運營權을 서독에 넘겨주어 東西獨의 經濟統合이 이루어졌고 10월 3일 마침내 서독에 정치적으로 흡수되어 버리는 공산주의의 일반적 패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로써 東歐의 변혁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개혁운동으로 시작되었으나 그 체제를 몰락시키는 <혁명적변화>라는 제2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페레스트로이카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을 야기시킨 蘇聯은 지난 9월 24일 그동안 실시해온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키로 한 개혁안을 최고회의 연방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로써 蘇聯은 70년간 지속되온 <사회주의 실험>의 끝을 내고 <새로운 자본주의에의 실험>을 시작한 것이다.

註 1) 李相禹. "해방 45년- '제2의 해방'을 추구할 때다.", 「한국논단」 1990년 8월호 p.23.

2) 서병철. "獨逸統一 北韓에 영향주고 있다." 「옵서버」 1990년 10월호. pp. 281~282.

이러한 東歐와 蘇聯의 변혁은 20세기에서 시작된 공산주의체제가 그 마지막 年代에서 진정한 종언을 고하고 있음을 뜻한다. 사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계급독재 체제의 결합으로 공산주의사회라는 이상을 실현시키겠다는 20세기의 가장 거창한 역사의 대실험이 실패했음을 80-90년의 동유럽과 蘇聯의 사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의 共產國家들에서 있어서도 다소 내용에 있어 차이는 있으나 변화의 물결은 밀어닥치고 있다. 몽고는 69년만에 처음으로 多黨制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민주화와 경제개혁을 향해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中國은 경제개혁을 추진하다 天安門사태를 맞아 다시 이데올로기 우선주의 경향을 띄어 왔으나 최근 다시 脫이데올로기화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징후들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9월 29일 표명한 <북경 아시안 게임 이후 韓-中間 무역사무소교환 설치 및 영사기능 부여>사실이 이를 나타낸다고 하겠다.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화가 역사의 大勢라면 北韓도 이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蘇聯이나 東歐에서 시작된 본질적인 체제개혁이 단행되고 있다는 조짐이 나타나지 않고있다. 오히려 北韓은 이러한 변화를 <제국주의세력의 반사회주의적 책동>과 <사회주의 체제내의 반동적 사상조류와의 투쟁>에서 패배한 데 원인이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³⁾ 특히 체제변화에 있는 나라들이 主體思想과 같은 위대한 사상이 없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체사상이 北韓의 사회주의체제 고수의 방과제임을 내세우고 있기도 한다.

그러면 北韓은 과연 20세기 마지막 年代에서의 <사회주의체제 고수>의 첨

註 3) 「근로자」 1990년 제3호.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자” pp. 31~32.

병임을 자처하면서 시대전환점에 서서 현실을 외면하고 홀로서기를 계속할 것인가?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고 세계질서가 달라지는 가운데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새 흐름에 자기 스스로를 맞추어 나가는 自己變身을 추구하기에 바쁜데 유독 北韓만 기존의 입장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II. 社會主義圈의 變化要因

1.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蘇聯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가장 국토가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밀재배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넓으면서도 식량이 모자라서 최대수입국이 되고 있다. 經常收支는 최근 계속해서 만성적인 적자이며, 금년초까지 그 액수는 1200억루블에 달하고 있다. 4천만 이상의 蘇聯사람이(7인중 1인)빈곤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⁴⁾

물론 蘇聯은 최소한도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혜택은 무료이지만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모자라 외국에서까지 수입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모자란 실정이다. 소비재를 파는 상점은 텅비어 있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매일같이 긴 줄을 서야만 한다. 담배가게, 쥬스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간이 상점, 햄버거집, 백화점의 의류매장 등에는 으레 줄이 서있는데 그나마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어 體制에 대한 불만은 드높아 가

註 4) Leonid Korenev. 「The Soviet Economy」 (Moscow: 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1990) pp.25~26.

병임을 자처하면서 시대전환점에 서서 현실을 외면하고 홀로서기를 계속할 것인가?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고 세계질서가 달라지는 가운데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새 흐름에 자기 스스로를 맞추어 나가는 自己變身을 추구하기에 바쁘는데 유독 北韓만 기존의 입장을 지속해 나갈 것인가?

II. 社會主義圈의 變化要因

1.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蘇聯은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가장 국토가 넓고 지하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밀재배면적은 세계에서 가장 넓으면서도 식량이 모자라서 최대수입국이 되고 있다. 經常收支는 최근 계속해서 만성적인 적자이며, 금년초까지 그 액수는 1200억루블에 달하고 있다. 4천만 이상의 蘇聯사람이(7인중 1인)빈곤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다.⁴⁾

물론 蘇聯은 최소한도의 의식주가 해결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혜택은 무료이지만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모자라 외국에서까지 수입하고 있으나 절대적으로 모자란 실정이다. 소비재를 파는 상점은 텅비어 있고 생필품을 사기 위해 사람들은 매일같이 긴 줄을 서야만 한다. 담배가게, 쥬스나 아이스크림을 파는 간이 상점, 햄버거집, 백화점의 의류매장 등에는 으레 줄이 서있는데 그나마 다 충족을 못시키고 있어 體制에 대한 불만은 드높아 가

註 4) Leonid Korenev. 「The Soviet Economy」 (Moscow : Novosti Press Agency Publishing House, 1990) pp.25~26.

는 것이다.⁵⁾ 蘇聯 화폐의 20%는 地下經濟의 채널을 통해서 유통되고 있다. 지하경제의 종사자들은 國營工場에서 훔친 물건이나 수입품을 암시장에서 팔고 있으며 부패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있다. 그 결과 국영상점에는 상품이 모자라고 그로 인해 사회적 긴장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⁶⁾

이와같은 蘇聯人的 궁핍과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동안 체제의 틀이 되어온 '스탈린주의'에 있는 것이다. 한 蘇聯 학자도 蘇聯인의 배고픔이 스탈린 통치하에서 시작된 국영농장체제에서 찾고 있다.⁷⁾

스탈린주의에 입각한 경제체제의 전개는 蘇聯經濟를 낮은 생산성과 근로의욕의 저하, 성장률의 둔화, 심각한 소비재와 생필품의 결여 등으로 요약되어지는 위기적 상황에 처하게했다. 이러한 經濟的 危機에 따른 자체적 반성이 첫째의 배경요인이라 할 수 있다. 토지를 위시한 생산수단의 국유화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에 입각한 중공업우위정책의 추진은 잉여자본과 노동력을 動員하는 형태의 외면적 성장단계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과 생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한 생산과정의 지속적인 혁신과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이 요청되는 內面的 成長段階에 와서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매우 비효율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자립경제의 기반구축과 軍需産業의 육성을 위한 중공업우위정책의 추진은 의식주문제와 관련된 경공업의 낙후를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소비물자 생필품의 부족을 야기시켰고, 특히 量的인 면보다 質的 기호를 더 중시하는 오늘에 와서는 전혀 달라지지 않은 품질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은 고조

註 5) 김항원, "소련사회의 변화양상",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연구발표회 (1990.9.6) 발표요지, p.16

6) Leonid Korenev. op. cit, p.45

7) Ibid. p.29.

되고 이에 따라 노동의욕도 더욱 더 저하되는 惡循環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동안 점진적인 개방으로 인해 서방사회와의 비교를 하게 되어 蘇聯인들로 하여금 蘇聯체제에 대한 강한 의문과 불만 그리고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둘째요인은 스탈린체제의 지배양식 즉 中央執權的 官僚器具의 등장과 당의 관료주의화에서 오는 인민대중의 無氣力化와 受動化 문제이다.⁸⁾ 스탈린체제의 관료주의는 당의 독재와 인민위에 군림하는 새로운 지배계급으로서의 Autarchy를 형성했고, 국가기구는 비대해졌고 과도한 중앙집권화로 인해 체제는 비능률과 권위주의 그리고 부패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絶對的·非誤謬의 위치에 있던 黨은 토론과 비판의 자유가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인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지 않는다. 이러한 스탈린체제의 관료주의는 사회에 극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결국 蘇聯體制는 정체상태에 빠져들어 위기의 벼랑끝에 내몰리게 된 것이다.

상기한 바의 경제적 위기와 스탈린주의적 관료주의의 경직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蘇聯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 1980년대에 있어 사회주의권의 개혁의 선봉장인 고르바초프에 의하면 그것은 ‘人間的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건설’에 있다.⁹⁾ 인간이 목적이 되고 人間 重視의 방향으로 사회제도 전체의 전환을 실제로 보장하는 정치와 사회·경제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社會主義를 刷新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개혁은 스탈린주의의 독소를 깨끗이 씻어내고 체제의 전면적인 분권화와 민주화를 통해 社會主義

註 8) 고르바초프, 하용출 옮김, 「페레스트로이카」(서울:사계절출판사, 1988) p.63.

9) 이와 관련된 고르바초프의 논문, “사회주의 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는 1989년 11월 26일자 프라우다지에 게재됐다. 「사상과 정책」 1990년 봄호(Vol.7, No.1) pp. 237~257 참조.

를 民主主義的으로 再生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얼굴을 목표로 한 社會主義體制의 개혁은 다음의 세가지 측면에서 추진되어 왔다.

첫째, 경제개혁은 우선 생산수단에 대한 국가소유와 국가관리에서 벗어나 私有財産制를 도입하여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다. 군수산업 중심의 중공업에서 소비재 생산중심으로 전환을 가져오고 있으며 화폐경제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할 수 밖에 없기에 自給自足體制를 포기하고 開放政策을 채택하고 있다.

둘째로 政治改革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절대주의하에 공산당일당지배와 계급독재를 포기하고 多元主義에 입각한 다당제의 수용을 뜻한다. 특히 복수후보제,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보장, 투표절차의 형식주의 배제등 선거제도의 民主化를 실시하여 인민의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蘇聯에서 급진 개혁주의자인 보리스 옐친의 러시아공화국대통령선거 당선을 가져왔다.

세째로 社會改革은 모든 면에서 소비에트 社會主義 사회를 민주화하는 즉 글라스노스트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발달과 국가의 시민사회에의 종속을 추구한다. 요컨대 이념에 있어서 劃一主義를 지양하고 사상의 개방, 秘密主義에서 벗어나 情報의 전면적 공개, 언론의 민주화와 公開主義, 문화해방과 예술의 르네상스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민주화를 이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는 두가지 문제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첫째는 既得利益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자들의 저항이다.¹⁰⁾ 둘째는 많은 蘇聯 사람들이 경제발전은 원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註 10) 奇連洙, “페레스트로이카의 실제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2권 1호 1990. p.44.

모르고 있는 것이다.¹¹⁾ 따라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도 국민들은 달라지지 않은 경제생활로 인해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과 社會開放化에 힘입어 그 불만의 표출은 고르바초프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최근 고르바초프는 經濟發展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그동안 기저를 이룬 사회주의 경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경제를 수용하는 急進的 改革안을 연방최고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조치까지 취하면서 경제난국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그대신 蘇聯은 이제 사회주의를 구분짓는 경제선을 통과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2. 東歐에서의 脫共產主義化

동구는 세계 제2차대전 이후 蘇聯의 직·간접적인 영향아래 공산화의 길을 걸어 온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슬라비아, 헝가리 및 동독을 지칭한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는 獨自的으로 공산정권을 수립하였으나 나머지 6개 국가는 蘇聯군의 점령하에서 스탈린의 一國社會主義的 입장에 입각한 蘇聯에의 衛星國化 과정이 바로 공산화인 것이다. 특히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그 나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여건으로 보아 蘇聯군의 점령이 없었다면 공산화가 될 소지가 없던 나라들이다. 헝가리와 불가리아 그리고 체코의 경우에도 蘇聯의 군사적 점령은 공산화에 결정적인 것이었다.¹²⁾

蘇聯軍에 의해 강제로 蘇聯식 공산주의를 접목하게 된 동구는 이미 자기들의 문화·종교·지적유산을 서구의 것과 동일시 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註 11) 파드마 테사이, 홍동선 옮김, 「페레스트로이카의 전망」 (서울: 범양사, 1990) p.75

12) R.V. Burks, "Eastern Europe" in C.E. Black and T.P. Thornton(eds) 「Communism and Revolution: The Strategic Uses of Political Violence」 (Princeton 1964) pp.86~93

지역에 스탈린주의라는 全體主義的 동원체제의 건설이 시작된 것이다. 정치는 전통주의적 정치문화와는 배타적인 전체주의적인 일당독재체제가 구축되었고, 경제는 중공업우선주의와 농업의 급속한 집단화, 그리고 私的 商工業의 성급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공산화 초기부터 東歐는 문화적으로 蘇聯의 지배를 탐탐하게 여기지 않았다. 비록 맑스주의는 최초에 유럽에서 배태되었으나 러시아의 동양적 專制主義 정치문화에 수용되어 그 본래의 인본주의적 의도는 폭력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스탈린주의의 강요를 東歐에서는 문화적 열등국에 의한 橫的 從屬으로 간주되어 왔다. 물론 초기에 동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서유럽의 기존 공업국들과 신흥 공업국인 蘇聯에 비할 때 낙후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농민들의 빈곤문제도 심각한 면이었다. 따라서 蘇聯이 후원하는 동구공산정권의 사회개혁과 공업화정책은 많은 지지를 얻었다.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보다 빠른 산업화와 현대화를 이룰 잠재력을 지녔다고 믿었다. 당시에 蘇聯은 공산주의 실천의 모델로 간주되었고 이데올로기도 蘇聯에서 가져왔으며 크레믈린의 지배도 역사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되기도 했다.¹³⁾

그러나 東歐에 있어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건설은 해를 거듭할수록 성과보다는 후유증을 노출시켰다. 정치적으로 일당지배체제와 거대한 沒人間的 官僚支配體制를 낳았고 개인의 자유는 구속되었고 이에 대한 인민의 저항에는 테러로 대응했다. 사회주의경제를 통한 경제성장은 자유경쟁을 통한 효율성 증대를 보장하는 資本主義體制를 쫓아갈 수 없어 오히려 전체 경제를 가난속으로 몰아넣고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¹⁴⁾

註 13)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동유럽공산주의의 미래”, 「사상」 89년 가을호. 1989. pp.2711~272

14) Vladimir V. Kusin, “An Overview of East European Revolution”. 「Soviet Studies」, Vol. XXVII. No.3, (July. 1976). p.340

東歐에 있어 스탈린주의에 대한 개혁과 도전은 이미 50년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움직임은 쉽게 蘇聯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1956년 헝가리에서 나지(Nagy)의 임시정부가 주도한 개혁노선과 이에 따른 반소비에트 변혁운동은 약 10일만에 실패로 끝났고 1968년 체코슬라바키아에서의 드브체크가 주도한 〈人間의 얼굴을 가진 社會主義〉운동은 〈슬픈 프라하의 봄〉이란 기록으로 남겨지고 말았다.¹⁵⁾ 또한 1980년초에 시작되어 1981년까지 16개월 동안이나 체제개혁을 위해 자유화의 가치를 높이 들었던 폴란드의 자유노조 운동도 蘇聯의 엄호하에 진압에 나선 폴란드군에 의해 1차는 좌초되고 말았다.

그러나 蘇聯에서 고르바초프가 당서기장으로 취임하고 新思考와 페레스트로이카 및 글라스노스트로 상징되는 그의 신정책이 추진되면서 동구에서도 광범한 사회주의 대변혁의 물결이 일게 된 것이다. 고르바초프하의 蘇聯은 과거와는 달리 동구의 개혁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고무하고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 東歐에서의 사회주의 대변혁운동은 1989년 폴란드에서 비공산정권의 수립으로 시작되어 헝가리에서는 黨名과 國名의 변경 등으로 나타났고 東獨에서는 전면적인 국경개방으로 이어졌다. 이어 불가리아에서는 공산당 지도부의 변경으로, 루마니아에서는 인민봉기에 의해 차우세스크정권의 붕괴로, 체코슬라바키아에서는 재야개혁세력이 대폭 참여하는 임시 거국내각의 수립으로 연결되어 이 변혁운동은 그 잠정적인 절정국면에 도달했다.¹⁶⁾ 1990년에 들어서서 東歐의 개혁은 체제개혁에서 벗어나 20세기의 대변혁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脫共產主義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註 15) 安秉永, 「현대공산주의 연구」(서울:한길사, 1982) pp.185~188

16) 최노석, 「미완의 혁명-동구 페레스트로이카의 현주소」(서울:모음사, 1990) pp.197~206

Ⅲ. 改革없는 北韓의 開放

1.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

北韓에서 사회주의혁명과 건설과정에서 대두된 내외의 환경변화에 그때 그때 대응하려 김일성이 제시한 위의 '4자로선'의 전개는 67년에 이르러 唯一思想理念으로 발전하게 된다. 67년 12월에 개최된 제4기 최고인민회의 회의에서 김일성은 당의 지도이념과 정부의 정책지침으로서의 主體思想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1970년 11월의 제5차 당대회에서는 규약을 개정하여, 主體思想을 맑스-레닌주의와 함께 당의 공식이데올로기로 채택한다. 1972년 12월에 개정된 社會主義 憲法에서는 본래의 맑스-레닌주의는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제외되고 주체사상이 국가의 지도이념으로 정식화되기에 이르른다.

그런데, 1970년대 중반 김일성의 권력을 김정일에게 이양하는 권력승계구축이 본격화되면서 北韓의 지배이데올로기는 다시 한번 변신을 시도하게 되었다. 김일성이 후계자를 결정하는데 고려한 점을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¹⁷⁾ 첫째, 金日成이 자신의 死後 혹은 退陣後 격하가 예상되는 그의 사상과 권위를 계속 절대화해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레닌과 호지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산국가 指導者들은 사후에 예외없이 그들의 후계자로부터 혹독한 비난을 받아왔는데 김일성은 자신의 사후 이같은 不名譽를 당하는 것을 모면해 보고자 하는 것에 권력승계구축의

註 17) Yung-Hwan Jo, "Succession Politics in North Korea", 『Asian Survey』 Vol. XXIV. No.10 (October 1986) pp.1093~1094

뜻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象徴的 不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象徴的 不滅性’이란 불가피한 생물학적 죽음에 압박하여 個人的 존재가치를 영구화하기 위하여 혈통을 존속시키거나 사후에도 개인의 업적이나 영향력이 계속되기를 요구한다는 개념이다.

둘째 權力承繼는 김일성이 근대화 목표들의 추구와 혁명업원의 유지라는 이중적 노력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⁸⁾ 더 구체적으로 말하여 김일성은 혁명정신을 약화시킬지도 모를 근대화의 조류에 대처하여 思想革命의 발판으로 朝鮮勞動黨의 역할을 연장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고려사항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그의 장남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선택하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키는 지배이데올로기의 位相變化를 가져오게 했고, 이들 카리스마도 혁명업적도 없는 해방후 세대인 김정일의 이데올로기적 업적으로 부각시키게 된다. 따라서 1980년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는 김정일의 권력승계를 공식인정하면서 黨規約을 개정하여 김일성수령의 주체사상만이 北韓의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정식화시켰다.

오늘날 北韓은 각종 대중매체를 동원하여 김정일을 “주체사상을 완벽하게 구현한 탁월한 이론가요 사상가”로서, 주체사상을 金日成主義로 정식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⁹⁾ 그들에 의하면 金日成主義는 우리 시대를 피착취·피억압인민에게 투쟁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지도사상으로 맑스주의나 레닌주의를 대신하는 사상이라는 것이다.

主體思想의 金日成主義化는 북한에서 지배권위의 원천의 변화를 뜻한다. 그동안 통치권위를 조선노동당이라는 조직체에서 찾던 데서 이제는 김일성

註 18) 李廷植, “조선노동당의 발전과정과 김정일의 대두” 김준엽, 스칼라피노 공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서울: 범문사, 1983) p. 46

19) Inoue Shuhachi, 「Modern Korea and Kim Jong IL」(Tokyo: Yuzankaku, 1984) p. 172~173

일인의 신격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모든 권위의 원천을 自然人的 神性에서 찾는 神政體制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일성주의는 宗教化된 이데올로기로서, 종교에서 神의 교리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누가 당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더라도 당의 지도노선을 바꿀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오직 김일성주의를 따라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²⁰⁾

2. 選擇的 對外經濟 開放化

北韓은 분단과 전쟁직후의 낙후된 농업사회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추진한 外延的 경제성장은 경지정리, 노동집약적 공업, 채취산업 등에서 괄목할 만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는 총량규모에서 한국의 국민총생산을 앞지를 수 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 北韓은 2단계 산업화에 있어서는 사회주의국가들보다 월등히 나은 서방국가들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어 이의 도입을 피하게 되었다. 또한 73년의 석유파동을 전후하여 蘇聯을 위시한 사회주의국가들의 對西方무역적자확대로 이들 나라로부터 경제지원을 제공받기 어려운 점이 계기가 되어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모색했다.²¹⁾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서방자본의 직접투자나 기술협력에 의한 것이 아닌 借款의 형태였다. 그러나 지불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차관도입과 서방으로부터의 수입확대가 외채를 누적시켜 70년 중반 이후 北韓은 외채지불 연기사태를 맞게 되면서

註 20) 李相禹, “김일성체제의 특질” 이상우 외, 「北韓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9) pp. 25~26

21) 이태욱, “북한경제개혁과 전망”, 이태욱편 「북한의 경제」(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252

서방으로부터의 차관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그 이후 北韓은 다시 自力更生原則에 토대를 두면서 中國과 蘇聯으로부터의 불충분한 경제지원에 다시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北韓은 7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中國의 대외경제개방정책에 힘입어 1984년에 들어서면서 대외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은 84년 1월 2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7기 3차회의에서 對外經濟政策方向을 크게 수정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政務院 總理 姜成山은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야 경제건설의 촉진과 인민생활향상이 가능하며, 「나라의 친선관계발전은 흔히 무역을 비롯한 경제협조로부터 시작되며 경제협조를 널리 발전시켜야 다른 나라들과 가지고 있는 친선유대와 정치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하여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강성산은 계속해서 수교국인 구라파지역의 사회주의국가와의 기술교류의 경제합작을 추진하며 非修交 資本主義國家와도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켜 상호이익원칙하에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하였는데 이는 美國과 日本을 비롯한 先進 자본주의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경제합작을 외국의 경제적 예속이라고 보아온 北韓이 경제합작과 기술협조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은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해 北韓經濟를 개방화하겠다는 것으로 커다란 변화가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이 시기를 전후해서 김일성, 김정일, 강성산을 비롯한 北韓의 고위관리들이 中國의 開化現場을 빈번히 시찰하기도 했다.

이러는 가운데 北韓은 외국과의 경제기술교류 및 합작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合營法(外國合作投資經營法)을 1984년 9월 8일에 제정·발표했다.

中國이 개방을 통해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1979년 7월 1일 제정된 「中外合資經營企業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北韓의 합영법은 폐쇄

경제체제상에서 오는 모순으로 제2차 7개년 계획(1978-84)의 실패를 인정하고 차기경제개발의 수립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외개방으로 해외기업의 직접투자유치, 전문기술 및 經營技法 이전을 도모하려는데 착안하고 있다. 北韓은 이 조치에서 서방의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을 유치하기 위하여 中國의 [중외합자경영기업법]보다 투자조건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다.²²⁾

北韓의 경제발전을 위해 대외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유독 外國企業과의 합영기업에만 중점을 둔 것은 정치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합영사업은 경제구조를 일부 개편하거나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오염시키지 않고도 海外 선진자본기술과 자본을 도입할 수 있다고 판단, 합영법을 제정 공포한 이래 합영사업에 주력해 왔다.

北韓의 발표에 의하면 합영법 발표이후 지난해 9월까지 5년간 합영사업실적은 모두 53건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27건이 日本朝總聯系 상공인과의 합작투자이다. 나머지도 蘇聯, 中國, 蒙古 등 공산권 국가나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親北韓국가들과의 합작이 대부분으로 北韓이 바라는 서방국가들의 기술이나 자본의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北韓의 연도별 합영사업 유치실적을 보면 88년도까지는 매년 10건 안팎에 내용도 의류, 식품, 가공, 식당건설 등 서비스, 경공업 분야에 국한되었으나 89년도에 들어서서 비로소 금융전자 화학분야로 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北韓은 88년 12월에 정무원 산하에 합영공업부를 설치하고 외국기업 유치에 노력했으나 서방국가들의 기업과의 합영전망은 그리 밝지가 않다.²³⁾

이와 같이 北韓의 대외개방화정책을 대표하는 합영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개방을 뒷받침할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실용주의로선에 입각·

註 22) 신승철, “개혁·개방 그리고 합영법”상계서, pp. 230~231

23) 김세원, “대외경제관계와 딜렘마” 최명편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193~194

실시하면서 대외개방화정책을 추진한 중국과는 달리 北韓은 자력갱생의 자립 경제정책과 구조에 대한 개혁없이 선택적·부분적 개방화를 추진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中國의 개방정책은 중앙집권적 명령체제에서 시장사회주의로의 분명한 방향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北韓은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 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범위에서 개방을 추진하니 성과가 저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은 왜 경제체제의 개혁과 그에 따른 본격적인 대외개방화를 주저해 왔는가? 北韓의 지도층은 경제체제개혁과 경제개방화가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고 자신의 사회를 '지상낙원'으로 살아온 北韓 人民들에게 비쳐진 외부세계의 모습과 자신들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미칠 영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北韓은 40여년 동안 내외의 큰 도전없이 안정적으로 김일성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 근본 요인은 폐쇄경제, 주민통제, 주체사상의 金日成主義化 등의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개혁과 본격적인 개방화조치는 이러한 메카니즘의 약화 내지는 무력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V. 北韓의 變革可能性

1. 改革의 促進要因과 制約要因

北韓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김일성체제와 김일성주의를 유지하면서 制限的인 대외개방을 실시해 왔다. 北韓이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병행하지 않고 부분적인 클라스노스트를 선택한 것은 경제의 어

실시하면서 대외개방화정책을 추진한 중국과는 달리 北韓은 자력갱생의 자립 경제정책과 구조에 대한 개혁없이 선택적·부분적 개방화를 추진하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中國의 개방정책은 중앙집권적 명령체제에서 시장사회주의로의 분명한 방향전환을 보여주고 있는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北韓은 사회주의경제의 기본적 교리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은 범위에서 개방을 추진하니 성과가 저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北韓은 왜 경제체제의 개혁과 그에 따른 본격적인 대외개방화를 주저해 왔는가? 北韓의 지도층은 경제체제개혁과 경제개방화가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고 자신의 사회를 '지상낙원'으로 살아온 北韓 人民들에게 비쳐진 외부세계의 모습과 자신들의 객관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認識이 미칠 영향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다. 北韓은 40여년 동안 내외의 큰 도전없이 안정적으로 김일성체제를 유지해 왔는데 그 근본 요인은 폐쇄경제, 주민통제, 주체사상의 金日成主義化 등의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체제개혁과 본격적인 개방화조치는 이러한 메카니즘의 약화 내지는 무력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IV. 北韓의 變革可能性

1. 改革의 促進要因과 制約要因

北韓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김일성체제와 김일성주의를 유지하면서 制限的인 대외개방을 실시해 왔다. 北韓이 고르바초프가 추진하는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를 병행하지 않고 부분적인 글라스노스트를 선택한 것은 경제의 어

려움을 인식하지만 체제개혁과 개방은 김일성주의(주체사상)에 대한 오염, 주민의식의 국제화를 가져와 東歐에서와 같은 체제에 대한 개혁요구가 밀로부터 거세게 일 것이라는 불안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페레스트로이카가 전제되지 않는 클라스노스트로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되었다. 합영법을 채택한 후에도 서방세계로부터의 자본과 기술의 유입이 거의 성취되지 못하고 있으며, 과중한 군사비로 인해 北韓주민의 의식주 생활은 매우 낙후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²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소련의 개혁과 주간지인 [아르구멘티이] (論據과 事實) 최신호도 [北朝鮮-傳説과 現實]이라는 기사에서 “北韓은 식료품과 의료 및 기타 가장 기본적인 물자의 결핍으로 주민 감정에 점차 불신과 불안 및 피로가 쌓이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위기를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정권의 예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北韓經濟는 경제체제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해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北韓은 현재 국제관계가 탈이념-개방-협력의 차원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또한 蘇聯을 위시한 사회주의국가들의 脫共產主義 흐름에 적응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 깊은 동맹관계에 있는 소련과 동구권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민주화에 대해 외면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식의 대응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다. 최근 소련은 그동안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北韓으로 하여금 개혁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하기 시작했다.²⁵⁾ 또한 소련은 北韓이 9월초 平壤서 열린 北韓·蘇聯 外務會談內容을 비망록 공개를 통해 그동안의 韓國과의 접근에 대해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註 24) 「조선일보」 1990년 9월 21일 “모스크바유학 북한대학생 수기”

25) 최근의 예는 세바르드나제 소련외무장관이 지난 9월 2일 북한을 방문한 사실을 들 수 있음

10월 1일 韓國과의 수교라는 새시대를 열었다. 中國 역시 천안문사태로 주춤한 상태이지만, 체제유지를 위해서도 개혁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北韓에 대해 체제가 위기적 도전을 내부에서 받지 않는 선에서 개혁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中國도 북경아시안게임 이후 무역사무소를 설치한 것 등 韓國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해 나갈 것이다.²⁶⁾ 蘇聯과 中國은 경제발전을 위해 韓國과의 협력을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으며 韓半島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접근을 이루어 양국이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

北韓社會도 국제화의 조류속에서 차츰 외부세계에 노출되고 있어 北韓사회를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한 폐쇄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北韓의 지도층, 외교관 그리고 蘇聯과 동구에서 유학한 학생들은 국제사회에서의 상호의존경향과 蘇聯 및 東歐의 변혁 그리고 韓國의 발전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²⁷⁾ 北韓 주민들도 개방화에 따라 접충하는 방문객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 부분적이거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와 외부사상의 유입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北韓방문인사들에 의하면 사회주의권의 혁명적 변화와 南韓의 상대적 성공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스며들고 있다고 한다.²⁸⁾ 이에 따라 北韓住民들은 北韓사회의 부정·부패에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北韓에서도 기성세대의 세계관과 생활관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 전후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세대가 直·間接의 경험을 통해 北韓을 둘러싼 주위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세상이 탄생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개혁과 개방을 통해 北韓이 더욱 발전된 산업사회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

註 26) 鄭鴻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회장의 기자회견 (1990. 9. 29) 「조선일보」 1990년 9월 30일

27) 김연수, “북한에서의 열흘” 「조선일보」 1990년 9월 22일

28) Gray Klintworth, “Pyongyang Perestroik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0년 7월 12일, pp. 21~22.

를 드높일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北韓은 지금까지 韓國과의 정치·경제·과학·외교 등 모든 면에서 體制競爭을 하여 왔다. 韓國은 지난 198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선진국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고, 政治發展面에서도 6.29이후 민주화의 길을 걷고 있어 40여년간의 김일성 일인장기집권과 권력세습의 길을 걸어 온 北韓보다 앞서고 있다. 韓國은 또한 88서울올림픽이후 北韓의 우방인 동구 대부분 국가들과 수교를 맺었다. 이제 蘇聯과의 공식관계를 수립했고, 중국과의 관계도 북경아시안게임 이후 무역사무소 설치와 함께 수교교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北韓은 한국과의 대결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北韓은 앞으로 한국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體制改革과 개방의 길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體制에는 개혁을 촉진하는 요인 못지 않게 개혁을 제약하고 장애가 되는 요인들도 있다. 우선 주체사상(또는 김일성주의)과 首領論을 들 수 있다. 主體思想에 의하면 사회주의 건설에 있어 물질적 자극을 위주로 하고 정치 도덕적 자극을 부차적으로 함은 근로자들 사이에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그들을 돈이나 물질에 매달리게 하여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부식시키는 매우 위협하고 위태로운 편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²⁹⁾ 이는 政治道德的 자극(즉 사상개조)에 의해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중국의 실용주의나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 나아가서 市場社會主義의 입장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수령론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인 당과 인민위에 수령의 유일적 영도가 결부되어서 비로소 바람직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註 29) 金正日, “주체사상에 대하여”, 국토통일원, 「김정일명외의 논문·담화」(1987) pp.125~126

는 것이다. 수령론은 北韓체제내에 극도의 개인숭배사상을 발전시켜 김일성
 一人의 思想과 리더쉽에의 의존도가 극대화되어 있다.³⁰⁾ 따라서 北韓을 <김
 일성의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김일성은 北韓의 모든것을 상징하는 존
 재로 절대화되어 있다. 수령론은 개인숭배를 극복하고 民主化와 公開性의
 원칙을 통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정치개혁의 방향에서 보면
 비민주적일 수 밖에 없다. 결국 주체사상과 수령론은 복잡한 내외환경에서
 김일성체제라는 北韓社會主義를 형성·유지해오는 데는 기여했으나 이제 체제
 개혁을 하려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는 지금까지의 사회주의체제개혁이 현실적으로는 체제를 活性化시키는
 커녕 오히려 탈사회주의의 길이 아니면 체제를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점이다.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즉각적인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결국 철저한 급진적 개혁의 요구에 직면했다. 그 결과 蘇聯은 사
 회주의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資本主義를 선택하는 탈사회주의 로선을 택하게
 되었다.³¹⁾ 中國은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다 천안문사태라는 체제위협
 적 상황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주의체제 개혁의 불투명한 전도는 北韓으
 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로선에 더욱 집착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세째로는 동구권의 수교에 이어 蘇聯과의 관계정상화를 가져온 韓國의 北
 方政策을 들 수 있다. 장기적으로 사회주의권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한
 국의 북방정책은 北韓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남북대화를 촉진하는 動因이
 된다. 단기적으로는 北韓으로 하여금 한국의 北韓의 동맹국가들과의 수교노
 력을 북한체제의 붕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안겨주

註 30) 이종석, “북한정치경제의 현실과 변화의 조건”, 「사상문제운동」 1990년
 봄(3호), pp. 320~328

31) 蘇聯 最高會議가 지난 9월 24일 의결한 「5백일 시장경제 이행계획」은
 소련이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실패했음을 받아들였고 시장경제체제로의 개
 혁실험을 다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고는 있다 하겠다. 최근 韓-蘇 修交에 즈음하여 北韓이 蘇聯에 대한 비망록 공개 과정에서 드러내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독일식 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 내지는 공포감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³²⁾

2. 北韓式 페레스트로이카의 序幕

그렇다면 향후 北韓體制는 어떤 변화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우선 현재 진행중인 동구에서와 같은 변혁은 기대하기 어렵다. 東歐는 蘇聯의 군사력에 의해 소비에트체제를 강요당하기 전에는 서구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적 전통을 지니고 있었던 반면에 北韓은 집단주의 내지는 전체주의적 문화에 익숙해 있어 그렇지 못하다. 또 소련과 동구와의 관계가 종속적이었다면 北韓은 이미 蘇聯의 예속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 되었다. 北韓은 폐쇄정책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단절시켜 인민의 욕구분출의 心理的 動機마저 마비시키고 있으며, 管制集團을 제외하고는 인민에 의한 개혁 운동을 이끌어 갈 어떤 지식인 집단도 없다. 따라서 北韓체제의 변화는 밑으로부터의 변혁이 아니고 위로부터의 개혁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蘇聯의 경우와 같이 통치자와 공산당이 지속적 지배를 위해 주민의 요구를 앞질러 수용하는 전술적·능동적 개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변화는 언제 일어나고 어떤 모습을 띠는 것인가? 北韓체제의 변화시기에 있어서는 국내의 견해를 대체로 두가지 방향에서 내다볼 수 있

註 32) 지난 9월초 평양에서 열린 北韓-蘇聯 외무회담 내용이 北韓 외교부장 金永南의 비망록으로 북한은 9월 19일자 「민주조선」에 전문 소개했다. 이 전문에서 金永南은 蘇聯이 韓國과 수교를 맺는다는 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美國과 韓國의 공동 음모에 가담하는 것이 되며, 韓國이 이를 이용하여 獨逸式으로 北韓을 흡수 통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망록 요지는 「조선일보」, 1990년 9월 21일자 참조.

다. 우선 北韓의 變化는 김일성의 사망 내지는 정치적 은퇴가 예상되는 3~4년후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이다. 개혁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는 권력엘리트들이 모든 권위의 원천을 김일성 一人 神格에서 찾는 상황에 있는 北韓에서 누구도 <수령님이 창조한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고치자는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³⁾

이에 반하여 그 시기가 예상외로 빨라 김일성 생존시에 北韓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주체도 김일성이 된다는 것이다.³⁴⁾ 이 견해에 따르면 김일성은 수령으로서의 정상적인 집무가 어려워질 정도로 高齡化되고 있으며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무모한 판단이나 결정을 내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도 이를 認知하고 있을 것이며 누구 못지 않게 심각한 경제난, 사회주의권의 대변화, 그리고 脫冷戰的인 세계질서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또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제개혁이 불가피함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70년초부터 시작된 김정일로의 권력승계가 아직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개혁의 과제를 김정일에게 넘겨주어서는 그로 인해 혼란과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그동안 다져온 김일성체제를 살리고 김정일 후계체제구축이 安定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의 체제에 대한 再編成 즉 北韓식 페레스트로이카를 단행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論者도 이 견해에 동조하면서 내용에 있어서는 蘇聯과 동구에 비해 대단

註 33) 서대숙, “1990년대의 북한”,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 센터에서 열린 “한반도의 미래에 관한 국제학술회의”(1990. 3. 26~29)에서의 발표논문 참조. 주간 <이데아> 19호~20호(1990. 7. 28~8. 4)

34) 李相禹, “平壤의 봄도 멀지 않았다” 「중앙일보」 1989년 11월 15일자, 金學俊, “金日成 이후의 북한”, 한국지역사회연구소 창립 2주년 기념세미나(90. 7. 23) 발표논문 참조.

히 미흡할지는 몰라도 김일성에 의한 北韓식 페레스트로이카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아진다. 외형적으로는 〈主體式的 사회주의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 범위와 속도로 體制改革을 시작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가. 政治外交 部門

김일성은 소련과 동구의 개혁과 관련되어 세계의 주목을 끌었던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90. 5. 24-26)에서 北韓의 대응과 관련된 시정연설을 했다. 그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사회주의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사회주의를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北韓社會의 발전은 항일투쟁에서 비롯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원리·원칙에 의거해야 함을 강조했다.³⁵⁾ 따라서 사회주의 권의 변혁에 대한 北韓의 대응은 오히려 기존체제와 로선의 강화라고 볼 수 있다.³⁶⁾

그러나 北韓은 대내적으로는 首領中心의 유일지도체제에 수정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민주화 추세를 의식한 부분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외적인 면에서도 국제질서의 탈이데올로기화에 편승하는 現實主義 외교로선의 전개가 可時化되고 있다.

(1) 外見上 多黨制의 受容

北韓은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인민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되어 있는 사회주의 사회이기에 정치적 다원주의와 다당제가 필요없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오히려 人民大衆의 정책적 통일을 파괴하고 사회주의제도

註 35) 「로동신문」 90년 5월 25일

36) 金南植, “동구의 충격 ‘주체사상’ 변할것인가”, 「역사비평」 1990년 가을호 (10) PP.21~29

를 허물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³⁷⁾ 그럼에도 지난 4월에 있었던 제9기 最高人民會議 대의원 선거는 의견상 다당제를 수용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선 대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高位人物序列을 발표할 때 사회민주당 이계백위원장을 31번째로 거명했다. 또한 선거결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에 있어 그동안 거의 의석을 가지지 않아 온 社會民主黨 소속의 의원이 7.4%, 天道教靑友黨 3.2% 무소속 1.9%로 나타났다.³⁸⁾ 이는 蘇聯과 東歐의 민주화추세를 의식하여 나온 조치로 진정한 복수정당제로의 발전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경우 그 핵심이 多元主義의 인용임을 볼 때 北韓이 일당독재체제에서 벗어나 정치민주화로 나아갈 때 이 조치는 진정한 다당제의 틀이 될 수도 있다.

(2) 最高人民會議의 役割強化

北韓은 최고인민회의내에 통일과 외교관련 委員會를 신설하여 그동안 형식적인 법안심의 및 예산심의기능에 그쳐진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許鉞을 위원장으로 하는 外交委員會를 급년 최고인민회의 개최시에는 統一政策委員會를 신설하여 위원장에 尹基福을 임명하였다. 이는 사회주의권의 민주화를 의식하여 명목상의 최고주권기관에 불과한 최고인민회의를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부각시키려 하는 것이다. 또한 허담이 당비서직에서 물러나면서 外交委員長에 임명된 것은 이데올로기 중심의 黨외교에서 벗어나 국가 및 의회외교가 주를 이루는 현실주의적 흐름에

註 37) 「로동신문」 논설, 1989년 12월 22일자

38) 北韓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장인 김중린의 보고(90.5.24) 정노관, “북한의 9기 최고인민회의 구성동향과 정책방향”, 「공산권 연구」 1990년 7월호, PP. 43~44 재인용

照應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러한 개편은 黨·領道體制에서 의회 및 국가기관의 분리내지는 자율성을 부분적으로 인정해 나가는 것으로 미흡하나마 다원주의의 틀을 형성케 할 것이다.

(3) 專門技術엘리트의 重用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구성에서 특이한 것은 박사, 교수 등 학위직 소지자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지난 8기의 56%에서 64%로 증가된 점이다. 이들 테크노크라트들의 중용은 사회·경제의 근대화추진과 對外政策의 實用主義化를 촉진하는 배경이 된다.³⁹⁾

(4) 日本과의 關係正常化

北韓은 최근 그동안의 노선을 바꾸어 일본과의 國交正常化를 위한 작업을 급속히 진행시키고 있다. 지난 9월 28일 北韓을 방문중인 日本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들은 북한노동당 대표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여기서 北韓과 日本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국교수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간 교섭이 11월중에 시작되도록 합의했다.

北韓은 정권의 정통성을 김일성의 항일투쟁에 두고 있으며 日本과의 수교가 「두개의 조선」을 현실화시켜 분단을 영구화 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김일성이 직접 北韓을 방문중인 日本政黨代表에게 日本과의 修交를 직접제의한 것은 지금까지의 그의 노선을 수정하는 것을 상징한다. 비록 최근의 韓蘇修交나 韓中關係 개선이라는 정세변동에의 대응과 침체에 빠진 경제회복에 그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日本과의 관계정상화는 분명히 北韓의 대내외정책의 새로운 轉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註 39) 상계서, P.44

나. 經濟部門

김일성은 위에서 살펴본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사회주의권의 개혁 특히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에 대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는 北韓 사회주의가 경제건설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해결을 蘇聯과 東歐式의 자본주의적 방법에 입각하지는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⁴⁰⁾

그러나 北韓은 84년 합영법 이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왔고 최근 2년동안 더욱 가속화되어 왔다. 그러한 조치들은 반사회주의적 원리에 입각해 있어 <조용한 혁명>, <실무혁명>이라고 평가되고 있다.⁴¹⁾

(1) 市場經濟原理의 導入과 擴散⁴²⁾

北韓은 지난 84년 8월 3일 김정일의 지시로 「인민소비확대(8.3)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 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北韓은 89년도부터 생필품 증산운동 및 직매점설치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했다. 그 이후 이러한 방식은 住宅建設分野를 위시한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北韓은 시-군 단위로 농민시장(場마다)내지는 도시의 常設市場을 공인했다. 이를 통해 식량의 배급제에서 오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인데, 이곳은 현물구매 또는 물물교환의 장소가 되고 있다.

(2) 部分的인 私經濟 行爲 許容

최근의 北韓訪問者들에 의하면 도시에는 개인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채소나 음료수 등을 파는 행상과 광장에 있는 사진사 그리고 기차역 앞에 손님을 기다리는 三輪車 운전자 등이 바로 그들이다.⁴³⁾

註 40) 「로동신문」 90년 5월 25일

41) 연하청, “북한개방화의 방향”, 「월간조선」 1990년 4월호, PP.368~369

42)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이희상 “北韓의 8.3운동-드러나지 않은 개혁” 제4차 국제한국인 경제학자 학술대회(90.8.17) 발표논문 참조

43) 김연수, 전계글

또한 生産性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제가 공장이나 농장에 도입하여 생산량에 따라 현금 보너스 내지는 剩餘收穫分の 自律處理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3) 貨弊經濟로의 轉移

그동안 사용되어온 糧卷등의 배급표 대신 새 지폐의 유통이 늘고 있고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경우 利子が 지급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복권제 도도 실시되면서 당첨자는 고액의 현금을 손에 넣을 수가 있게 됐다.⁴⁴⁾

다. 社會部門

北韓은 그동안 생활환경과 정보의 통제로 사회의 획일화를 유지해 왔다. 최근에는 情報의 통제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으나 인민들의 생활환경에 있어서는 완화조치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선 일정 戰略地域(청진, 함흥, 관문점 등)을 제외하고는 여행제한이 많이 완화되었다. 여행객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도 해변과 산간 등지에 많이 확충되고 있다.⁴⁵⁾ 주민들의 옷차림과 머리모양이 현대화·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바둑, 야구, 골프 등 「資本主義的」인 레저 스포츠 등이 등장하고 있다. 대중가요나 영화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⁴⁶⁾

註 44) Gray Klinfworth. op. cit, p.21

45) Ibid

46) 이찬삼, “다시 가 본 北韓”, 「중앙일보」 1990년 9월 18일

V. 맺는 말

北韓은 政治的으로는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절대화로, 經濟的으로는 선택적인 대외개방화를 통해 사회주의권에 밀어닥칠 도전에 대응해 왔다. 그러나 1989년에 시작되어 1990년으로 이어지는 蘇聯과 東歐의 脫共產主義化라는 대변혁은 주체사상의 질적변화와 선택적 개방을 통한 사회주의 고수라는北韓의 전술적 대응을 無力化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공산주의는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 자체 모순에 의해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데서 自己 變身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40여년간 내외환경의 도전속에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北韓 사회주의를 이끌어 온 김일성으로는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역사 흐름속에서北韓만이 이를 역류할 수 없음을 認知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여 개혁을 통해 활기찬 사회주의 국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종래의 정책으로부터의 과감한 탈피가 불가피함을 알고 體制改革에 나섰다 볼 수 있다.

물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北韓의 개혁조치들은 주체사상과 김일성체제의 틀안에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권의 변혁에의 대응과 침체된 경제의 回復을 目標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치들이 소련과 동구에 비해 극히 미세하다고 평가되나 점차 그 폭이 넓어지고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체제와 로선에 대한 페레스트로이카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와같은北韓의 改革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첫째로北韓이 개혁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북한을 궁지로 몰아가는 정책을 삼가야 한다. 최근의 南北會談과 蘇聯에 대한 비망록 공개과정에서 드러난北韓의 태도는 적극적이고 자신감에 넘치는 외적인

언행에도 불구하고 獨逸式 통일이 가져올 체제붕괴에 대한 우려가 큼을 보여주었다. 北韓이 자신의 체제에 대해 危機意識을 느끼는 만큼 기존체제의 고수에 집착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북방정책과 통일정책은 보다 사려깊게 그리고 對應的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 체제에 대한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 社會內에 모순과 부조리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고 北韓이 판단하는 한 공산통일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한은 체제개혁에도 박차를 가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民主化와 福祉化 그리고 民族化를 다지는 일을 시급히 해나가야 한다.

第4章 北韓社會의 政治·軍事的 變動要因

－ 金京壽 (國防研究院 首席研究員)

I. 序 : 北韓體制에 있어 權力承繼의 意味	105
II. 權力承繼의 不合理性과 不安定性	107
III. 權力承繼와 變形된 「하나의 朝鮮」政策	111
IV. 金正日과 北韓 軍部	115
V. 第 2 世代 「테크노크라트」의 浮上	119
VI. 北韓의 反體制 勢力	123
VII. 結 論	126

I. 序 : 北韓體制에 있어 權力承繼의 意味

一般的으로 北韓과 같은 共產黨 黨體制的 國家에 있어 가장 큰 政治不安 要因은 最高 統治權者의 權力承繼問題라는 것이 學界의 通說이다.¹⁾ 즉, 權力承繼 그 자체가 가장 큰 政治變動要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自古로 中世의 絶對王政下에서는 權力承繼는 世襲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當然視되었으며 現代의 自由民主主義體制에서는 選舉에 의해서 複數의 政黨이 다투어 多數議席 또는 多數票를 얻은 黨이 執權하는 이른바 권력의 '民主的 制度化'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問題가 해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社會와 같은 一黨支配體制에서는 權力的 所在가 公式的인 機構나 機關에서 발견되기 보다는 고도로 中央集權화된 個別人物내지는 人物群에 귀속되어 있으며 대개는 最高指導者의 任期도 정해져 있지 않고 죽을 때까지 統治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렇다고 世襲王政도 아닌 어정정한 形態를 취하기 일쑤이다.

따라서 權力移讓에 관한 어떤 制度化된 메카니즘(機制)이 定立되어 있지 않은 北韓과 같은 社會에서 權力承繼問題가 體制的 危機를 誘發할 수 있는 所以가 여기에 있다.²⁾

北韓의 權力承繼라는 問題를 생각할때 特記할 사실은 金日成 死前과 死后의 權力鬭爭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에 따라 權力鬭爭의

註 1) Samuel P. Huntington, "Social and Institutional Dynamics of One-Party System," in Samuel P. Huntington, et al. ed. *Authoritarian Politics in Modern Society* (New York : Basic Books, 1970), pp.30-32.

2) Myron Rush, "The Problem of Succession in Communist Regimes,"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32, No.2 (Fall/Winter, 1978), pp.169-170.

性格이 根本적으로 다른 양상을 띠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金正日의 權力承繼라는 問題도 실은 金日成 死前의 問題이며, 死後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 수 있으리라고 豫測될 수 있다.

金日成 死前의 權力承繼라는 問題는 권력승계 問題라기보다는 金日成 스스로의 최후적인 權力的 強化를 위한 努力的 일환으로서의 권력투쟁 問題이며, 도리어 金日成 스스로가 죽음에 임박하여 대내적으로 받을 수 있는 對內政治나 對外政治로 부터의 挑戰을 억제하고 防禦하기위한 편리한 方便의 하나 일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金日成이 生前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蘇聯에서 스탈린 死後 그를 격하시킨 흐루시초프나 毛澤東 死亡後 '四人幫'을 추방하고 權力을 찬탈한 華國鋒의 中國 상황이 再演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반면에 金日成 死後의 金正日問題는 北韓의 社會構造나 政治的인 體制라는 각도에서 볼때 金日成의 死亡과 同時에 金正日도 같은 수준에서 權력으로 부터 脫落될 것은 시간문제이고 結局 權力은 軍部나 軍部를 包含한 集團指導體制로 넘어 갈 것으로 보는 것이 支配的인 見解이다.³⁾

本稿에서는 北韓의 權力承繼를 記述의 便宜上 구체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金日成 死前 및 死後를 包括하는 概念으로 把握하여 論及하되 北韓體制的 變化可能性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權力承繼라는 命題자체가 提起하는 問題點을 살펴 본후 그것이 파생시키는 핵심적인 정치, 군사적 이슈를 차례로 照應해 보고자 한다.

註 3) 李容弼, “北韓政治體制的 變化可能性,” 「北韓」(1980년 1월호), pp.104-105.
; 金武, “金正日의 權力基盤은 튼튼한가,” 「북한」(1983년 10월호), pp.59-60.

Ⅱ. 權力承繼의 不合理성과 不安定性

周知하는 바와 같이 金正日의 權力世襲준비는 지난 70년대부터 착수되어 20年以上에 걸쳐 장기적으로 추진돼 왔다. 金正日의 權力承繼를 正當化하는 北韓의 이론적 근거는 北韓式 社會主義理論의 중심가운데 하나인 指導者에 관한 이론, 즉, 「革命的 領袖論」이다. 이는 領袖가 「人民大衆의 운명개척에 決定的 要因」이 된다는 論據로 黨의 指導는 領袖의 指導라는 주장이다.

北韓은 이같은 理論에 立脚하여 金日成의 指導를 가장 정확하게 體得한 金正日이 權力을 승계하는 것은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면 유례없는 父子權力世襲을 합리화하고 있다.⁴⁾

金父子의 權力承繼에는 權威의 승계가 必然的으로 수반되어야 하는데 당분간 攝政으로 물러 앉아 垂簾聽政을 통해 자식의 權力基盤 守護·強化에 後見人노릇을 할 것으로 보이는 高齡의 金日成이 死亡하게 되면 權力과 權威의 空白이 생겨 金正日是 完全히 새로운 政治的 狀況에 直面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버지와 同等한 權威를 구축하지 못하는 이상 金正日이 金日成과 같은 方式으로 北韓을 支配하기는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或者는 따라서 金正日이 執權하여 2~3年以上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豫斷을 하기도 한다.⁵⁾

또한 金日成의 絶對的 權力이 似而非 카리스마에 의거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변화없이 유지 될 수 있다고 가정할

註 4) 北韓의 權力世襲의 論理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編, 「北韓의 實相」(서울, 1986년), pp.25-29 參照.

5) 徐大肅, “金正日, 얼마나 변화할까,” 「月刊中央」(1990년 5월호), pp.292-303 ; 「世界日報」, 1990.2.14일자 報道參照.

수 없다. 즉, 金日成이 執權한 이래, 자신에게 挑戰해 오거나 또 도전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러차례에 걸쳐서 숙청을 단행해서 마침내 金日成의 唯一權力體系를 완전히 구축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게 구축된 權力體系라 하더라도 그것이 金正日에게 계승된 다음에는 새로운 力學關係의 變化를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金正日이 權力承繼후에도 不動의 權座를 유지하고자 제도적 통제권을 장악하려고 기도할 것이 틀림없지만 權力鬭爭過程을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金日成 生存時에 주어진 그 추종자들의 충성심이 맹목적으로 金正日에게 그대로 轉移될 것이라는 어떠한 保證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⁶⁾

일정기간에 걸쳐서 金正日의 權力構造가 表面上 安定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급변하는 國際政治의 흐름, 특히 中·蘇로부터 또는 다른 영향력의 과장때문에 일어나는 권력구조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의 결과, 또 이것이 權力構造內의 力學關係에 미치는 結果등은 金正日의 계승체계에 대해서 중대한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過去 金日成이 絶對的 權力에 의거해서 唯一體制를 구축, 下降式 支配양식을 강요하였던 것 처럼 金正日이 複製하기는 곤란하다.

換言하면 從來에는 중요한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없었던 추종자들 또는 지지자들이 점차적으로 政治的 發言權을 強化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金正日이 權力承繼체제를 유지함에 있어서 一抹의 動搖 또는 權力構造內에서의 龜裂이 露呈된다면 그럴 수록 金正日은 그 자신에게 계속 支持해주는 분자들의 聯合을 더욱 확고히 하려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형성은 일종의 흥정을 통해서 가능하며 흥정의 댓가 지불은 支持者들의 位置 強化라는 것으로 歸着될 것이다.

註 6)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北韓體制研究」 (서울, 1987), pp.108-110.

만일 金正日의 權力承繼가 확고하게 구축되기 이전에 金日成이 死亡하거나 또는 예기치 않았던 이유로 말미암아 권력의 위치로 부터 사라지게 된다면 金正日의 權力基盤과 리더십은 보다 빨리 不安定하게 될 것이다.⁷⁾

前述한 바와 같은 權力承繼가 內包하는 不安定性은 其實, 權力承繼 自體의 不合理性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먼저 近代政治史에 있어 共產主義의 發源이 亂世혁명당시 舊制度(ancien regime) - 王政 - 을 打破하자는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實質적으로 金日成王朝를 建設하겠다는 것은 公산주의 이데올로기에 正面으로 背馳되는 論理이다.

뿐만아니라 北韓에서 그들이 發行한 各種 辭典에서도 世襲제도를 '반동적 제도' '자본주의에서 남아 있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同制度를 부정하면서 한편으로는 1973년 以來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을 後繼者로 內定, 權力世襲을 시도함으로써 父子世襲體制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 놓았다. 즉, 北韓 「정치용어사전」에서는 「世襲제도는 착취사회에서 특권계급의 신분에 기초하여 그 직위 또는 재산을 대대로 물려 받도록 법적으로 고착시킨 반동적 제도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⁸⁾

이같은 自家撞着的인 矛盾에도 不拘하고 北韓政權은 여러가지 權力世襲의 論理를 내세워 金正日權力承繼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권력세습의 論理中 몇가지만 일별해 보면 첫째 「혁명계승론」으로 이는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한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야 완수 될 수 있는 역사적 위업」이라는 論理이고 「혈통계승론」은 「수령의 핏줄을 이어 받은자가 후계자로 되어야 한다」는 論理로 봉건시대의 신분세습과 진배 없으며 끝으로 「김일성화신론」은 김정일이 金日成의 思想과

註 7) 李容弼 編著, 「北韓政治體系」(서울: 教育科學社, 1985), pp.63-64.

8) 「정치용어사전」(平壤, 1970), pp.414 參照

理論을 완벽하게 체득한 指導者임을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서 「김정일동지는 수령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영도예술,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체현하고 계시는 사상의 천재, 영도의 천재이며 인민의 자애로운 스승」이라는 등으로 그를 美化하고 있다.⁹⁾

金正日の 權力承繼 준비작업은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1970年代以後 시작된 것으로 傳해지나 事實은 그보다 훨씬 前인 1949년 9월 그의 生母인 김정숙의 사망때 그녀의 유언에서 비롯된다는 說이 있다. 김정숙은 숨을 거두기 직전 遺言으로 「「슈라」(김정일의 소련식 이름)를 金日成의 継承자로 해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리하여 당시 민족보위상(現인민무력부장)이던 崔勇健은 장례식에서 한 추도사를 통해 김정숙의 유언 실행을 맹세했다고 한다.¹⁰⁾

아무튼 北韓의 權力世襲體制는 西方 自由陣營은 물론이요 一部 共產圈國家에서도 노골적인 비난을 받아왔었는데 例컨대 유고의 政治週刊誌 Nin은 1984년 8월 19일자 號에서 「북한은 국가권력을 가족에게 선물해 버린 지구상에 몇 안되는 나라의 하나」라고 그 부당성을 지적 한 바 있다.¹¹⁾

특히 루마니아의 獨裁者 차우세스크의 처형등 東歐에서의 自由化 大變革을 直·間接적으로 접하고 있는 知識人層에게 金正日の 權力世襲은 혐오감을 줄 것이 틀림없다.

北韓이 세계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폐쇄사회라는 것은 누구나 認定하는 사실이지만 最近들어 東歐에서 歸國한 留學生들이나 朝總聯等 海外的 消息通을 통해서 口傳으로 바깥세상 이야기가 一般 住民들에게도 알려지고 있다는

註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編, 「北韓의 實相」 (서울, 1986) pp. 26-29.

10) 上揭書, pp. 22-25.

11) 蘇聯의 政治週刊誌 '노보예 브레미야'(新시대)는 "金日成政權은 세습 君主制"라고 金正日の 權力承繼를 격렬히 비난했다. 「한국일보」, 1990년 10월 7일자 인용보도 參照.

것이다.¹²⁾

結局, 金正日權力承繼는 外部世界의 消息 流入과 함께 北韓社會의 政治不安要素로 남을 수 밖에 없다.

Ⅲ. 權力承繼와 變形된 ‘하나의 朝鮮’ 政策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에서 金日成 唯一支配體制가 確立된 시점은 1970年代初 노동당 제5차 대회(1970. 11)와 그들의 社會主義憲法 채택(1972. 12)을 들 수 있다. 이때에 비로소 이데올로기와 制度面에서 金日成의 神格化가 名實相符하게 이루어졌기 문이다.¹³⁾

金日成 1人統治體制의 強化過程은 北韓共產主義歷史 바로 그것이었다.

1950年代, 특히 1956年 8月 反金 宮廷쿠데타 企圖를 계기로 하여 中國派, 蘇聯派를 완전히 除去하고 1958年 이후에는 권력내부로 부터의 金日成에 대한 반대세력도 일망타진한 바 있다.

이어 1960년대에도 金日成은 1人體制의 확립을 위해 광분하여 1967년 3월에는 自派內 「甲山派」黨간부들을 숙청하고 그후 2년뒤 1969년 1월에는 軍部內의 「합리주의 성향」을 제거하여 제5차 당대회를 계기로 권력구조는 金日成 個人的 「人格」에 충성하는 金日成勢力 一色化를 완전히 마무리 지었다. 이와 같이 造成된 政治的 現實을 制度化한 것이 「社會主義憲法」의 채택이었다.

註 12) 「조선일보」, 1990년 5월 15일자 및 月刊 「한국논단」 1990년 7월호 亡命 북한유학생 남명철, 박철진인터뷰 참조.

13) 金日成 1人支配體制의 구축과정은 梁好民, “전체주의 1인독재체제의 확립,” 李相萬外 共著, 「북한 40년」 (서울 : 西文化社, 1988), pp. 31-100 參照.

이렇게 일단 자신의 1人支配體制를 확립한 金日成은 1973년以來 아들인 金正日을 政治舞臺에 등장시켜 後繼體制구축을 위한 整地作業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70년대에 이른바 「3대혁명소조」라는 친위대를 발판으로 정치무대에 데뷔한 金正日是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黨정치국상무위원, 비서, 당군사위원회직을 보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제2인자로 급부상하게 되었다.¹⁴⁾

특히 지난 5월 24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 金正日是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위원장은 金日成)에 선임됨으로써 軍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強化시켰다.¹⁵⁾ 이는 後繼體制구축에 있어 혹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는 變數인 軍部の 장악을 위한 事前布石으로 보인다.

金正日에 대한 호칭도 公式 文件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신문과 방송, 기타 그를 찬양하는 冊子에서는 從來 부르던 「黨中央」 「지도자」에서부터 「영도자」, 「공산주의 미래의 태양」, 「창조와 건설의 영재」 등 金日成과 같은 차원의 우상화된 호칭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狀況에 當面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이미 정치적인 過渡期에 진입하고 있다는 前提이다. 이는 權力的인 意味에서 볼 때 金日成1人독재체제로 부터 金日成父子體制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事實上 重要 變化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권력이라는 本質上의 문제에서 볼 때 金日成이 마지막 숨을 거둘때까지 권력의 이양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견지에서 ‘金日成유일체제’로 부터 ‘金日成父子體制’로의 轉移를 ‘과도기’라고 명명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金日成 死前의 ‘政治過渡期’를 北韓은 그들이 意圖했든 또는 意圖하지 않았든 對外關係의 基本原則을 수정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註 14) Dong-Bok Lee,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Korea and World Affairs*, Vol.5, No.3 (Fall, 1981), pp.415-420.

15) 「한국일보」, 1990년 5월 25일.

다. 그것은 다른 아님 金日成이 그의 權力을 北韓地域에 확립한 이래 견지하여온 ‘하나의 朝鮮’ 정책이다. ‘하나의 조선’ 정책은 기본적으로 ‘남조선 혁명’을 의미한다.

金日成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에서의 權力維持의 수단으로서 이 ‘하나의 조선’ 정책을 표면에 내세움으로써 北韓社會를 統制하고 다스려 왔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조선이 되어야 한다는 命題를 내세워 ‘남조선 혁명’과 ‘남조선해방’을 부르짖으며 政治軍事的인 動員體制를 加速化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¹⁶⁾

만일 金日成이 이 大義名分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권력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國際情勢는 北韓의 ‘하나의 조선’ 정책으로는 南北韓關係는 물론이고 그들 자신의 存立도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지난 9월 30일의 전격적인 韓·蘇修交로 北韓의 傳統的인 盟邦이자 最大의 經濟支援國인 蘇聯이 ‘두개의 조선’ 정책을 추구하고 있고 中國도 지난해의 天安門事態로 주춤하고 있던 자세를 버리고 最近 北京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한국과 貿易事務所開設을 통해 相互 교류를 확대해갈 조짐을 보임으로써 國際的인 환경여건은 더욱 ‘하나의 조선’ 정책과는 멀어져가고 있다.

北韓이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선’ 정책, 즉 기존의 統治論理를 수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政治的인 方案의 하나가 金日成이 막후에로의 후퇴를 前提, 마치 金正日에게 권력이 이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權力承繼를 가장하는 것이다. 즉, 金正日의 權力承繼를 구실로하여 책략적으로 ‘하나의 조선’ 정책이라는

註 16) 北韓 動員體制的 性格究明은 金甲喆, “體制內的 變化可能性과 承繼問題,” 「北韓」, 1980년, 4월호, pp. 74-83 參照.

딜레마를 빠져나가는 것을 말한다.¹⁷⁾

北韓이 근자에 들어와 ‘두개의 조선’ 정책이라고 반대해온 3자會談을 들고 나온 것과, 함께 지난 9월 28일 日本의 自民·社會黨合同代表團의 訪北時 北韓·日本間의 조기 修交선언에서 보듯이 그들의 ‘하나의 조선’ 정책이 변질되어 가는 조짐을 窺知할 수 있는 바 이는 過渡期的인 金父子世襲體制와 무관하지 않다.¹⁸⁾

여기서 ‘하나의 朝鮮’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特記할 것은 北韓이 對外關係, 즉 對日, 對美關係에서는 ‘두개의 조선’ 정책을 사실상 받아들일 것이나 對內的으로는 南北韓關係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하나의 조선’ 정책을 당분간 固守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짐은 이미 지난 9월 28일 북한으로 동당과 日本 自民·社會黨 代表團 訪北時 채택한 共同宣言文에도 나타나고 있다. 同宣言文 ⑤項 ‘조선은 하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 ⑦項에서는 朝·日國交樹立을 위한 ‘政府間 交渉’을 論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밖에 10월 5일 판문점에서 열렸던 UN문제협의를 위한 실무대표접촉에서 北측이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게 單一議席加入만을 되풀이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¹⁹⁾

이와 같은 二重基準(Double Standard)에 의한 ‘하나의 조선’ 정책, 즉 기존 體制理論의 變形에 대한 방패막이 구실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다름 아닌 金正日의 登場으로 인한 過渡體制인 것이다.

註 17) 李基鐸, “남북한 관계에서 본 북한의 권력승계,” 「北韓」, 1984년 9월호, pp. 92-93.

18)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26, 1984 ; 「한국일보」, 1990년 9월 30일.

19) 「한국일보」, 1990년 10월 6일자 參照

IV. 金正日과 北韓 軍部

1973年 9月 勞動黨 第5期 7次 全員會議에서 金正日이 黨조직지도 및 宣傳煽動擔當秘書로 起用됨으로써 政治一線에 出現한 以來 北韓軍部는 많은 變化를 겪어 왔다.

公式的으로는 1980年 10월에 열린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黨軍事委 제3位の 위치에 올라섰고 전술한 바와 같이 지난 5월 24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1차회의에서는 中央人民委에서 새로이 독립된 國防委員會의 제1부위원 장자리를 맡으면서 軍에 대한 영향력이 漸增하고 있다.

이러한 過程에서 빨치산抗日鬪爭世대의 人民武力部長 崔賢, 韓國戰爭世대의 人民軍總政治局長 李勇茂, 黨中央委軍事部長 太丙烈, 國家政治保衛部長 金炳夏 등이 勢力弱化 및 軟禁, 肅清, 自然淘汰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²⁰⁾

이같은 金正日의 軍부장악시도에도 不拘하고 또한 그러한 去勢作業에 대한 反撥의 一環으로 軍部の 拒否反應 可能性은 尙存한다고 볼 수 있다.

本節에서는 金正日의 權力承繼에 있어 軍部가 支持勢力으로서만 役割을 할 것이라는 通念的 假定을 一應 排除하고 否定的인 측면에서 權力承繼에 障礙要因이 될 素地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金正日의 北韓軍部와의 관계정립에 있어 가장 큰 취약점은 그가 軍事經歷이 全無한 者라는 事實이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金日成과 같은 빨치산 活動의 경력도, 祖國解放戰爭(韓國戰爭) 世代들과 같은 正規戰 遂行의 경험

註 20) 裒名五, “北韓의 黨·軍關係 : 實際와 變數,” 國際問題研究所編, 「防衛叢書」 (서울, 1986), pp.171-172.

도 없으며 過去 軍의 高位職에 奉職하였다는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 구태여 軍관계 經歷이라면 1971年 金日成호위관으로 民族保衛省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이 고작이다.²¹⁾ 이는 軍부에 대한 그의 威信이 대단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一般的으로 北韓과 같은 一黨獨裁體制下에서 軍부로 부터의 實質的인 反撥은 反對派의 대폭적인 숙청과 軍部內의 급속한 세대교체, 그리고 막강한 권한을 지닌 對軍部查察機關과 軍部사이의 갈등으로 부터 발생되는 것이 보통이다.

例컨대 1982년 4월과 5월에 걸쳐 北韓人民軍將星 10여명을 포함한 多數의 軍幹部들이 北韓을 脫出하여 滿洲의 韓人自治州로 亡命한 事實報道는 그 代表的인 것이다. 이러한 軍의 직접적인 반발은 反對派 去勢의 方法에도 물론 문제가 있으나 金正日자신의 權威가 軍內部에 있어 미약할 때 더 그리 하리라는 것은 自明하다. 한편 金正日의 最高統治權장악과 관련하여 軍部는 權力에서 경쟁자 또는 그 후원세력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

金正日의 權力承繼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軍部勢力으로는 우선 金正일에 의하여 숙청 제거당한 主된 세력인 祖國解放戰爭世代들이 있는데 이들은 現在 연로하여 직접적인 위세세력이라기 보다는 軍部內의 그들 追從勢力이 北韓의 體制變動推移에 따라 變數로 등장할 수 있다.

軍部內에서 金正日의 統治權을 위협할 만한 또 하나의 勢力으로는 金正日의 대두와 함께 부상한 新進軍幹部들을 들 수 있다. 金正日의 대두와 함께 黨과 軍部の 要職에 등장한 人物들이기는 하나 金正日의 동장이 그의 自力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金日成의 掩護下에 可能했다는 점에서 볼때 金日成의 死後나 有故時에 이들의 向背가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例컨대 이러한 가능성은 吳振宇를 비롯한 빨치산 世代

註 21) 「內外通信(綜合版)」, 제25호(1984년 2월), pp. 15.

보다는 革命 第2世代에 대하여 보다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吳克列을 비롯한 新進世代와 金正日사이의 결합이 金日成과 빨치산同僚들 사이에 존재하는 理念中心의 共感帶와는 性格을 달리하는 利益中心의 結合이라는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기인한다.²²⁾

David Albright에 의하면 共產圈國家에 있어서 軍部는 權力鬭爭의 主役으로서 작용하기 보다는 對立하는 派閥들 중에서 하나를 支持·後援함으로써 그 派閥의 權力獲得을 돕는 役割을 수행하여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³⁾ 그러나 이러한 一般論에도 불구하고 北韓社會의 特殊성과 體制內 權力承繼의 경험이나 事例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軍部の 最高統治權에 대한 直接的 挑戰의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이와같이 金日成의 死後나 有故時 軍部に 의한 挑戰의 可能性이 現實化될 경우 權力承繼의 終局的 實現은 예측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赤裸裸한 권력투쟁의 과정을 거쳐 現在의 자리를 굳힌 것이 아닌 金正日의 ‘자리’는 不安하게 될 개연성이 높으며 따라서 一連의 과정이 北韓體制變化의 빌미를 제공케 될 것이다.

北韓權力構造下에서의 軍의 位相은 그들의 黨規約이나 社會主義憲法에 잘 나타나 있다. 즉, 制度的으로 金日成은 黨規約 제3장 27조에 따라 黨總秘書長 軍事委員會委員長으로서 軍事政策執行方法의 決定, 軍수산업과 武力強化를 위한 사업의 조직 軍사력의 指導를 장악하고 있다.

또한 社會主義憲法 第93條에 따라 政權의 主席, 軍最高司令官, 國防委員會委員長으로서의 일체의 武力을 지휘 통솔하고 있다.

이처럼 金日成한사람에게 집중돼 있는 軍事體系는 北韓의 1人專制체제를

註 22) 車斗鉉, “金正日 權力承繼體制와 北韓軍部,” 「週刊國防」, 1990. 8. 13일자, pp. 12-13.

23) David Albright, “A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World Politics*, Vol. 32, No. 4 (July, 1980), p. 569.

떠받치는 支柱구실을 해왔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金이 死亡할 경우 軍이 반체제내지 개혁세력으로 나서도록 하는 잠재요인이기도 하다. 北韓이 金父子權力世襲에 있어 軍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最近 改革도미노현상이 共產圈에 擴散되면서 軍은 유일한 개혁잠재조직이자 金正日 대체세력으로 지목돼 왔다. 어느 社會든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꼽히는 것이 軍이지만 北韓에서 바깥 세상 경험이 가장 많은 집단은 軍人들로 留學生이나 海外勤勞者들보다도 훨씬 많다.

于先, 北韓은 6.25를 前後해 청년 1만여명을 蘇聯으로 보내 3년동안 고도의 軍事訓練을 받도록 한 以來 지금도 대위, 소좌 등 중간간부들을 연 평균 300~500명씩 소련군사학교에 장기 유학시키고 있다. 이들은 蘇聯에서 몇년씩 근대적 軍事科學을 배워 「蘇聯化」한 엘리트 장교들로 대부분 北韓의 1人전제체제와 권력세습준비에 批判的 視角을 지니고 있다.²⁴⁾

北韓은 또 66년 이후 中南美, 아프리카, 아시아地域 35개국가에 모두 8,000여명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해 왔다. 軍事分界線일대에서 우리측 對北放送을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것도 軍人들이다.

美國政府의 한 고위관리는 최근 상당수의 北韓軍人들이 民間 建設工事場에 兵力이 投入되고 있는데에 不滿을 품고 있으며, 소련의 최신무기수입을 열망하며 蘇聯側에 기울고 있고, 金父子승배에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평양발外信은 현지 소식통을 인용 86년과 87년 두차례 金日成반대와 軍인들이 金의 암살을 기도했다고 보도했다. 첫번째 시도는 86년 12월 金日成死亡說지전이며, 두번째는 87년 5월 北京방문후 특별열차로 귀국하던 金을 신의주 부근에서 저격했다는 것이다. 당시 金을 향해 발사된 총탄이 빗나가 경호원 한명이 숨졌고 이 事件直後 中國으로 망명한 5명의 軍고위간부가 이 事件에 연루됐다고 이 外信은 報道했었다.

註 24) 「동아일보」, 1990년 5월 11일자 參照

또한 87년 12월 中國에서 폭약과 포탄을 싣고오던 군용열차가 함북화순을 지나 영변으로 가다 폭파돼 1백 20명이 死亡하고 5천명이 부상했다는 대형 사고도 反金正日계의 사보타지였다는 관측도 있다.

金正日권력승계의 마무리작업에서 北韓은 무엇보다 군부단속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89년 12월 평양에서 人民軍幹部大會를 갖고 소장파군인들에게 政治思想作業을 강화한 것이라든가 지난 2월 金正日 生日때 北韓全域 군부대가 그에게 「충성서약」을 하도록 한 것등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V. 第2世代 「테크노크라트」의 浮上

政治엘리트의 充員에 있어서 새로이 充員되는 政治엘리트들의 性格은 엘리트集團의 구성상 變化를 가져 올 것이고 그것은 長期的으로 政治體제의 變化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中國에 가서는 社會體제의 變化까지 야기시킬 수 있다는 體制變化의 豫測과 관련을 갖게 된다.²⁵⁾

北韓의 경우, 過去 黨性이 강한 抗日빨치산世代 保守元老들이 점차 高齡化돼가면서, 特히 金正日의 登場을 前後하여 젊은 戰後世代 技術官僚의 進出이 눈에 띄게 늘어가는 것은 終局的으로 北韓體제의 變化 可能性을 提高시켜 줄 것이다.

이른바 「革命世代」는 이데올로기적 政治性이 강한 반면 「革命後世代」인 이들 技術官僚는 보다 合理的이고 實用主義的인 성향을 띠 것이기 때문이다. 黨이나 政府構造에서의 테크노크라트進出現象은 1970年 11月 노동당제5차대회 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當時 黨中央委員 90名の 성분조사에 따르면

註 25) L.G Seligman, "Elite Recruitment and Political Development," Journal of Politics (August, 1964), p.612.

約39%인 35명이 '專'에 해당하는 國家計劃, 工業, 外交, 철도, 건설, 貿易部門 等の 技術·專門人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⁶⁾ 이는 '紅'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政治黨僚가 25%内外의 23명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숫자임을 알 수 있다.

1977年 11월에 치른 第6期 最高人民會議 代議員選舉 結果에서도 科學·技術人等 專門職出身이 전체(579名)의 40.4%를 차지함으로써 1972年 12월 5期 대의원 선거以來 계속 強勢를 보이고 있다.

最近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지난 1990年 4月 22日 실시된 제9기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全體 代議員(687名)의 64.5%가 테크노크라트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⁷⁾

이번 代議員選舉의 主要한 特徵중의 하나는 대의원당선자의 약34%에 해당하는 240여명을 新人으로 기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金正日後繼 體制 구축을 위한 포석으로 선발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 新進人物들은 주로 지난 70년대이후 출몰 金正日에 대한 政治支持勢力으로 成長해 온 3대혁명소조 출신이 中心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金正日과 같은 '만경대학원'출신의 革命2世代 - 연형묵총리, 김환부 총리 等 - 가 중용되었으며 經濟·外交關聯 테크노크라트의 進出도 현저하게 눈에 띈다.

例컨대 1989年 10월 道, 市, 郡人民會議선거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權力의 中樞에서 밀려남으로 해서 권력서열이 크게 후퇴하였던 姜成山이 다시 부각되었다든지 또는 前副總理 趙世雄, 金昌柱 등이 안정을 되찾은 점을 들

註 26) 丁世鉉, "北韓 第二世代의 動態的 分析," 「北韓」, 1977年 1월호, p.74. 美國의 東北亞歐權專門家 Scalapino 교수도 테크노크라트의 開放化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Robert A. Scalapino, "Current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Problems of Communism*, Nov-Dec. 1981, p.21 및 「조선일보」, 1990.3.14 일자참조.

27) 「中央日報」, 1990.5.25.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官僚出身 뿐만 아니라 經濟테크노크라트출신으로서는 金正日측 근으로 알려져 있는 부총리 洪成南, 金渙, 朴南基, 政治局員인 徐允錫 등도 健在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24일 열린 第9期 最高人民會議 1次會議을 계기로 단행된 권력구조개편에서 重用된 가장 두드러진 人物(테크노크라트)은 韓成龍·崔英林 등이다.²⁸⁾

기계공업부문의 테크노크라트인 韓成龍은 1980년 6차黨大會에서 黨中央후보 위원으로 선출된데 이어 88년 中央委員, 政治局후보위원 및 당비서로 승승 장구한 엘리트이다. 韓은 이번에 서열 10위의 정치국원으로 도약함으로써 주목되는 인물중의 하나다.

崔英林은 70年代 黨中央委부장으로 活動하다가 80년 6차黨大會에서 政治局 후보위원으로 발탁된 실무형의 간부이다.

그는 81년 8월 政治局員 84년 4월 정무원 제1부총리등으로 활약하다가 85년 10월 돌연히 부총리 및 정치국원에서 해임된 뒤 한동안 잊혀진 인물이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갑자기 黨정치국후보위원·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 으로 再浮上한 것이다. 政治局후보위원 서열2위로 발탁된 崔泰福도 같은 테크노크라트출신으로 80년대 들어 줄곧 정무원 교육위원장을 지내다 86년 12월 黨의 教育擔當秘書로 등용된 교육전문가이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작년 11월 外交委員會를 신설한데 이어 이번에 「통일 정책심의위원회」를 新設하고 委員長에 對南專門家 尹基福(黨비서 및 조국평화 통일위원회부위원장)을 임명했다.²⁹⁾ 이는 앞으로 對南·對西方外交와 관련,

註 28) 「世界日報」, 1990.5.26 ; 「中央日報」, 1990.5.25.

29) 東京의 라디오프레스는 1990년 10월 9일 許鉸이 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직을 사임하고 尹基福당서기가 새로 위원장에 취임했다고 平壤방송을 引用 보도 하였다. 「한국일보」, 1990.10.10. 일자 參照

最高人民會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國際情勢에 對處하여 外交를 多邊化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즉 行政府의 金永南外交部長, 黨의 金勇舜外交擔當秘書, 許鎔最高人民會議 外交委員會 委員長等 한층 多元化된 채널로 全方位 外交를 추구해나가겠다는 포석이다.

尹基福은 서울에서 중학을 다니다 후에 모스크바에서 經濟學을 공부한 뒤 인민경제대학교수, 보통교육상, 재정상, 국가계획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72년 南北赤十字會談자문위원으로 對南分野에 나선이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장 및 임수경석방투쟁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이번에 留任된 政務院總理 延亨默은 이른바 革命2세대의 선두주자로서 지난 8기 최고인민회의때 서열 9位에서 6位로 格上됐으며 黨内에서는 經濟專門家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제9기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한가지 特記할 사실은 革命2世代로 88년 2월 人民軍總參謀長의 地位에서 解任됐던 吳克列이 第582호 극동선거구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것이다. 이를두고 일부에서는 吳克列이 실각된지 2년만에 재등장 또는 전면에 부상했다는 說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³⁰⁾

당초 吳克列의 解任은 그가 자타가 공인하는 金正日의 측근이며 金正日과 함께 黨高級幹部들의 子女를 위한 교육기관인 “萬景臺革命學院”출신이라는 事實, 그리고 革命 第2世代로서 金正日의 대두와 함께 權力의 核心에 등장함으로써 相互 共同運命的인 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서 일시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졌다. 많은 北韓 관측자들이 吳克列의 軍總參謀長職解任은 暫定的인 性格의 것이 강하고 그가 머지 않은 시기에 北韓 軍部内の 영향력 있는 새

註 30) 吳克列 再登場의 의미 및 제9기 최고인민회의 선거결과 분석은 金京雄, “北韓의 변화, 개혁인가 폭발인가,” 「月刊中央」, 1990년 6월호 pp.336-346 ; 金甲喆, “북한 제9기 最高人民會議와 테크노크라트,” 「月刊 한국논단」, 1990년 6월호, pp.124-133 參照.

로운 보직을 맡게 될 것이며 吳振宇의 뒤를 이어 人民武力部長의 자리에 오르리라는 豫想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權力改編에서 政治局正委員이나 後補委員(총25명)에도 들지 못함으로써 北韓의 권력서열상 再登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吳의 後任으로 革命1세대인 崔光을 再登用한 것은 그동안 北韓軍部の 第1人者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온 人民武力部長 吳振宇를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견해도 있다.

VI. 北韓의 反體制 勢力

最近 北韓에서는 東歐圈改革의 여파가 파급되지 않도록 對內的인 문단속, 즉 외부로부터의 정보차단과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反體制抵抗運動이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당황해 하고 있다.

反體制저항사건은 70년대 말에 들어 金正日이 黨權을 장악하는등 統治實權者로 浮上한 이후 더욱 증대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事件의 유형은 주로 金日成父子를 비난하는 罷라를 작성하여 몰래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場所에 살포한다든지 公共機關의 담벼락에 까지도 대담하게 부착하고 있고 또한 金日成동상이나 초상화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는 일도 있다는 것이다.

가장 조직적인 것으로는 1988년 8월 24일자 日本 「산케이」신문이 보도한 “조선인민자유동맹”의 활동이다. 이 단체는 北韓體制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 농민, 군인 등 8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地域的으로는 南浦, 元山, 淸津, 新義州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住民들의 공감을 얻기 위하여 1차적으로 식량배급량증대, 생활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北

韓여행자의 증언을 引用 보도한 바 있다.

在日동유럽 외교消息通은 금년 2월~3월 平壤市内에서 金日成초상화훼손사건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北韓當局은 이를 國事犯으로 간주, 대대적으로 조사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했다고 전한다.³¹⁾ 이소식통은 또한 작년부터 금년봄에 걸쳐 工場과 탄광에서 某種의 폭동 또는 파업이 몇건 발생하여 참가자들이 다수 연행됐으며 金日成비방빠라 살포사건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東京의 한 外信은 中國흑룡강방송보도를 引用, 平壤대학생들이 시위를 벌인데 이어 威興에서도 대규모 폭동이 발생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 통신은 폭동이 일어난 곳이 威興市 青年화학공장이며 즉시 군대가 출동하여 진압하고 60여명을 체포했다고 한다.³²⁾

또한 금년 5월 2週間 北韓의 平壤, 開城, 南浦등을 방문한 바 있는 美國 인디애나大學 Kenneth Waltz교수는 폐쇄된 北韓社會에도 主體思想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며 점차 증가일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知識層에서는 體制를 비판하고 낙후된 經濟를 부흥하기 위해 적극적인 開放政策의 必要性을 주장하는 등 내부적으로 체제개혁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듯이 보였다고 한다.

그는 外國人전용상점앞에서 만난 한 여인이 “누군 저런것 쓰고 누군 왜 못쓰느냐”라고 한탄하는데에서 北韓 住民들의 상대적인 불만이 高潮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³³⁾

한편 지난 5월 27일에는 日本 東京에서 金日成이 海外에 조직한 親北韓團體의 아성인 朝總聯이 내부분열을 보여 韓德銖의장의 반대파가 「金日成타

註 31) 「동아일보」, 1990. 4. 28.

32) 「조선일보」, 1990. 4. 21.

33) 姜信基, “북한의 반체제세력에 대한 고찰,” 「北韓」, 1990년 9월호, pp. 172-173에서 再引用.

도」궐기대회를 열기도 했다.³⁴⁾

4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주최측은 보고를 통해 金日成·金正日父子가 자기네 독재체제유지를 위해서 朝總聯을 통하여 재일동포들의 피땀어린 財産을 마구 수탈해 간다고 폭로하였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루마니아의 執權救國前線指導者 브루칸博士가 6월 13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가진 記者會見席上에서 밝힌 內容을 들 수 있다.

그는 「최근 3년간 北韓의 주요인사와 접촉한 결과 북한내에도 강력한 反金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말하고 「노동당중앙위원3명과 3명의 언론사 증진등 반체제인사를 알고 있으나 그들을 공개할 경우 계획이 수포로 돌아 갈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브루칸박사는 차우세스쿠정권아래서는 駐美·駐유엔大使와 국영TV방송사장등 요직을 역임했는데, 특히 駐美·駐유엔대사 在任時 人權改善과 차우세스쿠퇴진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가 해임됐던 人物로 상당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다.

北韓에 反體制세력³⁵⁾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政治犯수용소인 이른바 「독재대상구역」의 증가에서도 나타난다.

北韓은 50년대말부터 체제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자들을 격리시키기 위해 산간벽지에 「독재대상구역」을 설치, 운용해 왔으나 특히 80년 제6차 당대회이후 김정일 후계체제를 강행함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자 4개구역을 증설, 총 수용인원이 15만 2천명으로 4만 7천여명이 증가

註 34) 상세한 內容은 「月刊同和」, 1990년 7월호 報道參照 : “日本東京 한복판에서 열린 「金日成타도」 궐기대회”(李外善 奇稿) 및 同大會집행위원장 河秀圖氏의 報告書內容.

35) 1980年代初 北韓當局이 자체조사한 바에 의하면 북한 전체人口중에서 핵심지배계층은 28%이고 동요계층은 45%, 그리고 적대계층은 27%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김일성체제에 찬성하지 않는 인구는 전체의 72%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조기수, “北韓 政治犯收容所의 實相,” 「月刊同和」, 1990년 3월호, p. 314 參照.

한 것으로 나타났다.

北韓内の 이와같은 반체제 조직 및 의식은 현재의 북한의 강력한 감시 및 통제로 대규모로 발전되지는 못할 것이나 앞으로 북한이 對内外壓力에 굴복하여 점진적인 통제완화와 開放化추진으로 體制矛盾 및 남북경제격차등이 밝혀지거나 金日成이 死亡하여 권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東歐의 예로 보아 폭발적으로 조직이 확대되어 체제 및 政權顛覆등의 활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독재 대상구역 증가 현황

82년 4월 평가	90년 1월 평가	비 고
8개지역 10만 5천명	12개지역 15만 2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북 온성 27,000명 · 함북 회령 20,000명 · 함북 경성 15,000명 · 함남 요덕 13,000명 · 함남 정평 10,000명 · 평북 용천 5,000명 · 평북 영변 15,000명 · 자강 회천 10,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설된 지역 · 함남 덕성 10,000명 · 평남 개천 15,000명 · 평남 북청 5,000명 · 자강 동신 7,00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개 지역 4만 7천여명 증가

출처 : 서울신문 1990년 1월 18일자

VII. 結 論

앞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金正日의 權力承繼는 北韓社會의 政治·軍事的變動要因으로서 가장 原初的인 빌미를 提供하는 事件이요 懸案이다.

물론 그러한 權力承繼問題로부터 派生되는 여러 變數가 顯在化된 것이 아니고 潛在的인 要因으로 당분간 남아 있다고 치더라도 언젠가는 前面에

나설 개연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北韓의 改革이나 開放 또는 體制變化을 일으킬 수 있는 方法은 크게 보아 세가지로 集約될 수 있다.

즉, 첫째가 루마니아식 인민봉기, 둘째는 테크노크라트등 專門官僚에 의한 自體 改革, 그리고 끝으로 權威主義政體下에서 發生하는 軍事쿠데타이다.

위의 세가지 可能性을 놓고 볼 때 가장 개연성이 높은 방법은 아이러니 같아게도 軍事쿠데타이다. 이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北韓政權이 金正日의 軍部長악을 위해 그나름대로 주도면밀한 준비계획을 집행해나가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의 變數는 金日成의 死亡與否이다. 아들의 軍부장악은 아버지인 金日成이 후견인으로 있는 동안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루마니아식 인민봉기는 북한에 폐쇄된 사회체제의 특수성에서 볼 때 가장 실현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위에서 言及한 대로 一般住民들의 不滿이 漸增할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이지만 이를 ‘組織化’할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군사쿠데타 다음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은 테크노크라트에 의한 官僚改革인데 여기에는 그들 자신의 既得權(Vested Interests)을 다치지 않아야 하는 限界가 있다.

結論的으로 말해서 北韓의 變化는 金日成死後를 前後한 政治危機時에 軍事쿠데타가 먼저 일어나고 뒤이어 테크노크라트의 농소·지지를 받게됨과 同時에 民중봉기가 뒤따르는 형태로 거의 같은 시기에 順次的으로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現代에 있어 이러한 類型의 政變이 일어나는 例를 든다면 多數의 中南美國家에서 軍部쿠데타에 이어 官僚的 權威主義政府(Bureaucratic-Authoritarian Regime)가 出現하며 뒤이어 民衆主義(Populism)가 대두되는 樣相을 들 수 있다.

第5章 北韓의 對南政策變化要因 分析

— 崔完圭 (慶南大 教授)

I. 序 論	131
II. 對南政策의 一貫性	133
1. 非政府次元의 對話 및 統一協商會議	134
2. 外勢排擊과 駐韓美軍撤收	135
3. 3大革命力量 強化	137
4. 聯邦制	140
5. 一貫性の 羈束要因 : 北韓의 對南政策 目標과 統一論理 ...	145
III. 對南政策의 變化誘引 要因	150
1. 變化의 誘引要因	152
2. 南北韓 社會內의 變化誘引 要因	155
IV. 結 論	165

I. 序 論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남북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對內外的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동안 美國과 蘇聯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 양진영간에 추진되어 온 긴장완화정책으로 냉전체제는 공식적으로 청산되었다. 그리고 전후 냉전체제의 한쪽 당사자였던 蘇聯을 비롯한 현존 社會主義圈 국가들은 급격한 변혁의 와중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은 하나의 독일로 재통일되는 감격을 맛보았다.

이와같은 범세계적 國際體制의 지각변동은 자연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지역체제를 변모시키고 있다. 이미 南韓은 오랫동안 적대관계에 있었으며 한반도 분단의 장본인중의 하나인 蘇聯과 수교했고 中國과도 본격적으로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역으로 北韓도 日本과 수교회담을 진행중에 있으며 美國과는 비공식적 접촉을 통해 서로의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한편 남북한관계를 의미하는 국지체제(local System)와 南北韓 쌍방의 국내 상황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선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고위급회담(총리회담)이 열림으로써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南北關係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南韓의 대북인식도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미 노대통령은 「7.7선언」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민족공동체의식을 강조하면서 北韓을 더이상 경쟁과 부정되어야 할 敵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국제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南北韓의 국내체제도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北韓은 蘇聯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혁과 개방 추세와 국내경제상황의 어려움이라는 2重의 변화압력을 받고

있다. 南韓의 경우도 민주화의 진통과정에서 통일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냉전의식의 청산 필요성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같은 변화가 北韓의 대남정책¹⁾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1948년 9월 9일 北韓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北韓은 '남조선 해방을 통한 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정책의 기본목표를 본질적으로 수정한 적이 없다. 다만 그와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적 차원(전략, 행동지침, 전술, 선전)에서만 변화가 있었다. 韓半島 분단의 일차적 원인인 냉전이 구조적으로 소멸되고 동북아의 지역체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남북한관계에도 解氷의 무드가 스며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여전히 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정책의 목표에 집착하고 있는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와같은 정책목표의 변화를 誘引(induce)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바로 이와같은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北韓의 대남정책 변화²⁾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은 대외적 요인과 북한 자체내의 요인, 그리고 남한내의 요인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외적 요인보다는 남북한내의 요인 특히 南韓自體內的 要因에 대한 논의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³⁾.

- 註 1) 이 논문에서는 對南政策과 統一政策(北韓)이란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했다. 엄밀하게 보면 統一政策보다는 對南政策이 더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北韓의 對南政策 목표와 統一政策 목표가 동일하다는 점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2)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화(Change)의 概念은 정책목표나 그 목표를 정당화시켜 주고 있는 統一論理의 포기나 수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北韓 대남정책의 전략, 행동지침(operational direction), 전술, 선전차원의 변화를 본 논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변화'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 3) 北韓의 대남정책 變化를 南韓 자체내의 요인과 관련시켜 논의하고 있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한의 국내정치 변화가 북한의 대남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는 Kim Yung Myung, "The Impact of South Korean Politics Upon North Korea's Reunification Policies", *Korea and World Affairs*, Vol. VI, No. 2 (Summer 1987), pp. 304-330를 들 수 있다.

II. 對南政策의 一貫性

北韓의 대남정책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상당한 정도의 일관성을 견지해 오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政策目標, 그리고 이 목표와 연관된 몇가지 전략과 대남제의 및 요구사항은 본질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고병철교수는北韓의 통일정책중에서 不變的인 要素는 1) 통일의 선결조건으로서의 南韓의 민주화 요구, 2) 외국군대 철수후 자주통일, 3) 3대혁명역량전략, 4) 제정당사회단체 대표들간의 대민족회의, 5) 연방제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⁴⁾ 이 요소들은 주로 南韓의 革命力量을 강화시키는 것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北韓 대남정책의 일관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배경요인을 北韓이 정권수립이후 지금까지 제시해 온 각종의 統一方案과 대남제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 보기로 한다.

北韓의 대남정책은 대내외적 狀況變化에 따라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몇 단계의 변화를 거쳤다. 우선 정권수립 초기(1948~1950)에는 대남정책의 중심이 혁명기지의 건설 및 강화에 있었으며 1959년대와 60년대 초는 무력통일과 平和攻勢에 치중하였다. 그리고 이른바 대화의 시대라고 불리는 1970년대에는 대민족회의 소집과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강조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였고 北韓은 이 방안을 지금까지 계속 고수하고 있다.

北韓은 이와같이 시기별로 대남정책의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으나 몇 가지

註 4) 高秉哲, "統一政策과 南北關係",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편), 「北韓의 오늘과 내일」(서울: 法文社, 1982), pp. 288-290.

사항만은 시기와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계속 주장하고 있다.

1. 非政府次元의 對話 및 統一協商會議

우선 北韓의 대남정책중에서 가장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요소는 통일논의를 위한 南北韓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의 개최 요구이다. 이 요구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회의의 명칭과 조건, 그리고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담은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北韓이 南北韓 각계 각종 대표들로 구성된 統一協商會議의 개최를 처음 제의한 것은 1948년 3월 25일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중앙위원회 26차회의에서 채택된 ‘南朝鮮 政黨·社會團體에 告함’이라는 제하의 결정서를 통해서 었다. 그후 기회있을 때마다 통일협상회의의 개최를 주장해 온 北韓은 1990년 5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1.2차회의를 통해서 각계 각종의 민중이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全民族的 對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北韓이 1948년 3월 全 朝鮮 政黨, 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의 개최를 주장하면서 내세운 협의내용은 국내정치정세 심의, 국토양단기도의 파벌, 그리고 민주주의통일국가 수립촉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의 채택 등이었다. 그후 北韓은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회의의 개최를 계속 제의했다. 예컨대 1950년 6월 7일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 中央委員會議의 호소문을 통해서 南北 민주주의 정당·사회단체 대표자협의회를 열어 평화통일의 모든 필요한 조건과 수속을 협의 결정하자고 제의한것을 비롯해서 1954년의 南北 정당사회단체대표자 연석회의, 1971년 4월의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연합회의, 1966년 9월의 南北朝鮮連席會議, 1971년 4월의 南北朝鮮 政治協商會議, 1973년 6월의 大民族會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北韓이 정당 및 사회대표자회의의 필요성과 구성원의 범위 등을 보

다 구체화시킨 것은 대민족회의 소집 제안을 통해서였다. 김일성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北과 南의 광범한 인민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거족적인 애국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⁵⁾ 강조하면서 이른바 自主的 平和統一 5대 강령중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대민족회의 소집을 채택하였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北과 南사이의 대화가 다만 北과 南의 당국자들사이의 범위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全民族的인 범위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北半部の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과 같은 北과 南의 각계 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며 여기에서 나라의 통일문제를 광범위 협의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⁶⁾

統一問題는 전민족적 성격을 갖고 있기때문에 南北韓의 정부당국자만의 대화만이 아니라 각계 각층 인민들과 각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망라된 회의를 통해서만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이 北韓이 대민족회의 소집을 중시하는 기본논리이다. 北韓은 이 논리를 바탕으로 대민족회의 소집을 제의한 이후에도 1982년 2월의 南北政治人 100인 연합회의, 1983년 1월의 南北 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앞에서 잠깐 언급한 1990년의 민족통일협상회의 등 非政府次元의 남북대화에 끈질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 外勢排擊과 駐韓美軍 撤收

北韓의 대남정책중에서 비정부차원의 대화 못지않게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은 자주통일론에 입각한 외세배격, 그중에서도 특히 駐韓美軍의 철

註 5) 김일성, 「통일전선사업에 대하여」(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p.456.

6) 위의 책, p.457.

수 주장이다. 北韓은 統一의 근본적 장애요인의 하나가 주한미군이라고 간주하면서 끊임없이 미군철수를 요구해왔다. 金日成은 1948년 5월 8일 ‘金九와 한 담화’를 통해 “오늘 우리 나라는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미군이 南朝鮮을 강점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⁷⁾라고 지적하면서 우리민족 최대의 과업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독정부조작책동을 지지파탄시키고 민주주의적 원칙에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절대로 외세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민족의 분열을 막고 조국을 통일해야 한다”⁸⁾고 주장하였다.

北韓政府가 공식 출범하기전에 이미 천명된 자주통일론과 南韓으로부터의 ‘미제국주의 세력’의 철수요구는 그후 金日成의 통일관계연설이나 통일정책, 그리고 대남제의 및 남북대화의 主 議題로서 계속 제기되었다. 예컨대 金日成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 각종 회견및 서한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주통일의 당위성과 주한미군 철수주장을 해왔다. 또한 北韓은 통일의 선결과제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인 하나로 예의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들고 나왔다. 1972년의 남북대화 과정에서도 北韓은 南北間에 합의한 자주통일의 원칙에 따라 미군은 南韓에 더이상 주둔할 명분을 상실했으므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이 南韓에 의해 거부되자 대화를 중단시켰다. 그후 北韓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의 前提條件의 하나로 미군철수를 거론했고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의 기초연설에서도 다시 한번 외국무력의 철수문제를 제기하였다.

註 7) 위의 책, p. 240.

8) 위의 책, p. 242, p. 248.

3. 3大革命力量 強化

北韓이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하여 1960년대부터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3大革命力量(북조선 혁명역량, 남조선 혁명역량, 국제혁명역량)의 강화전략이다. 이 세가지 혁명역량중에서도 南朝鮮革命力量強化 戰略은 北韓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대남전략이다. 3대혁명역량의 강화전략이 구체화된 것은 1964년 2월 27일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金日成이 한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는 제하의 연설을 통해서 였다. 동 연설에서 金日成은 “우리나라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민족해방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세가지 혁명역량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⁹⁾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北朝鮮 革命力量은 “공화국 北半部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¹⁰⁾을 의미한다. 그런데 金日成은 政治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혁명의 지도적 역량인 朝鮮勞動黨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모든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우는 것”¹¹⁾이 필요하며 經濟力量의 강화를 위해서는 자립적 민족경제로선을 토대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고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등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軍事力量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4대군사노선의 방침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¹²⁾

註 9) 金日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9), p. 265.

10) 위의 책, p. 268.

11) 위의 책, p. 268.

12) 위의 책, p. 271, p. 272.

南朝鮮 革命力量은 한마디로 南韓內에서 자생적인 혁명세력을 부식시켜 이들로 하여금 내부혁명을 일으켜 공산화통일을 달성하려는 혁명전략이다. 金日成은 “지금 南朝鮮에는 北朝鮮보다 두배나 많은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많은 南朝鮮 인민들의 투쟁을 대신하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적극지원하여 그들 자신이 투쟁에 일어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南朝鮮의 모든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 일어설 때 그것은 무서운 힘을 낼 것이며 위대한 승리를 이룩할 것입니다.”¹³⁾라고 말하면서 南韓自體內의 혁명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와같은 혁명전략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혁명의 主力軍(노동자, 농민을 중심으로한 기본계급과 맑스-레닌주의당)을 튼튼히 꾸리고 근로인민대중을 생취하며 단련된 동무들을 중심으로 指導核心을 이루고 광범한 군중단체들을 조직하여 조그마한 經濟鬭爭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대규모적인 革命鬭爭을 벌리도록 해야 한다¹⁴⁾고 주장한다. 또한 南朝鮮의 각계 각종 군중을 統一戰線에 망라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방면에서 反革命力量을 약화시킬 것을¹⁵⁾ 강조하였다.

國際革命力量은 미제국주의세력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데 그 초점이 있다. 金日成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고 제국주의세력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투쟁하는 나라들의 인민들을 지지하며 新生獨立國家들, 中立國家들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이 나라 인민들에게 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알려주고 지지를 얻도록 해야한다¹⁶⁾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단결하고 제국주의자들 사이의 갈등과 모순을 이용하여 國際舞臺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최대한으로 고립시켜야 한다¹⁷⁾고 강조하고 있다.

註 13) 위의 책, p. 275.

14) 위의 책, p. 275-280.

15) 위의 책, p. 279-280.

16) 위의 책, p. 281.

17) 위의 책, p. 281.

대남전략의 공간적 노력배분을 北韓, 南韓, 國際社會로 나눈 3大革命力量戰略, 특히 그중에서도 北朝鮮 혁명역량은 1945년 10월에 개최된 北朝鮮 5道黨責任者 및 熱誠者대회에서 채택된 민주기지노선¹⁸⁾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北韓은 분단이후 1960년대 초까지 北半部에 혁명기지를 건설, 강화하고 이 기지에서 배양된 혁명역량으로 南韓을 해방시킴으로써 조국통일을 성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北韓은 점차 그들 자체내의 혁명역량만을 갖고서는 南朝鮮 공산혁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北韓은 이미 韓國戰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인민의 적극적 호응이 없었음을 알았고 휴전이후 그동안 南韓에서 활동하던 공산세력마저 거의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4.19혁명이후 北韓의 이와같은 인식은 보다 확고해졌다. 1961년 9월 11일 로동당 제 4차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서를 통해 金日成은 “4월 봉기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¹⁹⁾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편 “혁명적 당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 균중인 로동자, 농민이 항쟁에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월봉기는 철저히 조직적으로 전개되지 못하였으며 南朝鮮 인민들은 그들이 흘린 피의 대가를 미제와 다른 주구들의 손에 빼앗기지 않을 수 없었다”²⁰⁾고 지적했다.

北韓은 이와같은 대남인식을 전제로 1964년 2월 3대혁명역량강화전략을 표방한 이래로 南朝鮮혁명역량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후 北韓은

註 18)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김남식, “北韓의 통일전략과 통일방안: 통일전략으로서의 민주기지노선과 지역혁명론 그리고 통일방안으로서의 총선안과 연방제”, 「사회와 사상」 1988년 9월 창간호, pp.108-118을 참조.

19)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p.221

20) 위의 책, p.226.

先南朝鮮革命 後統一論을 계속 견지하였다. 예컨대 金日成은 1965년 인도네시아 알리아트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우리 당의 임무는 모든 힘을 다하여 南朝鮮에서 혁명역량을 빨리 장성시키는 것”²¹⁾이라고 강조했다. 1970년 11월에 열린 로동당 5차 당대회에서도 南半部의 혁명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南韓에서 혁명의 주력군이 될 통일혁명당이 1964년에 이미 조직되었고 1969년 8월에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오면서 北韓은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내놓고 정부당국자간의 대화도 시작했으나 이것이 곧 南朝鮮혁명전략의 수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제 통일방안이나 대화는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나, 미군철수를 유도하는 일종의 行動方針(Operational direction)이지 대남혁명전략의 변화를 시사한 것은 아니었다.

4. 聯邦制

北韓이 제안한 南北聯邦制 통일방안도 1960년 8월 처음 주장한 이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내용과 강조점을 달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반복 제의 하고 있다는 점에서 北韓의 대남정책중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이다. 北韓은 국제법상 국가통합의 한 유형인 연방제를 처음에는 통일의 과도적조치로서 제기했으나 1980년 10월에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서는 연방제 그 자체가 최종 統一國家 形態라고 주장하였다.

金日成은 1960년 8월 14일 해방 15주년 경축대회의 연설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반드시 자주적으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²²⁾고

註 21) 위의 책, p.330-331.

22) 「김일성 저작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243.

강조하면서 만약 남한이 이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선 과도적 대책으로서 南北朝鮮의 연방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金日成은 연방제를 추진하는 방식으로서 “당분간 南北朝鮮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을 보존하고” 이 원칙에 의거하여 “두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南北朝鮮의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자”²³⁾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 연방제안은 동년 11월 최고인민회의 제 2기 8차회의에서 최용건의 보고를 통해 좀더 구체화되었다. 최용건은 연방의 대표기구인 최고인민위원회는 南北 쌍방정부가 임명하는 같은 대표로 구성해야하며 당면과제는 외교, 통신, 우편 및 문화기능과 같은 일반 국가기능을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동 위원회에서 취급할 모든 문제는 평등의 원칙(양측이 거부권을 갖는)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²⁴⁾

60년대의 연방제안은 1962년 10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에서 행한 金日成의 演說에서 다시 제기되었는데 이 때의 연방제안에는 외군철수와 남북간의 교류 및 상호협조 등 연방제 실시의 先決條件이 포함되었다.

北韓이 1960년대 초에 집중적으로 거론했던 연방제안은 1961년 5월 南韓에서 군부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이 일체의 통일논의를 봉쇄하고 「先建設, 後統一論」을 통일정책의 근간으로 내세우자 소강상태로 들어갔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北韓은 연방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했다.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외상 허담은 현 국제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키는데 대하여라는 제하의 보고를 통해 60년대의 연방제안과 대동소이한 연방제실시를 주장했다. 이 연방제안은 1973년

註 23) 위의책, p. 243-244.

24) 「조선중앙년감」 1961년판(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2), pp. 27-42.

6월 23일 제코공산당 서기장 후사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행한 金日成의 演說에서 좀더 구체화된 형태로 제기되었다. 동 연설에서 김일성은 자주적 평화통일 5대 방침중²⁵⁾의 하나인 연방제를 거론했다. 여기서 김일성은 연방제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大民族會議 소집을 주장했고, 연방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며 이 국호로 南北韓이 단일로 유엔에 가입하자고 제안했다.

北韓이 통일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연방제는 해를 거듭할 수록 구체화되어 결국 연방제 실시 그 자체를 最終 통일형태로 간주하게 되었다. 1980년 10월 10일 개최된 로동당 제6차당대회에서 행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서를 통해 金日成은 종전 연방제와는 다른 새로운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안을 내놓았다. 이 안의 전제와 원칙, 그리고 성격,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우리 당은 北과 南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民族 統一政府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地域自治制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확립하여 조국을 統一할 것을 주장합니다.”

聯邦 형식의 統一國家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海外同胞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를 지도하며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註 25) 5대방침은

- 1) 북남간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
 - 2) 북남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 3) 북남의 광범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의 참여.
 - 4)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연방제 실시,
 - 5) 두개의 조선으로의 분열방지 등이다.
- 김일성, 「통일전선사업에 대하여」, pp. 454-459.

연방상설위원회는 연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전 民族의 團結, 合作, 統一의 念願에 맞게 공정한 원칙에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이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사이의 합작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연방국가의 국호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 統一國家의 이름을 살리고 民主主義를 지향하는 北과 南의 공통한 정치이념을 반영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하는것이 좋을 것입니다.²⁶⁾

金日成은 이와같은 연방제안을 제안하면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다음과 같은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하였다.²⁷⁾

- 1)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의 견지와 자극적 정책 실시.
 - 2) 전지역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民主主義의 실시와 민족 대단결 도모.
 - 3) 北南間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 실시.
 - 4) 과학·문화·교육분야에서 북남간의 교류와 협조 실현.
 - 5) 끊어졌던 교통과 체신의 연결 및 이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 6) 노동자·농민·근로대중과 전체 인민의 생활안정 도모.
 - 7) 북남간의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민족연합군 창설.
 - 8)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의 옹호 및 보호.
 - 9) 두 지역정부의 대외활동의 통일적 조절.
 - 10) 모든 나라들과의 우호관계 발전과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 실시.
-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이 연방제안은 기존의 연방제안

註 26)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

27) 위의 신문.

과는 몇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聯邦制實施 자체를 완결된 형태의 통일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종전의 1국가 1체제 완전통일론을 1국가 2지역 自治政府聯邦國家 統一論으로 수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연방정부와 지역자치정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셋째, 연방국가의 국호에 '民主'라는 단어를 추가하고 그 국가의 정치이념을 민주주의로 제시하고 있다.

北韓은 완결된 統一형태로서의 연방제를 제시하게 된 이유로서 南北韓間의 체제의 현격한 차이를 들고 있다. 北韓에 의하면 1949년경만 해도 쌍방간의 체제의 차이가 비교적 적어서 쉽게 극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체제의 차이가 심화되어 선거를 통한 즉각적인 통일정부 수립이 불가능해져서 잠정적인 조치로서 연방제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도 쌍방간의 체제의 차이가 감소되기는 커녕 더욱 심화되어 가기 때문에 잠정적인 연방제 실시를 거친 統一을 포기하고 南北 雙方의 현존체제를 인정하면서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작을 통한 새로운 연방제 통일안을 내놓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金日成은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서에서 연방제안을 거론하기에 앞서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⁸⁾

1) 南韓社會의 민주화 : 南朝鮮에서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적 악법폐지, 폭압적 통치기구 철폐, 제정당 사회단체 합법화와 이 단체 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체포 투옥된 민주인사와 애국적 인민의 석방

註 28) 위의 신문.

2) 긴장상태 완화와 전쟁위험 제거 : 주한미군의 철수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3) 美國의 南韓에 대한 내정간섭배제 : 단일민족을 갈라 놓으려는 두개의 조선정책포기

金日成은 동 보고서에서 이 조건이 연방제 실시의 先決條件임을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연방제 자체가 완결된 통일국가 형태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결국 세가지 조건은 연방제가 실시되기에 앞서서 해결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1980년 10월 처음 제기된 이후 선결조건의 부분적 완화와 약간의 내용 보완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北韓의 대표적 통일방안이다. 北韓은 이 연방제를 제기한 초기에는 南韓政府와의 대화를 원칙적으로 거부했으나 1984년 1월 3자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이 原則을 수정할 뜻을 시사했다. 그리고 연방국가의 국호에서 '고려'라는 명칭을 반드시 고집하는 것이 아니며 최고민족연방회의와 연방상설위원회 의장과 위원장을 남과 북이 윤번제로 한다는 등의 내용을 추가했다.²⁹⁾ 동 연방제는 1990년의 金日成 신년사와 9월의 남북고위급회담의 북한측 기초연설에서 그들의 대표적 통일방안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5. 一貫性的 霸束要因 : 北韓의 對南政策 目標와 統一論理

北韓이 대내외적 상황과 통일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몇가지 주장과 전략, 그리고 통일방안의 실현에 집착하고 있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 불변적 요소들이 北韓이 설정한 대남정책 목표와

註 29) 김남식, 앞의 논문, p.118.

이 목표에 正當性의 外皮를 씌워주고 있는 統一論理에서 연역되어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對南政策 목표와 통일논리 자체가 本質적으로 수정되지 않는한 이 요소들은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같이 北韓이 설정한 대남정책의 기본목표는 “南朝鮮解放을 통한 공산화통일”이다. 이 목표의 구체적 내용은 北韓權力의 핵심기관(적극적 지배역할의 담당기구)인 朝鮮勞動黨의 규약속에 명시된 勞動黨의 존립목적에 잘 나타나 있다.

“...朝鮮 勞動黨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 民主主義 혁명 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³⁰⁾

이와같은 목표는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논리의 핵심인 ‘전조선혁명론’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북한에 의하면 “남조선혁명은 아직도 외제제국주의의 예속밑에 있는 우리나라 영토의 절반과 인구의 3분의 2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全朝鮮革命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다.”³¹⁾ 北韓은 1945년 일본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한반도가 해방되었을 때 北半部는 인민이 주인이 되는 인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완전 해방되었으나 南半部는 日帝대신에 美帝가 강점함으로써 완전히 해방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선혁명의 기본임무는 “미제국주의 침략세력과 그 세력을 부식하며 그 동맹자로 되고 있는 남반부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친미파, 민족반역자들을 타

註 30) 로동당 당규약은 세차례에 걸쳐 개정(1961. 9. 18개정, 1970. 11월 개정, 1980. 10월 개정)되었으나 최종목적(공산주의사회 건설)은 한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조선로동당 규약전분은 平和統一研究所, 「北韓概要」(서울: 平和統一研究所, 1986), pp. 339-340참조.

31) 「김일성저작선집」 제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2), p. 229.

도하고 남반부인민들을 제국주의적 및 봉건적 압박과 착취에서 해방함으로써 조국의 民主主義的 統一과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는데 있다”³²⁾는 것이다.

北韓은 이처럼 대남정책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한 민족해방의 연장선에 들어서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그 목표의 民族的 명분을 확보하려고 한다. 사실상 북한은 이 명분을 바탕으로 지난 45년간 강경한 대남정책을 고수해 왔다. 특히 金日成은 “자신의 항일무장 혁명기를 회상하면서 그가 北韓의 인민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을 믿고 그 해방된 조국의 북반부에는 社會主義정권을 수립하는데 성공했으므로, 이제 그의 여생에 남은 과제중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이 ‘강점’하고 있는 南韓의 인민을 해방하여 조국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³³⁾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北韓이 ‘전조선혁명론’의 틀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논리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韓半島의 분단은 ‘외부세력’(미제국주의)과, 이 세력의 지원을 받는 南韓內의 ‘반동 부르조아’세력(지배세력)이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것이다. 北韓에 의하면 ‘美帝’의 南朝鮮 강점과 식민지정책만 없었다면 분단의 비극은 애초부터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北韓은 통일문제를 단순히 분단된 민족사회를 재통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美帝’때문에 다 성취하지 못한 민족해방과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완성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北韓에 의하면 민족해방과 人民民主主義革命은 南朝鮮革命의 핵심적 요소로서 전자는 ‘美帝’와 ‘南朝鮮人民’사이의 ‘민족적 모순’을 해결하는 혁명이고 후자는 ‘美帝’를 등에 업고 있는

註 32)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p137.

33) 서대숙, “북한은 어디로: 김일성 이후의 북한의 변화”, 「계간사상」 1989년 가을호, pp.105-106.

‘국내반동세력’(지배세력)과 ‘남조선인민’들 사이의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혁명이다.³⁴⁾ 北韓은 ‘민족적 모순’과 ‘계급적 모순’이 해결되면 남한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인민정부가 수립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모순관계가 없는 南北韓의 인민정부간에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통일이 가능하며 그 때 비로소 ‘전조선혁명’은 완성된다고 믿고 있다.

셋째, 北韓은 統一問題를 이른바 ‘하나의 조선론’의 틀속에서 다루어 오고 있다. 北韓에 의하면 “남조선에 수립된 역대정치기구는 미제의 신식민주의통치를 가리기 위한 병풍에 지나지 않으며…그 어떤 자주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정권”³⁵⁾이다. 따라서 南韓 자체를 독자적으로 주권을 갖는 국가적 실체로 인정할 수 없으며 한반도에는 ‘하나의 조국’,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 北韓은 이 논리를 바탕으로 통일은 1민족 2국가를 1민족 1국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된 1국가를 다시 통일된 1국가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넷째, 北韓은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존의 통일논리를 주체사상과 접목시키고 있다.³⁶⁾ 北韓에 의하면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요구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위업의 위치규정에서뿐만 아니라 이 이론의 주요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南朝鮮革命과 조국통일의 성격규정에도 빛나게 구현되고 있다”는 것이다.³⁷⁾ 주체사상에서는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그 나라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따라서 “南朝鮮革命은 남조선에서 억압자를 반대하고 자주성을 찾기 위한 남조선인민들 자신의 사업이며 그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기

註 34)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 4.

35) 위의 책, p. 36.

36) 이에 대해 자세한 논의는 위의 책, pp. 1-12 참조.

37) 위의 책, p. 3.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할 혁명³⁸⁾이다. 또한 주체사상에서 想定하고 있는 혁명은 ‘인민대중’의 해방을 뜻하는데 이때 그 ‘인민대중’의 범주에는 南韓의 ‘인민’도 포함된다. 이것은 곧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해서는 南朝鮮革命의 성공을 통한 조국의 공산화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北韓이 이와같은 통일논리를 바탕으로 ‘南朝鮮解放을 통한 공산화통일’이라는 대남정책 목표를 설정했다. 그리고 이 목표는 분단이후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번도 수정된 적이 없다.北韓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때 무력통일전략을 사용했으나 실패했다.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한 이 전략이 실패한 이후에도北韓은 共產化統一이라는 정책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北韓이 표면적으로는 平和協定締結, 不可侵宣言, 南北對話, 軍隊縮小, 그리고 연방제안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그들의 최종 목표를 포기하거나 수정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勞動黨 당규약상의 존립목적에 나타난 최종목적 자체가 불변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1961년 9월 18일에 채택된 勞動黨 규약에 명시된 전국적 범위에서 ‘공산주의 사회 건설’이라는 최종목적은 1970년 11월 勞動黨 5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에서도 그대로 있고 1980년 10월의 6차 당대회의 개정규약에서도 변화가 없었다³⁹⁾. 특히 6차 당대회에서는 1민족 1국가 2 지역체제 방식의 통일을 의미하는 高麗民主聯邦制 통일방안을 제시하면서도 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임을 강조하고 있다.

註 38) 위의 책, p. 4.

39) 1980년 10월에 개정된 규약에서는 최종목적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추가되었다.

Ⅲ. 對南政策의 變化誘引 要因

일반적으로 北韓의 대남정책을 논의할 때 정책의 일관성과 더불어 變化의 要素들이 지적되고 있다. 흔히 變化의 要素로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1) 對話 상대방의 설정기준, 2) 統一段階 설정기준의 완화, 3) 통일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우선순위의 變化, 4) 暴力依存度の 비중, 5) 통일과 관련된 言動의 矛盾性 등이다⁴⁰⁾.

사실상 北韓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대남전략을 수립하고 통일방안을 제시해 왔다. 예컨대 분단 초기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혁명기지노선 전략을 바탕으로 남북총선안과 무력통일을 관철하려고 했으며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는 地域革命 전략에 입각해서 과도적 연방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같은 지역혁명 전략의 틀속에서 종래의 연방제와는 달리 統一의 최종형태를 의미하는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마디로 北韓의 대남전략이 「先北朝鮮革命力量強化 後完全統一」에서 「先民族解放人民民主主義革命 後完全統一」 노선을 거쳐 「先民族自主政府樹立 後聯邦國家 創設(완전통일)」노선으로의 變化를 의미하는 것이다.

北韓의 對南戰略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變化는 北韓이 연방제 자체를 과도적 조치가 아닌 통일국가의 최종형태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통일방안은 종래의 1국가 1체제에로의 완전 통일방안을 폐지하고 1국가 2지역자치정부를 토대로 한 聯邦國家 창설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註 40) 고병철, 앞의 논문, p. 288, pp. 290-292.

고병철 교수는 北韓이 연방제 자체를 최종 통일형태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전략적 목표가 패권적 통일로부터 同等 혹은 平等에 기초한 통일로 수정 내지 격하된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修正的 假說(revisionist hypothesis)을 제시하고 있다.⁴¹⁾

北韓은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이후부터 민족해방투쟁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는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종래의 입장을 다소 완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안하면서부터는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분리시켜 인민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닌 정권이 아닐지라도 民族解放의 課題를 수행할 수 있는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統一 戰線에 기초한 민간 민주정권, 다시 말해 人民大衆에 의해 뒷받침되는 민족 부르조아적 성격의 자주적 민주정신이 수립되면 통일이 달성될 수 있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이와같은 사실이 곧 北韓이 종래의 대남정책 목표나 통일논리를 수정하거나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北韓이 통일의 최종 형태로 연방국가 창설을 제의한 것은 南韓에서의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성취를 연방제를 통한 統一 以後의 과제로 유보했기 때문이다. 北韓은 南韓에서 '미제국주의세력'과 '남한인민'사이의 民族矛盾이 해결되면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1국가 1체제로의 통일은 불가능하지만 1국가 2지역자치정부 형태의 통일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것 같다. 北韓은 현실 여건상 남조선혁명을 통한 공산화통일이 즉각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민족모순의 해결을 통해 연방국가 형태의 통일을 추진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후에 北韓의 주도하에 南韓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일으켜

註 41) 고병철, "서울올림픽 이후의 북한의 통일전략", 「서울올림픽 이후 한반도통일환경과 남북한 평화체제」(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197-217.

42) 김세균, "통일정책", 혁명(편), 「북한개론」(서울: 을유문화사, 1990), p. 661.

최종적으로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려고 한다.

1. 變化의 誘因要因

본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화(대남정책)의 개념을 기준으로 할 때⁴³⁾ 北韓의 대남정책은 분단이후 지금까지 별 다른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北韓의 대남정책이 변화보다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對南政策 目標와 統一論理가 수정 내지 포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北韓은 왜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와같은 목표와 통일논리를 고수하고 있는가?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南朝鮮 解放을 통한 전조선혁명의 완수를 북한체제의 存在根據의 상정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남조선 해방을 통한 공산화 통일을 民族聖業으로 내세우면서 전쟁, 건설, 唯一支配體制의 강화, 그리고 심지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궁핍까지도 통일을 위하여라는 명분하에 정당화시켜 왔다. 北韓에서는 통일이 인민을 동원하고 일체화시키는 일종의 정치이데올로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기존의 통일논리가 主體思想과 接木됨으로써 이와같은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⁴⁴⁾ 주지하듯이 오늘날 北韓에서는 마르크스레닌주의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이 上位에서는 이데올로기의 位相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⁴⁵⁾ 그런데 주체사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혁명은 '인민대중'의 해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때의 '인

註 43) 본 논문 註2) 참조.

44) 허종호, 앞의 책 참조.

45)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崔完圭, "이데올로기의 위상변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주의", 「북한사회의 구조와 변화」(서울: 정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87), pp.13-35 참조.

민대중'은 南韓의 인민대중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남조선 해방(남한의 근로인민대중의 해방)을 통한 공산화 통일을 포기하는 것은 혁명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곧 김일성의 唯一支配體制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주체사상의 存在理由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결국 이와같은 사실은 北韓에서 주체사상이 존속하는 한 기존의 대남정책목표와 통일논리는 수정이 나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둘째, 北韓은 그들이 설정한 통일논리에서 想定하고 있는 문제상황이 南韓社會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 수록 그러한 상황이 만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같은 북한의 對南認識은 사실적 차원과 조작적 차원 모두에서 강화되어 왔다. 우선 事實的 次元에서 볼 때 김일성을 비롯한 北韓의 정치 엘리트들은 南韓 자체내에 혁명주의적 요소가 잠재해 있고 그들의 통일논리에 同調할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南韓社會가 민주화의 진통과정에서 겪고 있는 이데올로기 논쟁, 노사분규,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계층간의 갈등, 점증하는 反美感情, 그리고 非政府 차원의 전향적인 통일논의 등이 마치 남조선 해방의 여건이 점차 성숙되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김일성은 1982년 7월 솔라즈(Stephen J. Solarz) 美 下院 亞太小委員會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통일의 근본적 장애요인은 주한미군이며 미군이 南韓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北韓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南韓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그는 만약 駐韓美軍이 撤收하면 현 南韓 정부는 불가피하게 새로운 정부로 대체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정부는 南韓 인민들의 통일후 희망과 의지에 보다 順應的 입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군사적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달성해야 한다는 희망을 표명했다.⁴⁶⁾

註 46) Stephen J. Solarz, The Korean Conundrum: A Conversation with Kim Il Sung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pp. 8-12.

이와같은 김일성의 입장은 위에서 말한 북한의 대남인식이 사실임을 示唆하는 것이다.

한편 操作的次元에서도 이와같은 대남인식은 계속 강화되어 왔다. 북한은 정치교육을 통해서 한반도는 전적으로 美國때문에 분단되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北韓의 어린이들에게 한반도는 왜 분단되었는가? 라고 물으면 異口同聲으로 '미국놈'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北韓만이 민족의 자긍심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통성의 소유자라는 자화상을 통해서 南韓의 정부를 평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들은 南韓의 역대 정권들은 南韓 인민들의 진정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통성이 결여된 허약한 정권으로서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마치 곧 붕괴되었을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北韓은 정치 교육과정에서 주체사상 교육과 더불어 남한 사회의 부정적 모습을 과대포장하여 인민 대중에게 주입시키는 것을 가장 중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 국어교과서 내용을 보면 그들 사회는 地上樂園인데 비하여 남한 사회는 地獄으로 묘사되고 있다.⁴⁷⁾ 또한 남한 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계층간의 갈등이나 노사분규를 階級鬭爭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北韓의 대남정책 變化誘引에 대한 논의는 북한이 설정한 통일논리를 體制의 존재근거로부터 분리하는 문제와 北韓의 對南認識을 교정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여기서 첫번째 문제는 北韓과 보다 밀접히 연계된 것이고 두번째 문제는 北韓보다는 오히려 남한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이 두 문제는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분리시켜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분석의 편의상 여기서 첫번째 문제는 북한을 중심으로, 그리고 두번째 문제는 남한을 중심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註 47) 이와같은 北韓의 대남인식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이만우, "북한인민의 자화상", 양성철, 박한식(편저), 「북한기행」(서울: 한울, 1986), pp.139-162 참조.

2. 南北韓社會內的 變化誘引 要因

1) 北韓內的 變化 誘引要因

北韓이 설정한 대남정책 목표와 통일논리가 체제의 존재근거로부터 분리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主體思想을 바탕으로 한 김일성의 神政體制가 변화되어야 한다. 주체사상이 북한체제내에서 至高의 위치를 차지하는 한, 그리고 김일성의 神政體制⁴⁸⁾가 지속되는 한 그들 체제의 존재근거는 여전히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과연 가까운 장래에 주체사상과 김일성의 神政體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변화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蘇聯을 비롯한 현존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급격한 변화의 와중에 있고 소련도 北韓의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는 상황하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폐쇄체제를 고집하고 있다. 北韓은 蘇聯에서 개혁정책이 추진될 초기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개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다당제의 수용, 공산당의 정권상실, 그리고 헝가리 및 폴란드의 南韓과의 수교,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일련의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일어나자 이것을 비난하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일성이 돌연 中國을 방문하고 北韓과 中國은 다같이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할 것에 합의한 것을 강조한 사실과 카스트로의 蘇聯 비난 연설을 노동신문(1989. 12. 16일자)에 전재한 것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北韓은 '제국주의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題下의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資本主義의 必滅論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의 위기의 원인이 "제

註 48) 이상우교수는 북한에서 모든 권위의 원천을 김일성 1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북한체제는 전체주의 전제체제보다는 지배자의 神性에서 지배의 정통성을 찾는 동양적 전제군주제와 유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李相禹, "서론: 김일성체제의 특질", 李相禹外 공저, 「북한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pp. 24-26.

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공격과 도전⁴⁹⁾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東歐事態의 원인을 思想의 빈곤 탓으로 돌리고 있다. 요컨대 北韓은 東歐事態가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東歐人民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武裝이 해이 되었기 때문에 야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특히 共産黨의 영도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생명체에서 뇌수의 증추기능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多元主義와 多黨制를 허용하는 것은 인민대중의 정치적 통일을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 버리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온다.”⁵⁰⁾ 고 경고하고 있다.

北韓은 蘇聯이나 東歐가 당면한 문제는 그들 내부에서 파생된 것이지 사회주의체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이와같은 인식을 토대로 보다 정교화시킨 주체사상을 통해 이념의 통일과 단결을 도모하는 한편 김일성의 神政體制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아울러 그들 나름의 사회주의 건설에 필요한 개혁을 부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흡수하고 내부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北韓은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전략⁵¹⁾을 내세워 변화의 압력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식대로 살자는 것은 결국 主體思想에 따라 생각하고 行動하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실 北韓은 최근 수년간 주체사상을 社會政治的 生命體論을 軸으로 체구성하고 물질에 대한 정신의 우월, 長壽願望, 一族主義 등 북한사회의 전통적인 발상을 대담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설득력, 즉 朝鮮勞動黨 내지 김일성 주석-김정일 비서 父子支配의 정

註 49) 「로동신문」1989년 12월 22일.

50) 위의 신문

51)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rh학천,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 「근로자」 1989년 10월호.

통성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해 왔다.⁵²⁾ 이 작업은 北韓 사회가 서구나 동구와는 달리 시민사회의 경험이나 반체제 운동을 조직할 수 있는 세력이 부재한 탓으로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추진될 수 있었다.

北韓은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金日成의 나라’ (Land of Kim Il Sung)이다. 北韓에서 모든 권위의 원천은 김일성 1인으로 국한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北韓이 전체주의하의 독재체제보다 훨씬 강력한 1인독재체제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렌트(Hannah Arendt)에 의하면 全體主義運動의 전체 위계질서는 영도자의 의지를 사회전체, 각계 각층에 전달하는 유일한 목표를 위해 능률적으로 훈련된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영도자는 좀처럼 대체될 수가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감독없이 복잡한 운동구조의 존재이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³⁾ 그리고 영도자의 최대과제는 革命運動의 두가지 기능 - 즉, 바깥세계로부터 운동을 신비롭게 방어하는 동시에 그의 운동과 외부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일 - 을 擬人化하는 것이다.⁵⁴⁾ 계속해서 아렌트는 영도자는 과거에도 항상 옳았지만 앞으로도 항상 옳다는 神話를 중요한 원칙으로 삼는다고 지적하고 있다.⁵⁵⁾

북한의 김일성은 아렌트가 묘사하고 있는 全體主義的 독재자의 典型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외부로부터의 변화압력을 주체사상을 통해 철저히 방어하고 있으며 그가 내세우는 정책과 명령은 항상 無誤謬의 절대성을 갖고 있다. 예컨대 主體農法에 의해 시작된 다락밭 건설로 인해 北韓의 농업이

註 52) 사카이 다카시, “북한의 정치개혁 가시화되고 있다”, 「사회와 사상」 1990년 5월호, p.57.

53) Hannah Arendt, Totalitarianism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1968), 양성철, “민족통일과 민주화문제”, 「계간사상」 1990년 가을호, pp.233-234에서 재인용.

54) 위의 논문 p.234에서 재인용.

55) 위의 논문 p.234에서 재인용.

피폐하여 식량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고 있어도 이의 시정은 불가능하다.⁵⁶⁾ 그것은 無誤謬의 絶對性を 갖는 '수령'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현존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급격한 개혁이나 北韓 경제사정의 악화가 곧바로 北韓의 체제 변화와 연결되고 그 변화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대남정책이 수정되기는 어렵다. 김일성체제가 지속되는 한 北韓은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實用主義路線이나 대외개방을 서두르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 體制의 質的 特異性を 강조함으로써 물질적 어려움을 상쇄시키려고 할 것이다.

北韓 자체내의 요인에 의한 대남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김정일체제가 들어서 있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만큼 커질 수 있다. 급격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김정일은 부친의 권력을 계승할 것이다. 權力의 계승시기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⁵⁷⁾ 김일성이 생전에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할 지 아니면 그의 사후에나 가능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김일성의 나이로 미루어 볼 때 권력계승은 멀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北韓에서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면 일단 변화의 장애요인은 점차 감소될 것이다. 김일성 체제하에서 북한의 변화는 그 필요성이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변화 그 자체가 김일성의 無誤謬의 絶對性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더욱이 김일성은 변화의 압력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의 경우는 다르다. 비록 그가 아버지의 主體思想과 혁명전통의 위업을 계승한다는 명분을 바탕

註 56)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이고홍, 「가난의 공화국」(서울: 통일일보출판국, 1990) 참조.

57) 최근 Far Eastern Economic Review 誌에서는 1992년경 김정일이 권력을 계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9 November 1990, p. 28.

으로 권력을 장악한 것이라고 해도 김일성 체제하에서 보다는 主體理念의
축쇄로부터의 부분적 이탈이 좀더 자유스러울 수 있다. 또한 逆으로 김정
일은 대내외적인 변화의 압력을 아버지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로 다스릴 수
없다.

만약 김정일이 권력을 계승하는 경우 그는 순조롭게 기존의 체제를 유지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權力의 正統性和 기반을 창출하기 위
해서 기존체제의 변혁을 시도할 것인가? 김정일은 김일성이 아니다. 김정일
에게는 김일성과 같은 혁명의 경력이나 항일투쟁의 경험이 없다. 따라서
아버지와 같이 개인숭배와 神格化를 통한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하거나 점차
증대되고 있는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정치적 목적의 틀안에 묶어 두기가
어려울 것이다. 비록 김정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권력계승의 정통성과
制度化 과정(legitim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uccession)⁵⁸⁾을 밟았다고
하더라도 김일성의 神的 차원의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김정일에게 그대로 전
이될 수는 없는 것이다. 김정일이 독자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치적 목적때문에 유보되어 왔던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야
만 한다. 그의 권력기반과 정통성은 정치적 修辭가 아닌 구체적인 政策的
成果(policy performance)에 의해서만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改
革과 開放을 통해서 어느 정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더이상
정통성의 근거를 이데올로기적 修辭에서 구하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 반드시 경제부문의 개혁과 제로
섬(zero-sum)게임의 관계가 되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政治的 改革이 수반
된 보다 실질적인 北韓 사회의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고 그것은 곧 대
남정책의 변화와 연결될 것이다.

註 58) Byung Chul Koh, "Political Change in North Korea", Paper delivered
at the 4th Korea - U.S. Conference On North Korea, August 8-10,
1989, Seoul, Korea

물론 김정일이 北韓을 다스리게 되는 경우에도 종전의 대남정책에는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으며 때에 따라서는 권력기반의 강화를 위해서 아버지 시대보다 더 급진적이고 과격한 對南政策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⁵⁹⁾ 이 견해를 주장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서 과거 김정일이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나 아웅산 테러사건을 주도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배계급의 리더쉽 스타일은 合理的이고 實用主義的인 개연성이 더 크다고 본다.⁶⁰⁾ 왜냐하면 이들은 혁명투쟁에 일생을 바쳐온 전임자들과는 달리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정규교육을 받았고 蘇聯이나 東歐 유학경험도 갖고 있으며, 韓國戰에 직접 참전하지 않아서 南韓이나 美國에 대해서 혁명세대와 같은 원초적 적대감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北韓에서 김정일 체제가 들어서면 일단 대남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그만큼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등장한 후 南北韓의 경제력 격차의 심화에서 연유하는 열등감과 외교적 고립에서 오는 위기의식이 한계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김정일의 권력기반은 취약해 질 것이다. 그리고 北韓은 이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종전보다 더 교조적인 혁명주의노선을 채택할 수도 있다.

註 59) 이에 대해서는 Dong-bok Lee,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Korea and World Affairs, vol. 5, No.3.(Fall 1981); William Chapman, "Son of North Korean Chief Gains Prominence", The Washington Post, Oct.11, 1980; Kwon-sang Park, North Korea Under Kim Chong-il,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1, No. 2, June 1982등을 참조.

60)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朴在圭, 「北韓의 金正日, 承繼體制: 그 분제와 전망」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연구보고서 85-1(No. 7), 1985. 5 참조.

2) 南韓內의 變化 誘引要因

北韓의 대남정책 변화를 유인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가능성있는 요인은 南韓 자체내에서 모색해야 한다. 왜냐하면 北韓內의 변화요인은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없으며 南北韓 兩體制중 北韓보다는 南韓 體制的 변화가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北韓의 대남정책 변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南韓 자체내의 변수는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 對南政策 變化의 열쇠는 北韓만이 쥐고 있다는 암묵적 가정을 토대로 우리 사회의 변화 필요성을 외면한 채 북한에게만 변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北韓의 대남정책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그들의 통일논리에서 想定하는 問題狀況이 南韓 社會에 存在하고 있다는 믿음과 기대 때문이다.

이와같은 北韓의 대남인식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북방정책, 남북간의 교류에 앞서 우선 우리 體制內部的 과감한 刷新이 이루어져야 한다. 체제쇄신의 최우선적 과제는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정권의 만성적인 정통성 시비논쟁을 종식시키고 富의 파행적 分配構造를 시정하여 상대적 박탈감에서 기인하는 계층간의 갈등을 解消하는데 있다.

사실 정부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정권의 정통성 시비논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北韓은 이와같은 정통성 시비논쟁을 틈타서 南韓의 民主化(北韓이 想定하는 민주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그들의 체제가 말로 韓國民族主義의 진정한 구현이며, 따라서 전민족의 정통성있는 체제라고 하는 것을 北韓 뿐만아니라 南韓의 민중에게도 보여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⁶¹⁾ 또한 南韓 정부는 남한 인민의 진정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註 61) 박한식,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 외교”, 서울大 한국정치연구소(편), 「북한은 변하고 있는가? (서울: 語文閣, 1990), p. 64.

정통성이 결여된 정부이기때문에 이 정부만을 상대로는 통일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北韓은 이와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아직도 통일논의나 南北對話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당국과 제정당 사회단체를 구분하는 二元化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그리고 南韓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정부차원의 다양한 통일논의는 北韓으로 하여금 당국자간 회담보다는 非當局者間의 회담과 교류에 우선적 가치를 두도록 하고 있는것 같다.

사실상 北韓의 대남인식이 교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와 입장을 달리 하는 비정부차원⁶²⁾의 통일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일논의가 다양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政府와 입장을 달리하는 統一論議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통일논의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兩極化 현상은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한 과정에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問題의 심각성이 있다. 그 兩極化 현상의 뿌리는 체제내의 정치게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左野나 청년, 학생세력은 집권세력은 본질적으로 분단체제에서 既得權을 향유하는 세력이고 이들의 통일정책은 美國과 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파워블록(power block)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완전한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집권세력은 항상 통일정책을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게임에 이용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정통성의 기반이 취약한 정권이 교체되는 과도기에는 예외없이 정부의 입장에 도전하는 統一論議가 용암처럼 분출했다

註 62) 남한에 있어서 비정부적 차원의 통일논의에 대해 자세한 것은 李正馥, "南韓의 非政府次元의 統一論議", 「韓國과 國際政治」 제3권 1호 1987號, pp. 125-141; 金浩鎭, "在野·學生들의 통일논의와 통일정책방향" 동아일보사(편) 「통일 어떻게 할 것인가」(서울: 동아일보사, 1989), pp. 151-178 참조.

는 사실은⁶³⁾ 통일잇슈가 본질적으로 체제게임의 속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얼마전 統一蹴球 취재차 平壤에 간 南韓 記자의 인터뷰에 응한 한 北韓 作家는 “南韓 사회는 통일문제에 대해 주민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반해 北韓 사회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한데 묶어 한 소리를 낸다”⁶⁴⁾ 고 말한바 있다. 이말은 남한 사회의 통일논의를 보는 북한의 시각이 어떠한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南韓 사회에서 통일논의의 양극화 현상은 민주화 운동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權威主義 정권하에서는 비정부적 차원의 통일논의 자체를 체제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하거나 容共視하여 탄압하였다. 따라서 權威主義 政權하에서는 비정부적 統一論議가 冬眠상태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權威主義 政權이 무너지고 民主政權이 들어서는 과도기에는 예외없이 그동안 금압상태에 있었던 統一論議가 봇물이 터지듯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예컨대 자유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는 시기에는 革新 勢力 및 청년·學生勢力을 중심으로 남북교류론, 중립화 統一論 등 종전에는 거론조차 할 수 없었던 전향적 통일논의가 거세게 일어났고 5공화국이 6공화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在野 및 學生勢力을 중심으로 統一論議가 다시 한번 융암처럼 분출되었다.

특히 6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금기시해왔던 통일 잇슈들을 스스로 제기하고 허용함으로써 비정부적 차원의 통일논의는 더욱 가열되었다. 6공화국 시대의 비정부적 차원의 統一論議 내지 운동은 民主化 運動으로 시작되어 1988년 「6.10 남북 학생회담」의 추진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全大協과 중

註 63) 예컨대 1공화국과 5공화국 정부가 교체되는 과도기에 야기된 가열된 통일논의가 그와 같은 현상의 典型이다.

64) 「중앙일보」 1990년 10월 15일

교계, 문학, 예술계의 진보적 인사들을 주축으로 한 재야 세력들은 民主化 運動과 民族統一運動은 같은 맥락에서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활발한 통일논의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南北學生會談, 國土縱斷 計劃, 北韓에서 개최된 世界靑少年祝祭 參加를 비롯해서 南北作家會談, 범민족대회 개최를 발표, 제의하는 등 민간차원의 南北交流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⁶⁵⁾

6공화국 정부도 한동안 비정부적 차원의 統一論議와 運動을 억압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적극 포섭, 수용하는 듯 했다. 그러나 임수경양과 문익환복사 등 일부 인사의 방북사건을 계기로 政府는 비정부적 차원의 統一論議에 대해 종전의 입장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이른바 公安政局이라는 寒波가 초래되었다.

사실 6공화국 정부는 출범초부터 民族統一이라는 政治的 비전을 제시하려는 듯 統一問題에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해 왔고 이것은 북방정책과 「7.7선언」, 대통령의 유엔 연설 등을 통해서 具體化되어 갔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정부의 統一政策이 너무 현실을 앞서는 前向的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으며 여권 내부에서조차도 정부의 정책이 너무 성급하고 무모하며 北韓에 一方的으로 양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왜 이와같은 전향적 統一政策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政府와 在野間에 統一論議에 대한 兩極化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는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統一 이슈들을 스스로 제기하고 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도에 그것을 억제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가? 그

註 65) 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국토통일원(편), 「民放次元의 통일운동과 남북교류」(서울: 국토통일원, 1988)를 참조.

이유는 한마디로 政府의 統一政策이 오랜시간 폭넓은 國民的 合意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공화국 政府는 대통령 直接選舉方式을 통해 출범했기 때문에 전임 정부 보다는 정통성 是非論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울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정통성 問題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정치갈등문제는 사회갈등을 확산시켜 통일문제의 쟁점을 흐리게 하는 수도 없지 않다.

만약 처음부터 정부의 정통성이 확고하고 또 바람직하게 國民統合的인 社會構造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國民的 合意에 기초한 統一政策의 樹立과 집행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在野 및 學生勢力의 進步的 統一論議도 安保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統一問題에 관한 한 政府와 여·야당, 在野 및 學生勢力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갈등에서 화합으로 이행되어 갈때 北韓이 想定하고 있는 문제상황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 統一論議의 兩極化 현상도 解消될수 있고 北韓의 對南認識도 교정이 가능해져 곧 그들의 統一論理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를 誘引할 수 있는 요인을 北韓內의 요인과 南韓內의 요인으로 大別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중의 하나는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를 誘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要因은

이유는 한마디로 政府의 統一政策이 오랜시간 폭넓은 國民的 合意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공화국 政府는 대통령 直接選舉方式을 통해 출범했기 때문에 전임 정부 보다는 정통성 是非論爭으로부터 비교적 자유스러울 수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정통성 問題를 끈질기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정치갈등문제는 사회갈등을 확산시켜 통일문제의 쟁점을 흐리게 하는 수도 없지 않다.

만약 처음부터 정부의 정통성이 확고하고 또 바람직하게 國民統合的인 社會構造가 형성되어 있었다면 國民的 合意에 기초한 統一政策의 樹立과 집행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在野 및 學生勢力의 進步的 統一論議도 安保상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統一問題에 관한 한 政府와 여·야당, 在野 및 學生勢力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갈등에서 화합으로 이행되어 갈때 北韓이 想定하고 있는 문제상황으로부터 자유스러워져 統一論議의 兩極化 현상도 解消될수 있고 北韓의 對南認識도 교정이 가능해져 곧 그들의 統一論理를 수정하게 될 것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를 誘引할 수 있는 요인을 北韓內의 요인과 南韓內의 요인으로 大別하여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중의 하나는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를 誘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성이 높은 要因은

北韓보다는 오히려 南韓 自體內에서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한동안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 問題를 다루는데 있어서 南韓 自體內의 要因은 전적으로 무시되거나 주변적 차원에서만 고려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와같은 사실은 곧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의 요인은 전적으로 北韓 자체내에 있다는 假定만을 토대로 해서 變化의 問題를 論議해 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는 北韓의 현존 체제가 그대로 존속하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관적 입장이 南韓 사회내에 보편화되었다. 그리고 北韓이 혁명주의적인 강경한 對南政策을 고수하는 한 南韓도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화나 올바른 분배구조의 정착보다는 總力安保體制의 구축이 우선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論理를 정당화시킨 때도 있었다.

이처럼 南韓 社會의 變化라는 과제를 도의시한 채 北韓의 變化만을 일방적으로 촉구하는 한, 그리고 안보제일주의만을 앞세우고 국민통합적 사회구조 형성의 필수조건인 民主化와 올바른 分配構造의 정착을 소홀히하는 한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는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北韓은 國內外的으로 매우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다. 현존 社會主義圈 국가들의 급격한 改革과 開放으로 인하여 北韓은 종전과 같이 蘇聯을 비롯한 社會主義 友邦國家들의 지원과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經濟形便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와같은 北韓의 어려움은 반사적으로 南韓에게는 매우 유리한 국면을 열어주고 있다. 南韓에서 6공화국의 출범 직후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北方政策이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은 역으로 北韓에게는 그만큼의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北韓이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내부의 경제사정이 악화될수록 變化의 可能性은 그만큼 커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南韓의 北

方政策과 對北政策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기대를 바탕으로 北韓에 대한 南韓의 優越性을 과시함으로써 동서독의 경우처럼 북한의 노선변경을 유도하거나 흡수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그것을 매우 잘못된 발상이다. 우선 現在の 南韓은 西獨이 아니며 北韓도 東獨과는 매우 다르다. 西獨은 이미 오래전에 모범적인 民主政治를 실현하고 올바른 분배구조의 정착을 통해서 國民統合的인 社會構造를 탄탄하게 마련함으로써 가치를 선점하였다. 이에 대해서 南韓은 아직도 민주화의 진통을 겪고 있고 파행적인 분배구조를 인하여 계층간의 갈등이 상존함으로써 體制의 정통성 시비논쟁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지 못했다. 北韓의 경우도 東獨처럼 취약한 體制가 아니다. 그리고 對內外的인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방식도 東歐의 社會主義圈 국가들과 매우 다르다. 北韓은 아직 외교적 고립과 改革과 開放보다는 그들 體制의 이데올로기적 독특성을 강조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특히 이와같은 이데올로기적 독특성은 그들이 내세운 統一論理에서 想定하고 있는 問題狀況이 南韓 사회내에 상존하고 있다는 믿음과 기대 때문에 더욱 강조되고 있는것 같다.

결론컨대 현 시점에서 北韓의 對南政策 變化를 誘引하기 위해서는 北韓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對內外的인 어려움, 특히 경제사정의 악화가 완화되어 물질적 어려움을 더이상 이데올로기의 독특함으로 상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南韓이 적극적인 北方政策이나 對北政策에 앞서 과감한 體制刷新과 사회개혁을 통해서 國民統合的인 사회구조를 정착시킴으로써 北韓이 상정하고 있는 문제상황으로부터 南韓 社會가 완전히 자유스러워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第6章 韓半島 安保環境과 南北關係 可變要素

— 李相軾 (釜山大 教授)

I. 序 論	171
II. 脫冷戰과 國際政治環境의 變化	173
III. 南北韓關係의 爭點	179
1. 南北關係 爭點誘發의 根本要素	179
2. 爭點으로서의 統一方案	185
3. 交叉承認 및 유엔加入問題	187
4. 駐韓美軍撤收問題	190
5. 南北對話의 當事者問題	192
IV. 南北韓關係의 課題	194
1. 이데올로기 對立의 解消	195
2. 相互不信의 克服	197
3. 軍縮과 緊張緩和	197
V. 結 論	203

I. 序 論

해를 거듭할수록 南北韓關係는 때로는 좌절과 퇴보의 방향을 걷기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중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전된 면모가 있었다. 특히 80년대에 접어들어 더욱 그러했다. 90년대의 南北關係는 어느 때보다도 周邊情勢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신데탕트로 표현되는 美蘇의 화해무드와 中蘇의 持續的인 改革, 開放政策은 한반도와 주변질서를 보다 발전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으로 유도했다. 미국, 일본은 물론 소련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원하지 않았고 南北韓의 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랐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변화, 즉 「알타체제에서 몰타체제로의 변화」라는 새로운 데탕트의 물결을 타고¹⁾ 東西冷戰體制는 그 기본골격만은 아직도 잔존시킨채 인간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共產國家들마저 일대 개혁, 개방을 가속화시켰고 이념과 체제를 넘어 정치, 사회, 경제교류가 활발해 졌으며 軍備縮小와 같은 획기적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른바 탈냉전시대에 즈음하여 韓國은 적극적인 北方政策을²⁾ 취할 수 있었으며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급진적인 南北關係論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이 어느새 공인된 부분으로 자리잡는 대변혁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편 앞서도 언급된 바 있는 南北關係의 진전이나 발전이

註 1) 1989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지중해상의 몰타에서의 美·蘇頂上會談이 개최되어 平和共存하자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는 냉전에서 화해라는 새 데탕트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2) 1990년 6월 5일 盧泰愚 한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蘇聯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韓·蘇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의 조속한 修交와 經濟協力을 동의했다. (샌프란시스코발 동아일보 특별 취재반보고, 동아일보, 1990년 6월 6일자)

라 한다면 최근의 南北關係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쌍방이 현실인정의 加速化, 둘째 劃一化를 지양하고 신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셋째 논리적 대결, 넷째 周邊情勢와의 활발한 상호작용, 다섯째 체제유지와 이율배반성 등을 들 수 있는 것이다.

南北關係는 우선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할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점에서 이같은 흐름은 고무적인 것이며 또한 변화나 획일화를 벗어나는 조짐은 최근 들어 상대방을 원수나 타도의 대상으로 보던 데서 벗어나 때로는 선의의 경쟁자로서 또는 同伴者關係로 보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면이 그것이다. 남쪽에서 내놓은 88년 7·7선언은 분단 40여년간 얼어 붙은 한반도의 冷戰構造를 완화시켜 보려는 노력의 일환일 것이며 북쪽의 최고통치자가 90년도 신년사에서 남북한간의 平和共存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상호협력자로 인정하자는 제스처로 받아 들여 진다.

南北韓간에 요즘와서 전개되는 통일논의도 과거와는 달리 좀 더 세련되고 논리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북쪽은 종래의 「고려연방제」안에다 聯邦政府의 창설조항이 추가되었고 聯邦議會의 구성방식과 형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돼 나름대로 정교한 이론구성을 하려는 면모가 나타나 있고³⁾ 남쪽은 종전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에서 이제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으로 바뀌어서 이론적 정교성과 설득력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한 통합을 위한 노력도 형식적인 속성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탈냉전의 논리속에서도 각자의 체제유지와 南北

註 3) 北韓이 제의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서의 정부형태는 남북이 同數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대표들로 최고 민족 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는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사실상의 정부구실을 수행한다고 되어있다.

關係개선이라는 두개의 상반되는 가치가 서로모순을 빚고 있어 남북한간의 갈등과 쟁점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이로인하여 90년대 통일에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韓半島統一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 위해 탈냉전시대에 즈음하여 남북한간에 내 세우고 있는 주장과 쟁점, 그리고 平和共存과 통일을 위한 해결과제를 모색해 보려는 데 역점을 두기로 한다.

II. 脫冷戰과 國際政治環境의 變化

美蘇頂上의 「물타회담」은 앞으로의 國際政治分野에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平和共存을 향한 밝은 전망을 안겨 주었다. 89년을 마무리짓는 12월초 지중해의 몰타에서 열린 美蘇頂上간의 회의에서 兩國頂上은 전후 반세기간 지속되어 온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⁴⁾ 몰타회담에서는 「새로운시대」를 선언하면서 90년 6월에 열릴 워싱턴 美蘇頂上會談을 재개할 것과 거기서 전략핵삭감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⁵⁾

2차대전후 줄곧 동서간의 이념대립과 軍備擴充競爭이라는 전후국제정치상황은 美國의 自由主義, 蘇聯의 共產主義體制의 각자 방위의 필요성과 상호불

註 4) 1989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지중해상의 몰타에서 부시 미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이 頂上會談을 열어 東西군사대립의 완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美蘇협조를 강화, 확대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동아일보, 1989. 12. 5)

5) 1990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 워싱턴에서 美·蘇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여기서 양국정상간에 ① 전략무기의 감축 ② 화학무기폐기 ③ 경제협력확대 등에 합의했다. (1990년 6월 3일자 워싱턴발 AP통신 참조)

關係개선이라는 두개의 상반되는 가치가 서로모순을 빚고 있어 남북한간의 갈등과 쟁점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며, 이로인하여 90년대 통일에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은 韓半島統一의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 위해 탈냉전시대에 즈음하여 남북한간에 내 세우고 있는 주장과 쟁점, 그리고 平和共存과 통일을 위한 해결과제를 모색해 보려는 데 역점을 두기로 한다.

II. 脫冷戰과 國際政治環境의 變化

美蘇頂上의 「물타회담」은 앞으로의 國際政治分野에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平和共存을 향한 밝은 전망을 안겨 주었다. 89년을 마무리짓는 12월초 지중해의 물타에서 열린 美蘇頂上간의 회의에서 兩國頂上은 전후 반세기간 지속되어 온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고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⁴⁾ 물타회담에서는 「새로운시대」를 선언하면서 90년 6월에 열릴 워싱턴 美蘇頂上會談을 재개할 것과 거기서 전략핵삭감교섭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⁵⁾

2차대전후 줄곧 동서간의 이념대립과 軍備擴充競爭이라는 전후국제정치상황은 美國의 自由主義, 蘇聯의 共產主義體制의 각자 방위의 필요성과 상호불

註 4) 1989년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지중해상의 물타에서 부시 미국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서기장이 頂上會談을 열어 東西군사대립의 완화를 비롯한 광범위한 美蘇협조를 강화, 확대하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이다. (동아일보, 1989. 12. 5)

5) 1990년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 워싱턴에서 美·蘇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여기서 양국정상간에 ① 전략무기의 감축 ② 화학무기폐기 ③ 경제협력확대 등에 합의했다. (1990년 6월 3일자 워싱턴발 AP통신 참조)

신 때문이었다. 몰타선언의 배경적 요소로는 한편으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동구의 가속적 民主化의 움직임과 미국 한 나라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서방측의 책임과중문제가 작용하고 있었다. 더욱이 이제 세계 각 국가의 국민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기본적 욕구가 政策의 우선순위를 변화시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 이미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東歐의 변혁이 상징하는 바와 같이 동서의 장벽을 넘어 탈냉전현상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⁷⁾

동구의 변혁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개혁을 부르짖던 중국은 지난번 “천안문사건”이후 잠시 개방을 꺼려하고 있지만 平和共存의 바람은 이들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도 미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아시아는 冷戰構造의 틀속에서 동·서라는 양극방식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이제는 多次元的 多極方式으로 冷戰構造의 변질, 즉 신데탕트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금후의 美蘇 초강대국간의 정치 경제교류확대, 군축교섭의 진전,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가속화 등은 國際政治의 하위체계를 형성하고 여타 군소 각 국가들간의 相互關係變化와 개선을 급속하게 전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동방을 향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는 소련이 아시아의 가장 주요한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유럽과 함께 앞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86年の 소련 공산당대회에서 언급했던 것이다.⁸⁾ 그 뒤 4월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

註 6) “인간의 얼굴을 가진 社會主義”를 실현하려는 운동이 1960년대 후반부터 전개되어 왔고, 페레스트로이카 역시 그러한 맥락의 결실이다. (김학준, 「마르크시즘의 이해」, 정음사, 1983) 제9장참조

7) 英國의 「선데이타임즈」는 1989년 11월 12일자 논평을 통해 베를린장벽의 붕괴를 빠스띠유감옥의 파괴에 비유했다. (동아일보, 1989년 11월 13일자 참조)

8) 고르바초프서기장은 1986년 2월 제27차 소련공산당대회에서 소련의 대외정책의 주요방향을 언급하면서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이다.

한 소련정부의 선언”, 그리고 같은해 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연설”도 같은 맥락이었다. 이러한 소련의 의도는 이미 소련의 對中國 화해의 모색과 북한과의 군사협력증대, 그리고 아시아 여러국가들과의 이념의 벽을 넘어 경제협력강화등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의 蘇聯의 적극성은 종래 참가하지 않았던 “太平洋經濟協力會議” 기구에 참가하려는 열성을 보이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⁹⁾

여하튼 蘇聯은 고르바초프의 통치하에서 아시아지역에서 종래와는 다른 융통성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련은 세계문제에 있어서, 분쟁의 핵심문제에 관해 타협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동구권의 民主化改革과 동서독의 統一問題, 아프가니스탄과 캄푸치아, 그리고 일본과의 영토분쟁에 있어서 전진적인 특별한 융통성을 나타내고 있다.

냉전의 유산으로 아직 한반도에는 南北韓에 약 일백수십만의 중무장한 대병력이 최전선에 대치하고 있다. 탈냉전을 선언한 몰타정신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은 분명하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다. 특히, 동구권의 변화, 社會主義國家들의 한국과의 修交, 동서독의 새로운 움직임, 자유왕래, 베를린장벽의 붕괴등은 남북한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위한 자극제가 될 것이다.¹⁰⁾

또한 韓半島에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中國 역시 탈냉전논리에 따라 對外政策의 변화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물론 北韓과의 고전적 관계를 지속하면서도 미국, 일본 등 서방제국과 관계강화, 특히 종래와는 달리 한국과의 관계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의 관계에는 군사적 관

註 9) 蘇聯은 太平洋經濟協力會議(PEEC)에 1986년 11월 밴쿠버회의 때 업저버 자격으로 참가, 그후 1988년 오사카회의 다음에는 소련의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할 것을 제외했다.

10) 1988년 8월 25일 韓國과 헝가리, 양국은 외교관계수립협정을 체결을 필두로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그리고 몽고 등 여러 사회주의국가들과 한국은 外交關係를 수립하였다.

계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과의 무역은 북한과의 그것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¹¹⁾

이러한 國際環境의 변화에 따라 韓國의 北方政策도 서독의 동방정책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 국토의 통일을 위해 시작되었고, 신데탕트시대의 실용주의 대외정책을 취하는 中·蘇등 社會主義 諸國의 改革, 開放政策의 배경과 함께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의 한국의 중국·소련과의 인적 물적교류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¹²⁾ 중국은 또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물론 아직도 북한의 요구와 주장에 동조하는 듯 북한의 폐쇄주의적 統一政策을 지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두개의 한국정책을 쓰고 있다. 중국은 현재의 한반도의 정세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¹³⁾

이미 韓國측은 88년에 한반도의 긴장완화, 북한과의 다각적 교류확대를 위해 “7·7선언”을 내 놓았고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미지근하지만, 한반도주변의 중요한 열강이며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中·蘇兩大 共產國家들은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두나라는 남한에 대한 사실상의 인정과 승인관계를 넘어 서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과 소련의 한국에 대한 접근은 이미 오래전부터 “交叉承認”을 주장하면서 북한에 접근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 두나라와 함께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

註 11) 韓·中교역량은 1988년 현재 벌써 31억달러정도로 추산되며 이것은 북한·중국교역량 약4억달러에 비하면 8배정도에 달한다.

(중앙일보, 1989. 3. 20), David Dollar, "South Korea-China Trade Relations," *ASIAN SURVEY*, (December, 1989) pp.1174-1175

12) 최근의 對中·蘇교류의 구체적 현황에 대해서는 유석열, 「북방정책론」 (서울: 법문사, 1988), pp.5-10 참조.

13) 統一院 남북대화사무국, 「한반도의 장래와 일본의 안전보장: 북한동향을 중심으로」 (통일원, 1986. 9), p.55.

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

蘇聯의 정치주간지 “노보예브레미야”(신시대)는 최근호에서 북한과의 군사동맹관계의 수정과 韓國과의 조속한 國交樹立을 제창하는 논문을 실었다. 지난 6월초 샌프란시스코에서의 韓蘇頂上會談은 자연스럽게 한국과 소련과의 國交頂上化의 길이 열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블라디보스토크 및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해 밝힌 아시아지역 사회건설을 실현하는 길이 될것이다.

이와같은 제스추어는 지난 40년 남짓한 기간동안 소련의 종래의 형태와는 판이하게 달라진 태도 변화임에 틀림없다. 지금까지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시각은 북한에서의 社會主義改革과 남한에서의 학생소요, 북한의 평화정책과 미국의 꼭두각시인 남한의 전쟁준비 등 남한정권에 대한 악의에 찬 認識뿐이었다. 이는 스탈린시대이래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의 기본노선으로 견지되어 왔었다. 종래 소련외교정책은 平壤정권으로 하여금 소련이 결코 남한과 접촉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고 있던 것 같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것이 흔들리게 되었다. 즉 모든 나라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련은 무조건적인 平壤支持와 서울에 대한 承認拒否에서 벗어나 일찍부터 독일에 대해서 취했던 “두개의 독일”정책처럼 南北韓의 경우에도 놓여 있는 그대로의 두개의 韓國을 인정하려는 시대에 접어 들고 있다.¹⁴⁾

한편 한반도 政治情勢에 영향을 미치는 4대강국의 화해움직임도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소련외교정책의 변화에는 소련 권력엘리트들의 共產主義에 대한 수정적 견해가 이념적 敵對感과 強硬性을 완화시키

註 14) Kyongsoo Lho, “Seoul-Moscow Relations: Looking to the 1990s,” *ASIAN SURVEY*(December, 1989), pp.1153-1166.

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다.¹⁵⁾ 즉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공존”과 “협력”으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저명한 시사주간지가 전하는바에 의하면 蘇聯은 北韓의 강경정책을 완화토록 촉구할 방침이 이미 지난 6월초 워싱턴 美蘇頂上會談에서 확인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주간지에 따르면 日蘇關係 발전과 화해면에서 소련의 가까운 장래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소련이 2차대전후 점령중인 일본 북방 4개도서를 일본에 반환해야할 필요성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르바초프는 그에 대한 대가로 일본과 韓國의 대규모 대소경제협력을 얻어 내려는 和解政策을 취하고 있다고 서방의 언론에 비치고 있다.¹⁶⁾ 이와같은 소련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긍정적이고 전진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가이후 도시키」日本首相은 소련과 일본이 21세기에 즈음하여 日蘇平和條約締結등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하며 日蘇經濟協力수준도 현재의 美日經濟協力 규모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언급했다.¹⁷⁾ 이제 한반도 주변 國際安保環境도 각국가들이 서둘러 채택하고 있는 경제 사회적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정책적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알타체제의 유산인 군사동맹체제도 원래의 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적대적 대립성향은 완화 내지 해소되고 있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北韓은 언제까지나 南韓과의 대립을 계속하면서 변화는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그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쟁점을 다시 늘어 놓고 있으나 한마디로 북한 역시 制限的이지만 분명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註 15) 蘇聯 총리겸 정치국원 「니코라이리슈코프」는 “공산주의는 가까운 장래에 도달할 수 없는 머나먼 이상”이라고 말했다. (모스크바 방송: 1990년 6월 16일 보도, 모스크바발 6월 18일자 로이터 통신참조)

16) *U.S. News and World Report*, 16th June, 1990.

17) 蘇聯정부기관지 「이스베스티야」 1990년 6월 15일자 참조, 및 모스크바발 1990년 6월 18일자 共同通信참조.

이다. 90년대의 신데탕트시대의 전개와 함께 한반도사태에도 밝은 南北韓關係定立이 바람직스럽다, 따라서 이 시대의 南北韓간의 쟁점과 과제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Ⅲ. 南北韓關係의 爭點

1. 南北關係 爭點誘發의 根本要素

1) 理念的 對立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제2차대전 이후 美蘇協力體制가 붕괴되고 점차로 美蘇가 중심이 되는 지배적 國際體系인 美蘇兩極化體制가 國際적으로 성립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와 같은 國際政治의 주변지역에서도 일종의 종속적 체계로서 南北對決의 양극화적 小國際體系가 성립되었던 것은 해방정국과 남북한 각자 단독정권수립과정이라는 현정사를 돌이켜 볼때 알 수 있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이들 두개의 韓國은 결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질적인 이념대결로 일관해 왔고 그 극도의 상대방타도 행위가 한국전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북한공산정권도 다른 共產國家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존 政治秩序와 사회적 관습·규범들을 철저히 거부하는 社會革命을 통해 등장하

註 18) 美國학자 「로제노」는 종속국가는 직접적으로 국제사회에 정식멤버로 활동하지 못하는 강대국의 입김이 “침투된 나라”(The Penetrated Political system)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osenau, James N.,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in R. Barry Fallell, ed.) *Approaches to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Northwestsn University Press, 1966), p.65.

이다. 90년대의 신데탕트시대의 전개와 함께 한반도사태에도 밝은 南北韓關係定立이 바람직스럽다, 따라서 이 시대의 南北韓간의 쟁점과 과제를 모색해 보려고 한다.

Ⅲ. 南北韓關係의 爭點

1. 南北關係 爭點誘發의 根本要素

1) 理念的 對立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제2차대전 이후 美蘇協力體制가 붕괴되고 점차로 美蘇가 중심이 되는 지배적 國際體系인 美蘇兩極化體制가 國際적으로 성립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와 같은 國際政治의 주변지역에서도 일종의 종속적 체계로서 南北對決의 양극화적 小國際體系가 성립되었던 것은 해방정국과 남북한 각자 단독정권수립과정이라는 현정사를 돌이켜 볼때 알 수 있는 것이다.¹⁸⁾

그러나 이들 두개의 韓國은 결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는 이질적인 이념대결로 일관해 왔고 그 극도의 상대방타도 행위가 한국전쟁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북한공산정권도 다른 共產國家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존 政治秩序와 사회적 관습·규범들을 철저히 거부하는 社會革命을 통해 등장하

註 18) 美國학자 「로제노」는 종속국가는 직접적으로 국제사회에 정식멤버로 활동하지 못하는 강대국의 입김이 “침투된 나라”(The Penetrated Political system)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Rosenau, James N.,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in R. Barry Fallell, ed.) *Approaches to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olitics* (Northwestsn University Press, 1966), p.65.

였다. 金日成은 이미 46년 8월 28일 북조선노동당창립대회에서 해방된 조선의 사회발전단계를 언급하면서 조선의 정치사회적 발전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이념적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¹⁹⁾

그러나 北韓의 전국헌법이나 노동당규약에서도 당초부터 마르크스주의가 공식 이데올로기로 선언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당시 조선노동당이 統一戰線의 맥락에서 비공산주의자를 포섭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마르크스주의가 당의 공식 정치이념으로 채택된 것은 56년 조선노동당 제3차전당대회부터이었다.²⁰⁾

그런데 北韓의 통치이념은 김일성의 주장대로 소비에트 마르크스주의를 “朝鮮化”하려는 데서 “主體”사상을 가미하게 되었다. 즉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과 주체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金日成은 주장했던 것이다.²¹⁾ 특히 그는 “祖國統一問題”에 대해서 “북반부에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고, 그 다음 남반부에 대한 정치사업을 잘 하는 것”, 이 두가지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북한에 “민주기지”구축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던 것이다.²²⁾

따라서 북한정권의 統治理念은 共產主義社會의 건설, 이를 위해 프롤레타리아독재체제의 확립, 그리고 이른바 반제국주의투쟁인 것이다. 남북한간의 통일사업도 國際舞臺에서 오랫동안 전개되어 온 資本主義, 帝國主義를 반대하는 투쟁선상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金正日에 의하면 “資本主義, 帝國主義는 인류역사에서 자주성 대한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를 짓밟는 최후의 착취제도이며 계급적 지배와 민족적 압박을 결합시킨 가장 횡포한 억압

註 19) 「김일성선집 제1권」(평양:1954), pp.246-264 ; 김준엽외, 「북한연구자료1」(서울:고려대학교출판부, 1969), p.136.

20)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개정된 규약 제1장 1절에서 “조선노동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학설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국토통일원편, 「조선노동당 대회자료집1」, 1979), p.525참조.

21) 「김일성 선집 제4권」(1960), pp.325-354.

22) 「김일성 저작선집1」(1967), pp337-338.

제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²³⁾

북한정치지도노선이 이처럼 帝國主義에 대한 투쟁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보는데서 남한의 政治體制를 제국주의적 식민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남조선 인민들속에서 民族自主意識을 높여 반미자주화와 반파쇼 民主化鬪爭에 힘있게 떨쳐 나서라”고 그들은 선동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²⁴⁾

여기서 연원되는 한반도통일노선에 있어서 북한측은 和戰兩面의 통일방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金日成은 강조한다. 즉 祖國統一의 문제는 평화적 방법이 아니라 전쟁에 의하여 해결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북한 권력엘리트들은 한반도에 공산주의정권으로 통일하려는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가지고 있다.

南北韓關係에서 끝없는 대립과 쟁점을 유발하는 기초적 요인이 그들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속성에 있는 것이다.²⁵⁾ 그러므로 미국과 남한정부는 원수가 되고 이들을 타도하는 것만이 “통일위업”을 달성하는 유일한 노선으로 분단 반세기간을 통해 줄기차게 얼어붙은 자세를 유지해 온 것이다.²⁶⁾

그리하여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통일노선은 南北韓關係나 南北對話에서 언제나 그 어떤 주장의 근거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요인이 된다. 統一戰線의 책략을 숨겨서 내 놓은 것이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이고, 또한 남한이 추구하는 북방정책이나 교차승인, 혹은 최고당국자회담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도 그러한 흡수통일 내지 폭력통

註 23) 김정일,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가자,” 「근로자」, 1983년 5호, p.18. 참조.

24) 김정일, 상계논문, p.20.

25) 북한노동당 규약 전문내용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강조한다.

26) 이명영, 「통일의 조건」 (서울: 종로서적, 1987), pp.325-326.

일에의 信條를 포기할 수 없는 데서 나온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된 북한측의 통치이념에 대립되는 남한측의 統治理念은 무엇인가를 되새김해 본다. 48년 남한정권수립이래 서구의 自由民主主義를 도입하여 그것을 근본적 정치이념으로 삼고 있다. 물론 남한정권의 현정사를 돌이켜 볼때 인권과 인간의 행복이 보장되는 발전된 民主主義를 확립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남한의 民主主義는 개인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한국적 民族主義를 가미한 통치이념을 그 속성으로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고 평등만을 강조하는 共產主義體制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²⁷⁾ 여기에는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는 資本主義體制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통치이념과 정면으로 대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역시 최근에 이르기 전까지는 자유당정권수립이후 계속 반공 통일 내지 승공통일이라는 기본적 자세를 변함없이 추구해 왔던 것이다. 韓國의 反共法과 保安法은 공산주의자나 용공주의자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체제유지의 장치이었다. 남한측이 자유민주주의적 우월속에서 통일되어야만 된다는 태도를 지금까지 약 반세기동안 견지해 왔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순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더우기 50년 6.25전쟁을 계기로 더욱 반공정신이 한국민들의 가슴속에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므로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각종 대립과 쟁점유발의 기초는 서로 상극되는 정치이념적 대립에서 연유하는 것이라는 상식적인 논리가 재확인 된다.

註 27) 전득주, 「과격급진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서울: 평민사, 1985), pp.283-

2) 正統性 論爭

日本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解放政局의 한반도에서는 수많은 좌우익계 정치 집단들의 각축과 소용들이속에서 48년에 南北韓에 각기 이질적 이념을 가진 두개의 정권이 수립되고 분단 40여년간의 긴 어둡고 괴로운 갈등과 대립의 길로 걸어 오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호비방과 적대행위가 노골화되었던 것이다. 그 많은 논쟁이나 적대행위의 근거에는 南北韓政權 상호간에 각자 통치의 정통성이 자기편에 있고 상대방은 “虛構”에 불과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되풀이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통성 논쟁”이다.

48년 8월과 9월 남한과 북한에 각기 상이한 政治體制가 성립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이 고정화되었다. 이후 남북한 정권은 각기 그들이 한반도의 유일하고도 합법정부, 즉 “정통성”을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통성의 기준은 첫째 合法性, 둘째 多數支持性, 그리고 셋째 민족문화적 전통성 등등이라고 생각해 보면 남북한 정권측은 각기 건국과정부터 합법적인 절차와 다수 한국민중의 지지를 받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북한당국에 의하면 남한의 유권자총수 8백 68만여명 가운데 77.5퍼센트에 해당하는 6백 76만여명이 비밀지하투표에 참가했다고 한다. 그 결과 1천 80명의 대표자가 선출되었으며 그 중 1천 2명이 38도선 접경 이북도선인 해주에 모여 48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남조선인민대표자대회」를 열고 남한을 대표하는 「최고인민회의」대의원 3백 60명을 선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은 이미 그보다 앞서 7월에 北韓憲法제정과정에서 출현하게 되었던 것이다.²⁸⁾

南韓에서 5월 10일 전년도의 유엔결의에 의해 파견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아래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고, 이 선거에서

註 28) 1948년 7월 10일의 평양방송 및 F.B.I.S. *Daily Report*, August 26, 1948.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서울: 박영사, 1982)에서 재인용.

백 84만여명, 즉 전체등록유권자의 95퍼센트가 투표에 참가 1백 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다.²⁹⁾ 이에 따라 대통령의 선출이 있었고 8월 15일에 「大韓民國」이 수립되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장차 유엔감시하에 북한지역의 대표선출에 대비하여 南韓 國會에 북한지역분, 1백석을 유보시킴으로써 남한 정부의 전한반도에서의 합법적 대표성을 가지려고 하였던 것이다.³⁰⁾

이처럼 南北韓에 사실상 「두개의 실질적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군사적 편의주의에 입각했던 한국의 분단은 고정화되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에는 美蘇의 반목과 불화가 아직 冷戰體制化하지 않았고 또한 韓半島에 있어서의 기득권도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들 끼리 단결했더라면 자주적인 統一國家樹立이 가능했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韓半島에는 두개의 정부가 서고 南北韓이 모두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라고 주장, 남한은 그 헌법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북한지역을 반국가단체가 불법점거하고 있는 경우 失地로 간주하여,³¹⁾ 언제나 “실지회복”을 통일과업으로 동일시 하였으며 북한도 그 헌법에서 “서울”을 「통일조선」의 장차 수도로 규정하여 “남반부 해방”을 통일과 동일시하였다.³²⁾

환언하면 南北韓 서로 자기측의 체제와 통치권을 상대측에 확장한다는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측의 붕괴 내지 소멸이라는 조건하에서만 통일을 이루려고 하였다. 여기에 한국의 분단이 “內爭化”하고 不安定化되어져 상대방이 제시하는 수많은 통일방안을 서로가 거부일변도로 나오는 남북한간의 불화와 쟁점유발의 배경이 되었던 기본적 요소가 자리잡고 있는 것

註 29) U.N. Document, A/AC, 19/80, p.12.

30) U.S. Department of State,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Washington, D.C: U.S.G.P.O. 1960). p.12.

31) 「소법전」 (서울: 현암사, 1989) P.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89), PP.100-101 참조.

32) 북한 헌법 제103조 참조.

이다.

특히 北韓이 최근에 까지 “하나의 조선”이니³³⁾ “남조선의 해방”이니 “남조선에서의 민주적 정부의 수립”이니 하여 그들의 주장을 끝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正統性論爭과 남한정권에 대한 북한측의 불인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³⁴⁾

2 爭點으로서의 統一方案

최근의 南韓측 정부는 88년 냉전논리를 청산하여 북한을 民族共同體로 구성하는 동반자관계로 보는 이른바 「民族自存과 통일번영을 위한 7·7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종전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대폭 보완시킨 새로운 통일방안으로서 「韓民族 共同體 統一方案」을 발표하면서 획기적인 統一政策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南北韓간의 다방면적인 대화를 진행시킴으로써 民族共同體意識을 점진적으로 회복시킨 바탕위에서 南北頂上會議을 개최하여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꾀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³⁵⁾

우선 통일의 중간단계로 「南北聯合」을 구성할 것과 여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면 (1) 南北頂上會議을 구성하고 (2) 남북각료회의 설치, 그 하부기구로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영역별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3) 남북한의회담대표중 동수로 “南北評議會”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註 33) 21世紀委員會(위원장 李寬) 주최, 「국제환경변화와 한반도」 주제의 세미나 요지 참조. (연합통신, 3월 7일자)

34) 北韓은 최근 “盧泰愚·고르바초프” 샌프란시스코회담을 비난하는 통혁당, 즉 민족민주전선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식민지국가와 공산종주국 소련 대통령간의 회담자체가 국제외교관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35) 金學俊, “민족공동체와 남북한체제연합연구,” 국토통일원, 「통일문제연구」 제1권 3호, 1989, pp.9-32.

그리고 실무기구로 비무장지대내에 “공동사무처”를 두며, 또한 서울과 평양에 남북한의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중간 단계를 거쳐 民族的 同質性이 어느정도 회복된 바탕위에서 「남북평의회」가 마련한 「統一憲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統一民主共和國를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대하여 北韓측은 「남북연합」은 분열정책이라고 일축하면서 이른바 당국, 정당, 사회단체의 「民族統一協商會議」를 즉각 개최할 것을 제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일관된 주장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방안의 골자는 현존하는 「1민족 2국가」라는 이질적인 政治體制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南北韓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각각 地域自治制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統一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北韓측의 통일방안은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를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공법과 보안법의 폐지, 주한미군철수와 같은 남한측이 수락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 걸고 있는 것도 비현실적인 통일방안의 속성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³⁶⁾ 왜냐하면 해방후 南北韓間에 오랫동안 이질적 이념과 政治共同體속에 살아 왔고, 극도의 불신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統一의 완결형태란 이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南北韓은 실질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내기 어려운 통일제안을 되풀이해 왔고,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려는 심리적 여백은 어느 편도 많이 남겨 두지 않았기 때문에,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줄곧 평행선을

註 36) 慎道晟, “남북한 통일정책의 체제론적 접근,” 「국제정세」 (서울: 국제학술원) 1990년 2월호, pp. 42-43.

달려 왔다.

3. 交叉承認 및 유엔加入問題

89년 2월 韓國과 韓半島의 正式外交關係樹立으로 상징되는 남한측의 북방정책은 한국정부가 社會主義國家들, 즉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韓國정부가 의도하는 북방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와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고, 한국의 유엔 가입문제의 순탄한 해결을 초래하여 남북한간에 平和共存과 나아가서 祖國統一을 완성하겠다는 꿈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 정책의 주요대상은 중국과 소련이며 남한과 이들 국가들과의 國交頂上化는 한반도통일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정부는 73년 6.23선언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했고 7·7선언, 그리고 노대통령의 유엔연설등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선언되었던 것이다. 이 정책의 주요 목표는 첫째 민족문제해결을 위한 統一與件基盤造成, 둘째 공산권국가들과의 외교영역확대로 전방외교의 달성 셋째 社會主義國家들과의 經濟協力을 통한 한국경제시장의 확대 등인데, 南北韓關係에 미치는 것은 “통일여건기반조성”이다.³⁷⁾

여기에 대한 소련의 반응은 1988년 9월 16일 고르바초프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신평화선언」에서 구체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한국과의 經濟關係樹立의 가능성과 시베리아지역의 개발, 합작투자사업의 전개”등이었다.³⁸⁾ 그 후 경제협력분야의 진척은 크게 발전했으며, 이 보다 사회, 문화, 체육분야의 교

註 37) 朴哲彦, “민족의 진운과 북방정책,” 「민족지성」, 1989년 4월호, pp.188-189 참조

38) 한국일보, 1988년 9월 16일자 참조.

류는 더욱 급속화되어져 韓蘇간에는 각자의 상대방 수도에 「領事處」를 설치하고 있다.

이러한 소련의 변화는 이른바 “新思考”에 연유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외정책의 표현이라고 본다. 이는 한국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과 “두개의 한국”정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한국정부가 북방정책에서 내걸고 있는 한반도 주변 4強간의 남북한교차승인정책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의 주한미군철폐주장 및 南北統一 기본정책을 지지하고 있어서, 이 문제는 북한의 반응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³⁹⁾

다음으로 南韓정부의 북방정책에 대한 中國의 반응은 어떤가. 중국의 이붕총리는 88년 8월 26일 “7·7선언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한다면 지지한다”고 언급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⁴⁰⁾ 실제 韓中間에는 인적·물적교류가 놀랍게 발전하고 있으며, 韓國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단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한측과 중소와의 관계증진은 이미 오래전부터 「두개의 한국」정책을 표방하고 북한측에 접근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과 함께 남한의 북한에 대한 4강의 교차승인의 내용은 갖추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態度變化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련과 중국, 이들 공산권의 양대 강국이 남한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북한의 반응은 어떠한가, 북한은 남한측이 제안한 「7·7」선언에 대해서 이미 “분열주의자들의 책략”이라고 88년 7월 12일 「祖國平和統一委員會」의 성명에서 밝혔다.⁴¹⁾

註 39) 국토통일원, 「한반도의 장래와 일본의 안전보장 : 북한동향을 중심으로」 (1986.9), pp.44-45.

40) 1988년 8월 26일자 경향각지의 신문참조.

41) 「로동신문」 (1988년 7월 12일자).

북한은 한국의 북방정책, 즉 한국의 대중소관계 개선은 두개의 한국을 固定化한다는 논리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도 수교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북한 고위당국자들의 단호한 언급에서 찾을 수 있다.⁴²⁾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한측이 꾸준히 추구해 온 이른바 남북한정부에 대하여 각자의 우방국들이 벽을 넘어 상대방을 인정하는 “交叉承認”방식이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에 있다. 이 교차승인 방식은 지난 70년대에 미국에 의해 제기된 이래 20여년이 지났지만 아무 진전없이 남북한간에 공허한 논쟁만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⁴³⁾

이와 관련하여 南北韓의 유엔가입문제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 남한측의 유엔가입문제는 「先유엔가입, 後조국통일」을 주장하면서 “하나의 國號로 단일 가입”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도 韓國은 독일의 예를 들어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각자 가입하여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통해 점진적인 통일에의 길로 나간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北韓측은 이것 역시 조국의 분단을 영구화한다는 뜻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⁴⁴⁾ 그런데 金日成은 90년 5월 24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표자대회”에서 연설을 통해 종래와는 달리 통일이전이라도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방안으로 “單一議席 유엔共同加入”을 제의했다.⁴⁵⁾

여기에 대해 韓國政府는 공식논평을 통해 “북한측이 말하는 단일의석공

註 42) 김진현, “미국학술회의 남북한 대화,” 「동아일보」, 1990년 5월 22일자 참조.

43) 북한의 로동신문 논설은 1990년 6월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역사적인 韓·蘇정상회담에 이루어진 韓國과 蘇聯간의 관계정상화 노력을 “미제국주의자들과 내외분열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두개의 한국을 고착화 시키려는 제략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동일자 동경발 AFP통신 참조)

44) 최우진 北韓평화군축연구소부소장은 1990년 5월 17일부터 3일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증소문제연구소와 일본요미우리신문 주최의 제6회 아시아관계국제회의의 “변화하는 아시아”세미나에서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은 두개의 한국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1990년 5월 22일자 참조)

45) 北韓의 김일성은 1990년 5월 26일 제9기 최고 인민회의의 1차회의에서 주석 취임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한이 단일의석유엔공동가입”하자고 제의했다. (1990년 5월 27일자 경향각신문참조)

동가입안을 南北關係의 현실과 國際社會에서의 규범 및 관행, 회원국자격에 관한 유엔헌장규정등을 고려할 때 매우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⁴⁶⁾ 남한이 소련, 중국, 동구를 대상으로 北方政策을 펴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은 물론이고 비동맹지역에 外交力量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는 종래의 그들의 주장인 “유엔단일국호가입”을 내세우고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實用主義的 외교노선으로 나가면서 남한측에 대해서는 더욱 強硬路線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문제도 통일에의 효율성이나 타당성을 갖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4. 駐韓美軍撤收問題

駐韓美軍문제는 南北韓간에 統一論議를 전개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⁴⁷⁾ 더우기 급변하는 탈냉전논리의 현 世界情勢속에서는 더욱 그 논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다. 美軍의 남한내 주둔은 매우 복잡한 역사적 연혁을 가지고 있다. 2차대전후 日本軍의 무장해제와 통일정부수립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최초로 주둔했으며, 그 뒤 美蘇간 냉전의 심화는 韓半島에 두개의 정부를 등장시켰으며, 남한정부수립후 49년 6월말 일 단 완전철수했다.⁴⁸⁾

註 46) 동아일보, 1990년 5월 28일자 참조.

47) 北韓은 1988년 11월 7일 「한반도 평화보장 4원칙」을 채택하고 선전공세를 취하고 있다. ①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이어야 한다. ② 주한미군철수 ③ 남북군축의 실시 ④ 미국과 북한간에 평화협정체결, 남북간에는 불가침 선언 채택, 이를 위해 3자당사자 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金昌順, “남조선 혁명의 전략사상에 변화있는가,” 「북한」 (북한연구소) 1989. 2월호, pp.36-37. 참조)

48) 당시 美國합참본부는 미국의 극동전략에 있어서 韓半島의 전략적 가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은창일, “주한미군문제의 재검토,” 「국제문제」, 1990년 2월호, pp.43-48.

그로부터 1년이 지난후 美國政府가 다시 미군을 韓半島에 파견한 것은 6.25동란으로 北韓軍의 전면무력침공을 받은 한국방위를 돕기 위한 國際聯合의 결정에 의거 유엔군으로 참전하면서 다시 韓半島에 주둔하게 되었다.⁴⁹⁾ 그뒤 남한정부는 미국과 韓美相互防衛條約을 체결하여 이러한 條約關係를 보장하는 현실적인 징표로써 미군이 남한에 주둔하게 된 것이다.

미군의 核우산하의 한국의 안전보장, 혹은 미군의 韓半島에서의 전쟁억지력이라는 말과 같이 미군의 주둔은 “連繫鐵線”으로 평시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사전에 전쟁재발을 예방한다는 역할수행, 이것이 미군주둔의 논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신데탕트시대를 맞이하여 세계각지에서 蘇聯軍의 이동과 철수, 그리고 병력감축이 일어 나면서 주한미군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정부당국자들의 언행에서 減軍문제가 논의되어져 이미 실천에 옮겨 지고 있다. 물론 미군의 감군에는 한국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⁵⁰⁾

고르바초프는 89년 5월 中蘇頂上會談석상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미 그 正當性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재강조하였다.⁵¹⁾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북한의 주장은 한결같이 “世界帝國主義의 원흉인 미제국주의가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하고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다. 아시아대륙의 요충지인 남조선에 핵군사기지를 꾸리고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⁵²⁾

註 49) *The New York Times*, June 26, 1950 참조.

50) 1990년 6월 6일 워싱턴에서 노태우대통령과 부시 미국대통령간의 회담내용 참조. (1990년 5월 28일자 동아일보 참조)

51) 1989년 5월 18일자 한국일보 참조.

52) 안드레이스 크라체크(외), 「서구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본 북한 사회」 (서울: 증원문화, 1990), pp.238-239 ; 「로동신문」, 1987. 9. 25, 김정일, “반제투쟁의 기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국토통일원, 「北韓概要」 (1986), pp.339-340.

여기에 대해서 美國은 북한의 위협이 이 지역에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병력의 완전철수는 현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병력의 감축도 이 지역에서의 전투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韓國정부의 정책노선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⁵³⁾

또한 北韓은 86년 6월 「韓半島 非核平和地帶創設」을 제의했지만 실제 외신보도에 의하면 북한 역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⁵⁴⁾ “국제핵안전협정”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韓半島에서는 냉전의 해빙과는 달리 군사적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련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으며,⁵⁵⁾ 한편 북한은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는다면 “核擴散禁止條約”에서 탈퇴하겠다는 위협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앞으로 통일논의를 제기할 때는 주한미군문제에 대한 쟁점은 필수적인 속성을 지닌다.⁵⁶⁾

5. 南北對話의 當事者問題

통일논의에 있어서 南韓측은 「南北韓當局者會談」을 개최하자는 데 대하여 北韓측은 남북한의 정부, 정당,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連席會議」방식을

註 53) 1990년 6월 6일 韓國의 노태우대통령은 워싱턴에서 부시 美國대통령과 韓美정상회담을 끝내고 기자회견에서 점진적 군축정책을 시사했다.

54) 美國 情報기관은 스파이 위성을 통해 北韓이 3백10마일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핵탄도미사일을 개발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1990년 6월 6일자 워싱턴발 연합통신참조)

55) 고르바초프는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토크연설과 1988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언급하고 있었다.

56) 「駐韓 美軍의 존재가 한반도통일에 긍정적인 역할과 가능성을 한다」는 견해가 있다. (김국진, “주한 미군과 한반도통일,”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29집 제1호 (1989), pp.129-139. 참조)

고집해 왔다.⁵⁷⁾ 지금까지 韓國정부는 양측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軍事問題를 비롯한 南北韓關係의 책임있는 협상을 위해서 남북한정부대표로 구성된 회담을 가질때 실효성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데 착안하여 이러한 政治會談을 일관성있게 요구해 왔으나, 北韓은 이른바 각계각층의 세력 대표자들간의 연석회의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⁵⁸⁾ 軍事問題에 있어서도 미국과 직접 협상하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변화를 약간 보여, 88년 11월에 와서야 「北南政治軍事會談」을 제의했던 것이다.⁵⁹⁾ 특히 북한은 軍事問題에 관하여는 미국 및 남한과 3자회담을 요구해 왔다.

이렇듯 南北韓은 美蘇關係와는 달리 상대방을 정통성있는 존재로 인식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아직도 共產革命의 한 전술인 「통일전선」전략을 기도하고 있다. 우선 어떤 형태로든지 南北韓 당국자간에 대화가 성립되어야 통일여건조성에 가장 중요한 균축이나 실질적인 쟁점을 협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통일논의를 위한 多元的 當事者論은 남한내의 재야·학생단체들이 주장하는 “民衆”에 의한 통일주체논리와 그 맥을 같이 하여 南韓政治體制의 혼란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려는 위협마저 안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 주변정세와 국제정치의 해빙과 탈냉전논리속에서 오히려 통일의 주체와 협상의 주체적 분야에 남북한간에 불신과 쟁점을 계속 유발할 징조가

註 57) 최근에도 北韓은 그들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 이름으로 한반도 재통일을 위한 전국통일전선에 南韓측의 정당 및 사회단체들이 참여 할 것을 촉구했다고 北韓 중앙통신이 보도했다. (1990년 6월 7일 동경발 AFP통신 참조)

58) 북한 김일성의 1990년도 신년사 참조.

59)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백서」 (1989), p.378.

되는 것이다.⁶⁰⁾

물론 統一의 主體는 계급적인 민중도 아니고 좁은 범위로 국한된 정부도 아니다. 統一의 주체는 남북한 국민 모두이다. 獨逸의 통일기운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등도 동서독의 독일국민들의 응결된 의지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성과이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南北韓의 당국자, 즉 “권력엘리트”들에 의한 책임있는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¹⁾

IV. 南北韓關係의 課題

48년 南北韓 두 체제가 각자 자기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출발한 지도 40여년이 넘어섰다. 그동안 南北韓은 한차례의 전쟁을 치루는 등 총체적인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데올로기에만 속박되어 미래지향적인 민족의 위상을 그려 볼 겨를도 없이 지내 왔다. 이제 韓半島의 장래는 40년전의 분단초기와는 판이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韓半島 분단의 외적 세력이며 지렛대인 美蘇가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註 60) 北韓은 1988년 12월 9일 「조국통일평화위원회」의 명의로 韓國의 재야단체인 「범민족대회추진본부」앞으로 공개서한을 통하여 이 단체가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서 “실부대표자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자고 제의해 왔던 것이다.

61) 南北韓 관계에서 “民衆統一 방식”이 이상에 불과하여 비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北韓 주민들이 너무 경직되게 정치사회화 되어져 南韓국민들과는 너무나 이질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되는 것이다.⁶⁰⁾

물론 統一의 主體는 계급적인 민중도 아니고 좁은 범위로 국한된 정부도 아니다. 統一의 주체는 남북한 국민 모두이다. 獨逸의 통일기운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등도 동서독의 독일국민들의 응결된 의지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성과이다.

그러나 韓國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南北韓의 당국자, 즉 “권력엘리트”들에 의한 책임있는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⁶¹⁾

IV. 南北韓關係의 課題

48년 南北韓 두 체제가 각자 자기의 정통성을 내세우면서 출발한 지도 40여년이 넘어섰다. 그동안 南北韓은 한차례의 전쟁을 치루는 등 총체적인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데올로기에만 속박되어 미래지향적인 민족의 위상을 그려 볼 겨를도 없이 지내 왔다. 이제 韓半島의 장래는 40년전의 분단초기와는 판이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韓半島 분단의 외적 세력이며 지렛대인 美蘇가 이념적 대립에서 벗어나 협력과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註 60) 北韓은 1988년 12월 9일 「조국통일평화위원회」의 명의로 韓國의 재야단체인 「범민족대회추진본부」앞으로 공개서한을 통하여 이 단체가 추진중인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면서 “실부대표자 회담”을 빠른 시일내에 가지자고 제의해 왔던 것이다.

61) 南北韓 관계에서 “民衆統一 방식”이 이상에 불과하여 비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것은 北韓 주민들이 너무 경직되게 정치사회화 되어져 南韓국민들과는 너무나 이질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國際環境의 변화와 함께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화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南北韓關係의 정립과 그 쟁점의 해소, 그리고 통일에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당위성이 떠오르고 있다. 이제 南北韓은 “접촉하면서 변화하고, 변화하면서 접촉하자”⁶²⁾는 독일의 선례와 같이 통일에의 길로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기본적 과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南北韓間의 쟁점을 정리해 보았지만 이러한 쟁점들이 양측이 自己中心的 기본전략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쟁점들은 통일에 필요한 핵심을 회피한 論爭的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제부터는 보다 실질적인 남북관계정립에 쌍방이 노력할 때이다.

1. 이데올로기 對立의 解消

탈냉전의 시대라고 하지만 韓半島의 분단구조는 여전히 공고하다. 그러나 이제 南北韓은 종래의 대결구조에서 대화와 공존의 시대라는 역사적 조류에 대응해서 각자의 자세를 未來指向的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즉 분단고착화로 치닫기 쉬운 장애물적 성격을 지닌 정책을 그만 두어야 한다.

南韓측은 安保至上主義에서,北韓측은 南朝鮮解放論에서 벗어나야 한다. 韓國정부는 88년 7월 7일 “民族自存과 통일번영을 위한 特別宣言”이라는 소위 7·7선언을 발표하였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같은 내용을 온 세계에 발표하였다.

그것은 오래동안 지속되어 온 남북한간의 대결외교를 포기함과 함께 南北韓關係를 더 이상 대결·경쟁관계가 아닌 “同伴者關係”로 불 것이며 북한을 적이 아닌 “공동번영해야 할 民族共同體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는 정

註 62) 브란트 前서독수상이 “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내건 슬로건 임.

책 전환이었다. 또한 南韓측은 이제까지 티부시하던 휴전협정체제의 平和協定體制로의 대체문제까지도 남북이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하여 북한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전진적인 統一政策을 추구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탈냉전시대에 부합되는 적극적 統一環境造成에는 미흡한 것으로 느껴지고 있다.

한편 북한측 金正日의 인터뷰내용에서 당장 알수 있는 것은 현재의 國際情勢의 흐름을 “혁명정세가 준엄하고 복잡한 시기”로 규정하면서 더욱 혁명태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社會主義에 대한 신념을 허물고 社會主義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여건에서 혁명교양과 계급교양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⁶³⁾

또한 金日成의 90년도 신년사를 들어보더라도 북한은 변함없이 이념적 경직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그는 연설하기를 “세계의 혁명적 인민들은 帝國主義들의 책동에 대처하여 반제 자주의 원칙, 社會主義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여야 하며……, 모두 다 주체사상의 기치 社會主義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의 영도를 따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理念的 對立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으로 신데탕트시대에 있어서 南北韓이 상대방을 붕괴시켰다는 적화통일전략이나 반공통일전략을 새 시대에 맞게 改善하지 않는 한 통일을 향한 보다 前進的이고 건설적인 南北關係의 개선책은 조만간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

註 63) 1989년 12월 4일 북한중앙방송 청취참조.

2. 相互不信의 克服

이념적 대결이 첨예화하고 거기에 따른 상호불신이 팽배해 있는 南北韓간에는 그 어떤 통일방안이나 韓半島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상대방에 제의해 본들 전진적인 반응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不信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北韓의 대남제외나 통일방안은 당장 통일하겠다는 성격이 짙은 것들이 많은 것이 특색이다. 그러한 것들은 상호신뢰회복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南韓측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를들면 高麗聯邦制의 애매모호한 내용과 첨가해서 내놓은 보안법폐지등 까다로운 조건의 제시라든가, 또한 중간단계없는 통일의 完結段階형태를 주장하는 것 등이 그런 범주에 속한다. 최근에 金日成이 제의하고 있는 하나의 의석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엔에 가입하자는 것도 그러한 불신의 맥락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不信의 극복이 시급히 요청된다. 그런데 신뢰의 회복은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통일의 과정은 우선 신뢰 구축이 가능한 중간단계가 필요하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南北韓간에 다각적인 교류와 非政治의분야에서 우선적으로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3. 軍縮과 緊張緩和

南北韓간에는 가공할만한 전쟁을 치렀고 韓半島는 평화가 아닌 준전시나 다름없는 휴전상태에 있고 남북을 가로지르는 休戰線을 중심으로 백만이상의 중무장한 강력한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상태에서는 그 어떤 관계개선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자명하다. 그리고 南北韓간

에는 獨逸과는 달리 양측이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모든 국내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아직도 불신의 벽은 높기 때문에 군사적 신뢰구축 장치로서 군축을 논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 할때 南北韓간에는 정치적 대화와 협상이 軍縮協商에 선행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측이 제시하고 있는 政治·軍事會談을 통한 일괄적 統一論은 현실성이 약한 것이다. 南韓측은 88년 6월 유엔총회에서 외무장관의 제의로 신뢰구축을 위해 불가침선언 및 軍縮協商을 南北韓代表간에 회담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⁶⁴⁾

한편 北韓은 미군철수, 양측의 군대를 10만수준으로 감축할것, 휴전협정을 美國과 협상하여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韓半島의 비핵지대설정, 3자회담 개최 및 팀스피리트군사연습중단 등을 집요하게 요구해 왔다.⁶⁵⁾ 이러한 요구에서 양측은 실질적으로 군비축소나 통제를 위한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자기입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해 왔다는 색채가 짙은 것이었다.

南北韓은 현시점에서 신뢰구축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軍事問題에 대한 회담을 열자는 상호제안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한 적이 없다. 이런상태에서 南韓은 군축에 관한 접근방법이 점진적인 것으로 작은것, 혹은 경제적인 교류와 같은 비군사적 분야에서 접근하려는 데 반하여 北韓은 정치·군사적인 성급한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다.

註 64) 88년 6월 최광수의외무장관의 제의에 이어, 10월에는 노태우대통령의 유엔총회연설에서도 남북한 정상회담을 열어 군축을 포함한 모든 현안문제의 논의촉구가 있었다.

65) 최근에도 北韓은 “남북불가침선언”의 채택이 선행되어야하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주한미군철수, 사단급 이상 규모의 훈련중지, 쌍방고위당국자간의 직통전화설치, 3~4년 이내에 3단계 군축을 통해 각각 10만명이하로 병력을 감축한다는 군축제안을 했다. (1990년 6월 3일 서울발 내외통신참조.)

아울러 南韓측 내부에는 주한미군문제,⁶⁶⁾ 전술핵문제, 작전지휘권 등의 복잡한 미해결문제가 얽혀 있고, 위에서 지적한 南北韓간의 군사문제 접근방식의 상호모순성은 남북한의 군축제안을 허구적인 선전에 머물게 할 뿐이다. 이제 國際安保環境의 변화와 함께 극동지역의 美蘇의 군사기지에도 변화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고 주한미군문제도 주목을 받게 되었다.

北韓은 지난 5월 31일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정무원 공동명의로 「韓半島 平和를 위한 군축안」을 제의하면서 때마침 韓蘇頂上會談이후의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응하는 재빠른 제스추어를 보이면서 평화공세를 펴고 있다.

北韓의 군축제외에 대하여 南韓의 반응도 종전과는 달리 적극성을 나타냈다. 盧泰愚대통령은 “6·29선언” 3주년을 맞으면서 北韓이 거론해 왔던 「南北韓 불가침선언과 군비축소」를 적극적으로 수용,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⁶⁷⁾ 사실 군축을 이룩하려면 南北韓간에 오랜 기간 쌓여 있는 적대감과 불신이 해소되는 신뢰구축장치나 제3자의 입회와 보장이 필요한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상호신뢰구축에는 南北韓 정치엘리트간의 꾸준한 접촉과 의지적 決斷이 있어야 하고 쉬운 분야부터 남북교류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체로 軍縮問題에 임하는 北韓의 태도는 지금까지 南韓 방위의 지렛대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에 주안점을 두고 “平和協定”체결과 군축을 들먹여 왔던 것이었으므로 南韓측의 불신을 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韓半島의 安保環境이 탈냉전논리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군철수문제와

註 66) 1990년 6월 8일 美國務部 리처드 솔로몬 동아시아·태평양 담당차관보는 “美國은 北韓이 비무장지대의 병력을 군사위협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주한미군의 추가 감축을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자 미국의 소리방송(VOA) 참조)

67) 1960년 6월 29일 서울발 聯合通信참조

남북한 군축논의가 그 성과야 어떠한 활발하게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에 처하게 된 것이다. 환언하면 北韓의 군축제외가 종래와 같은 선전 목적에 급급하더라도 南韓으로서는 북한에 제의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주한 미군문제와 함께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단계에 다다른 것이다. 韓國정부와 집권 여당은 남북한간에 군비축소문제와 관련, 「정치적 신뢰구축, 군비통제, 그리고 군비축소」라는 3단계 과정을 확정하고 앞으로 南北韓高位級會談에서 북한측과 협상하기로 했다고 방침을 발표했다.⁶⁸⁾

이와 함께 統一院長官은 불가침선언과 관련, 현재의 경계선유지, 상대방의 정치 社會秩序 존중, 무력사용금지 등 3개 차원에서 北韓과의 불가침조약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⁶⁹⁾ 사실 현재 南北韓 관계에서 가장 절실한 선택은 전쟁위기와 反 理性的 군사대결체제속에 묶여 있는 적대 관계를 긴장완화와 平和秩序體制로 전파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軍縮은 지난 87년 12월 美蘇兩國간에 중거리 핵전력(INF) 폐기협정이 체결된 후 세계적인 신사조로 등장한 과제이다. 따라서 南北韓關係에 있어서도 군축은 平和共存과 統一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해결되어야 할 핵심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北韓과의 신뢰는 구축되지 못하고 있지만 韓半島 주변환경의 해빙기류와 함께 南韓측에서도 종래 北韓이 제의한 남북고위급회담 의제중 정치 군사문제가 다각적 교류 협력에 앞서 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으로 발전했다.⁷⁰⁾ 앞으로 南北韓 군축논의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제로는 ① 틱스피리트훈련 중지 및 주한미군철수문제 ②

註 68) 부산일보, 1990년 6월 29일자 참조.

69) 1990년 6월 26일 大韓民國국회 외교분야질의에 대한 홍성철 국토통일위원장 답변내용. (국회회의록 참조)

70) 南韓측은 종래 주장하기를 남북고위급회담의제표기에 있어서 다각적교류가 정치 군사적 대결해소문제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韓半島의 비핵지대화 ③ 北韓의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협정가입문제 ④ 군비 감축문제 등이다.

이념과 불신의 깊이가 너무나 심화되어 있는 현시점의 南北韓關係에 있어서 군축에의 길은 정말 어려운 과제이다.⁷¹⁾ 특히 北韓은 지난 86년부터 88년까지 3년동안만 하더라도 40억4천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는 한편 제3세계등지에 모두 2억5천5백만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 것을 감안 할때 軍縮協商의 장래는 어두운 것이다.⁷²⁾

탈냉전시대와 함께 남북대화의 열기가 높고 북한의 태도 역시 조금 변화되고 있지만 그들의 종래 주장인 각계각층의 대상이 참여 하여야 한다는 對話대상자논쟁이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도 속단할 수 없다.⁷³⁾ 지난 7월 3일 板門店에서 南北韓간에 8월에 「남북고위회담」을 열수 있는 예비접촉을 갖고 그 길을 열었다고 언론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다.⁷⁴⁾ 이것은 지금까지 北韓이 견지해 온 대화상대자와 참여대상에 대한 주장의 변화를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다소간의 남한정부 불인정 정책의 변화를 뜻한다.

그러나 겉으로는 약간의 변화가 보이지만 안으로는 여전히 北韓의 일관된 논리가 도사리고 있다. 즉 南北高位級會談의 “議題”에 있어서 종래 북한측이 주장해 온 “정치 군사대결 해소” 우선주의 입장이 南韓측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토론이 앞으로 자칫 北韓측의 정치선

註 71) 지난 7월 6일 美國 스탠퍼드대학 주관, 「韓半島 평화와 안보에 관한 회의」주제로 열린 南北韓과 美國학자들이 참석한 학술회의에서도 北韓의 “평화군축연구소”의 이형철연구실장은 先군축없이 어떤 신뢰구축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기존 북한측 주장을 되풀이 했다. (조선일보, 1990년. 7. 8, 참조)

72) 국토통일원의 국회제출자료 참조(통일원은 금년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를 인용해서 작성)

73) 1956년 5월 24일 北韓의 김일성주석은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대화의 발전」과 「全人民的統一戰線의 형성」이라는 양대과업을 강조했던 것이다.

74) 동아일보, 1990년 7월 3일자 참조.

전장이 될 장후가 농후한 것이다. 그 요인으로는 北韓은 金日成의 지시에 따라 일면 南韓 당국과의 대화를 진행하면서 국제해빙기류에 따른 國際列強들의 압력을 감소시키면서 명분을 얻고,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 단체들과의 대화를 모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統一戰線의 형성을 꾀한다는 전략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다.

南韓측으로서는 韓蘇, 韓中關係의 개선이 진전되면서, 또한 國際政治의 새로운 데탕트시대에 즈음하여 南北對話의 의제로 정치 군사문제의 처리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北韓측의 종래 주장을 받아 들이게 된 것이다. 정치 군사문제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유엔가입문제, 군축 즉 주한미군과 핵무기의 철수문제, 그리고 北韓의 핵무기 생산과 핵안전협정가입문제 등이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논의의 대상이 된다.

장기간의 비난과 책임전가속에 중단되었던 南北對話가 쌍방의 當局者레벨에서 열리면 종래 南北韓간에 쟁점이 되어 왔던 당사자논쟁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남북한이 진지하게 통일을 향하여 정치문제와 군비축소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앞선다. 왜냐하면 北韓은 여전히 그들의 일관된 논리인 남북한의 정부, 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소위 「民族統一協商會議」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北韓은 7·4공동성명 18주년을 맞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의 정당성과 통일에 관련된 기본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그들이 지난해 9월에 제의한 바 있는 政治協商會議 성격의 民族統一協商會議를 시급히 소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⁷⁵⁾

註 75) 내외통신, 1990년 7월 4일자 보도참조.

V. 結 論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脫冷戰時代의 성격은 사회주의권에서 비롯된 변화가 가장 으뜸가는 특징이다. 國際共產主義運動의 일관된 논리인 資本主義의 타도에서 궤도를 수정, 資本主義國家들과의 공존과 협력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그 특징이다. 말하자면 社會安定을 위한 실리와 國家利益을 外交政策의 핵심으로 한다는 변화이다.

탈냉전의 무드가 한반도 주변에도 전개되고 있지만 南北韓關係改善에 있어서 핵심이 되고 있는 北韓의 변화나 개방 여부는 아직도 속단하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韓蘇頂上會談이후에도 蘇聯정부는 北韓의 내정이나 韓半島統一政策에 있어서 北韓의 정책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어서 더욱 북한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어려운 과제이다.⁷⁶⁾ 또한 中國정부도 계속 정치분야에 있어서는 남한을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統一政策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몇번이나 되풀이 해서 발표하고 있다.⁷⁷⁾

물론 韓國政府는 中國과의 다각적인 교류의 폭을 확대하고 있고 「하계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더욱 쌍방간의 실질적인 대화와 관계정상화로 지금 까지 부진하고 있는 정치분야의 國交樹立을 의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북한의 태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註 76) 蘇聯外相 「젠나디 게라시모프」는 지난 6월 26일 소련의무성 브리핑에서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련의 대북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고 南北韓의 直接對話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워싱턴발 동아일보 변상근특파원 발신, 동아일보, 1990년 6월 29일자 2면 참조)

77) 中國정부대변인은 韓國과 中國이 비정부차원에서 상호무역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덧붙여 양국관계가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 경제, 무역차원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1990년 6월 21일 북경발 신화사통신)

한편 日本정부는 韓蘇頂上會談을 한반도정책의 전환점으로 삼고 대북한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가이후 도시끼」 일본수상은 앞으로 北韓人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을 철폐할 것과 北韓으로 하여금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접촉을 통해 國交樹立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의했다.⁷⁸⁾ 이와는 대조적으로 北韓은 日本에 대한 비난과 적대감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

즉 최근 北韓의 日本에 대한 주장의 내용을 보면 日本이 군비확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과 이를 통해 韓國民뿐만 아니라 전아시아인들의 분노를 초래하고 있으며, 日本은 美國의 대한반도정책에 편승해서 北韓을 적대시하며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日本이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두개의 한국” 정책을 지지하면서 통일을 저해하는 分裂主義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⁷⁹⁾ 따라서 韓日兩國의 관계강화를 온 민족의 平和統一 염원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비난했던 것을 고려해 보면 한반도주변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政府가 주력하고 있는 北韓의 배후 맹방인 蘇聯, 中國과의 교류, 이른바 북방외교 그 자체도 대북한과의 협상에서 저울질 할 수 있는 카드로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물론 韓國과 蘇聯과의 무역고는 높아만 가고 정식수교도 목전에 두고 있고 中國과의 통상도 확대일로에 있지만 北韓은 그러한 南韓측의 정책을 두개의 한국을 영구화하는 분열책동이라고 계속 비난하고 있기 때문이다. 韓國이 그 동안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국가들과 中國과의 공존 협력을 이써 바라는 궁극의 목적은 北韓과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진전된다면 “北方政策”뿐만 아니라 북한이 그동안 계속 추진해

註) 78) 1990년 7월 3일 KBS 8시 정규방송참조 (이윤성북과원송신)

79) 「노동신문」, 1990년 6월 22일자 논설란참조. (내외통신 6월 25일자)

은 大韓民國孤立政策인 이른바 “國際革命力량의 강화”라는 것도 함께 상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남북한 쌍방은 타도와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실질적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國際政治秩序와 동북아시아질서의 변화에 대응해서 관계개선을 해야 한다. 물론 객관적 환경의 변화는 韓半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하자면 南韓에서의 민주정치발전의 가속화와 北韓의 변화가능성이 그 어느때 보다 분명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한의 변화는 느리기는 하지만 북한의 “주체사상”, 즉 방어적 民族主義도 변화되어야만 하는 여건에 놓여 있다. 인간의 삶을 보다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탈냉전시에 북한의 개방과 그 사회의 다원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南韓 역시 종래의 극단적 방어적 民族主義 내지 정통성논쟁에서 탈피해서 좀더 民主化와 다원화된 사회를 건설해야 하고 對북한관계에서 유연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國內情勢와 國際情勢의 동시적 전개는 사상 유례없이 統一의 好條件을 만들어 주고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신데탕트와 개혁풍조는 南北韓 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해 긍정적인 정세발전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세와 부합해서 南北韓 쌍방이 가져야할 기본적 태도가 중요하다. 우선 이념적 대결과 정통성논쟁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南北韓의 각각 통일방안이나 상대방에 대한 제의는 위에서 제기된 쟁점유발의 근원이 되는 요소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半島에 “사실상의 두개의 정부와 政治體制”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⁸⁰⁾ 협력과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民族共同體의 同質的 접근을 향해 쌍

註 80) 이기택, “韓蘇회담이후 북한문제,” 「부산일보」 (부산일보), 1990. 6. 18

방은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예컨대 軍縮문제나 미군철수, 그리고 南韓의 북방정책도 상호신뢰성만 회복된다면 북한이 제기하는 논쟁꺼리가 될 수가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相互信賴性만 회복된다면 “모스크바”를 기치지 않고 곧 “평양”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本質을 외면한채 형식적인 구호에만 끝나는 통일방안이나 관계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고 實質的인 교류확대,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으로 現實的인 방안, 즉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北韓이 「하나의 조선」정책을 수정할 수 없다면 南韓에 대한 共產主義 침투위협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南北韓간에 긴장완화와 정보의 공개, 그리고 다각적 교류를 통해 진정한 하나의 韓國, 즉 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데 정책의 變化를 보여야 할 것이다.

第7章 南北韓의 軍備統制와 政治關係

— 崔炳云 (空士 教授)

I. 머리말	209
II. 軍備統制의 方法	214
1. 軍備統制의 概念	214
2. 包括的인 接近方法	217
III. 南北韓 軍備統制의 主要方案	222
1. 政治的 軍備統制：政治的 與件造成	223
2. 質的 軍備統制：軍事的 信賴樹立	228
3. 量的 軍備統制：軍備縮小	231
IV. 展 望 (結論)	235

I. 머리말

南北韓의 군사적 대치는 근본적으로 정치적 갈등에서 야기된 것이며, 양측의 경쟁적인 군비증강은 政治的 葛藤의 한 현상이다. 남북한 갈등의 특징은 2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바, 냉전체제에서의 미소대립에 의한 國際的 갈등구조와 분단체제에서의 民族内部的 갈등구조이다. 40여년간의 정치군사적 갈등관계 속에서 남북한은 안전보장의 유일한 수단이 오직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뿐이라고 확신하고 상대방보다 우세한 軍事力을 갖추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각의 동맹국인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지원과 원조 하에서 새로운 무기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방위산업을 질적으로 고도화하며 양적으로 확대육성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군비경쟁을 해왔다.

軍備競爭의 현황을 살펴보면, 군사비 면에서 남북한의 군사비 총액은 1988년 기준으로 국토의 평방km당 43,891달러로써 세계 전체국가들의 평균 5,074달러 및 개발도상국들의 평균 1,934달러보다 각각 8배 및 20배나 높은 수준이며¹⁾ 兵力數에 있어서 인구 1,000명당 세계 평균 5.8명, 선진국 9.6명 그리고 개발도상국 4.7명과 비교하여 남한은 14.3명 북한은 39.1명이다.²⁾ 武機體系에서 파괴력과 기동력이 현저하게 개선된 지대지 미사일, 야포, 탱크, 다연장 로켓트, 전투기 및 고속 미사일함 등으로 무장한 남북

註 1. Ruth Leger Sivard, World Military and Social Expenditures:1985(Washington D.C.: World Priorities, 1985), pp.40~41; 拙稿, “남북한 군비 통제에 관한 연구: 단계별 추진방향과 시안,” 서강대학교 박사학위 논문(1989), pp.1~3, 196.

2. U. 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1988 (Washington D. C.: ACDA, 1988), pp.27~49.

한 군사력은 한국전쟁 당시에 비하여 약45배에 이르고 있다.³⁾ 또한 南韓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와 北韓의 생화학무기 그리고 개발 가능성이 큰 북한의 핵무기를 고려할 때,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過密한 武力對峙의 非正常的인 狀態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식면에서 남북한은 상대방이 기존의 군사력을 전방의 주요전선에 배치하여 전쟁을 위해 부대의 재배치 없이 기습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⁴⁾

6.25戰爭의 경험을 가진 남북한이 『상대방의 침략』에 대응하여 군사력을 증강한 것은 남북한 갈등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일면, 제2의 한국전쟁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남북한의 군비경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軍備競爭의 逆機能은 첫째, 군비경쟁은 전쟁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둘째, 軍備競爭의 경제적 부담은 국가의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셋째, 군비경쟁은 군사중심주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社會의 軍事化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되고 남북한간의 군비 경쟁의 역기능도 심각하게 고려된다.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파괴의 정도는 가

註 3. 拙稿, op.cit., p.139. 남북한의 군사비중 부자액을 기준으로 1954년부터 1988년까지 부자비 총액은 1953년까지의 부자비 총액의 약 45배이며, 그 자체가 파괴력 및 기동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총체적 전쟁능력이 엄청나게 증가했음을 말해준다.

4. 국방부, 「國防白書:1988」, (서울: 국방부, 1988), pp.25~27. 66~67 북한은 전쟁을 위하여 병력의 재배치없이 즉각 공격할 수 있도록 평양-원산 이남의 전방에 지상군의 2/3 정도를, 함정 및 전투기의 과반수 이상을 공격으로 전환가능하도록 배치하고 Scud-B는 전주-김천 선을 Frog는 수원선까지 장거리포는 수도권을 현위치에서 타격할 수 있으며, 전투기도 현위치에서 수도권은 8분 부산은 30분에 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

「노동신문」, 1985. 6. 4. 남한과 미국이 북을 향하여 180여개소에 땅굴을 파고 부력의 80~90%를 전진시켜 놓고 언제라도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공스러운 것이 될 것이며, 파괴의 궁극적인 대상이 異民族이 아니라 장차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해야 될 單一民族이며, 戰鬥領域도 우리의 生活圈임을 고려한다면 비록 군비증강이 갈등의 논리적인 귀결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타당하고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정치적 목적이 아무리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 파괴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南北韓間의 軍備統制는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발생시 그 피해의 범위와 정도를 축소하며, 군비경쟁의 위험과 비용을 最小化해야 된다는 당위적 필요성에서 제기되고 있는 동시에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국제사회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국제규모의 군축회담은 한반도에서도 지극히 타당성 있는 현실문제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근 반세기 동안 남북한은 다양한 ‘군축제의’⁵⁾를 해왔지만 『休戰協定』을 제외하고는 실전을 위해서 직접 합의한 것이 없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한간의 각종 회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70년대에 이후 남북한은 경제, 문화, 체육 등 교류에 관한 회담을 했으며, 制限的이기는 하지만 이산가족 고향방문, 예술단 교환공연, 그리고 경제교류가 이루어졌지만 더 이상 확대 발전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대화와 교류가 중단된 이유는, 葛藤狀況에서는

註 5. 남북한 군축제외에 관한 문헌 및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방안 및 주요외제 비교(국통조-84-6-1792)』(서울: 국토통일원, 1984); 이석호, “군비통제와 정치경제: 북한의 경우,” 『국제정치논총』 제 26집, 제2호(1986), pp.109~110; 송대성, “한반도 군축 타당성에 관한 검토,” 『국제정치논총』 제29집, 제1호(1988), pp94~95. 연대별로 북한은 50년대 35회, 60년대 35회, 70년대 81회, 80년대 74회를, 남한은 50년대 4회, 70년대 41회, 80년대 18회를 제외했으며, 제외 내용에서, 북한은 주한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군사력 감축, 군비경쟁중지, 非核 및 核武器 撤去,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제외했고, 남한은 不可侵協定締結, 무력충돌방지, 적화통일포기 및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등이다.

“우호적이며 양보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까지도 갈등행위”⁶⁾로 인식되는 것처럼, 비정치적 차원에서 민족적으로 有益한 사업까지도 정치적 갈등과 연계됨으로 인하여 정치적 葛藤의 限界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사력을 통제하는 군축제의는 쉽게 합의될 수 없었고, 오히려 提議自體를 오직 『평화공세』로 인식하려고 했던 경향이 두드러졌다.

남북한의 군축제의 내용은 접근방법에 있어서 남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의 접근방법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南北한 憲法’⁷⁾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은 「통일과 독립을 위한 鬭爭」을 남한은 「통일정책의 추진」을 법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政治的 統合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문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며, 남한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교류가 가능한 것부터 협력을 확대하여 政治 統合을 漸進적으로 이룩하자는 것이다.

군축방안으로서 미군철수, 핵무기철폐 및 군사력 감축을 동시에 주장하는 북한의 「總體的인 一括的 통제방법(holistic package control approach)」과 신뢰수립 등 합의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는 남한의 「個別的인 漸進的 통제방법(individual piecemeal approach)」은 각자의 통일방안과 연계되어 자신의 통일방안의 정당성의 근거로 이용되어 왔으며, 통일방안에서 서로의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군축방안에서도 같은 현상을 보이

註 6. C. R. Mitchell,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Conflict (London: Macmillan Press, 1981), pp.120~122.

7. 韓國憲法(제6공화국) 제3조: “大韓民國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 서로 한다.” 제4조: “大韓民國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基本秩序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北韓憲法(1972년개정) 제5조: “朝鮮人民共和國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고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상의 차이는 90년 9월 ‘南北總理會談’에서 제시된 양측의 군축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한이 다양한 군축을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다양한 군축방안들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남북한 갈등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政治的 協力이 缺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은 정치적 목표의 상호 불가양립성을 반영하는 갈등의 정치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군비경쟁의 궁극적인 원인인 정치적 葛藤의 解決없이 군축의 주장은 무미건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는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한 영역으로 분석될 때 그 解決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 군비통제는 정치적 갈등해결의 과정에서 특정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남북한이 제시한 군비통제방안들을 실천가능한 包括的인 計劃으로 만드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국제적 경험에서의 군비통제 개념을 설명함으로써 남북한 군비통제추진을 위한 概念的 範圍를 설정하며, 새로운 접근을 위한 개념의 틀을 제시하고, 둘째, 새로운 接近方法에 따라 남북한 군비통제의 주요방안을 설명하고자 한다.

II. 軍備統制의 方法

1. 軍備統制의 概念

2차대전 이후 군비통제는 실질적으로 量的 統制를 중심으로 한 군비축소의 형태를 취했으며, 대표적으로 미소간의 '핵무기제한에 관한 협정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협정들에 있어서 軍備縮小의 개념은 “국제조약, 협정, 국제기구의 결의, 국가 또는 정치집단의 선언 등을 통해서 정해진 어떤 수준으로 군사력을 통제, 감축, 제한, 금지, 동결하는 등 인적 불적 戰爭手段을 制限하고 감축하는 것”⁸⁾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軍縮』을 의미하며, 버튼(John Barton)교수는 이러한 양적 통제방법을 「軍備統制 I」이라고 불렀다.⁹⁾

그러나 핵무기 중심의 양적 통제는 몇 가지 점에서 한계를 노출하였다. 즉, 核武器 制限 協定은 그 대상을 핵무기에만 한정함으로써 總體的인 군사력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특히 군사동맹, 전략, 무기개발, 생산 잠재력 그리고 재래식 무기체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으로써 협정 자

註 8. William Epstein and Bernard T. Feld, ed., New Directions in Disarmament, (New York: Praeger, 1981), pp.11~12; Marek Thee, ed.,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 Unesco Reader for Disarmament Education, (Paris: Unesco Press, 1981), pp.217~239; Thomas L. Saaty, Mathematical Models of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pplication of Mathematical Structures in Politic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68), p.4; Committee on International Security and Arms Control National Academy of Science, Nuclear Arms Control: Background and Issues,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1985), pp.6~11.

9. John Barton, “The Politics of Regional Arms Control,” John Barton and Imai Ruykichi, ed., Arms Control II: A New Approach to International Security, (Cambridge: Oelgechlager, Gunn & Hain Publishers, 1985), pp.66~68.

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며, 협정의 효과도 매우 限定的인데 머무르게 되었다. 또한 미소는 협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제한을 우회하여 기술적으로 질적 차원에서의 핵무기개발에 주력하였고, 제한에 포함되지 않은 전술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분야에서 군비증강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제기된 새로운 통제방법을 버튼은 「軍備統制 II」라고 불렀다.¹⁰⁾ 갈등당사국이 양적 통제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비경쟁을 하게 된 근본원인을 무엇보다도 (國家間の 不信과 의심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의심과 불신을 제거하고 이해를 증진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質的 統制라고 불리우는 이 새로운 방법은 世界安定 뿐만 아니라 세계안정에 영향을 주는 지역안정을 증진하고 잠재적인 갈등상황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해결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수렴하는 한편, 핵무기로부터 재래식무기의 통제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게 되었다.

군사력 감축을 의미하는 狹義의 군비축소의 개념은 위와 같은 다양한 내용을 개념적으로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狹義의 군축개념을 포함하여 “기존의 군비에 관하여 협력의 가능성과 공통이익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용어의 범위를 확장”¹¹⁾할 개념의 필요가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軍備統制』는 “상호 대응적 행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무기 및 군대의 배치제한, 무기의 통제, 군대의 감축 그리고 국가간의 理解를 增進하기 위해 취해지는 방법”¹²⁾이라고 정의되었다.

군비통제는 무기의 완전한 폐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점에서 군비축소

註 10. Ibid.

11. Thomas C. Schelling and Morton H. Halperin, Strategy and Arms Control, (Washington D. C.: Twentieth Century Fund, 1985), p.2.

12. Thee, op.cit., p.408.

의 한 단계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면에서 軍備縮小는 다양한 軍備統制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군축』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지라도 그 개념은 군비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군비통제는 버튼(J. Barton)교수의 두가지 군비통제 개념 즉 ‘量的 軍備統制’와 ‘質的 軍備統制’로 유형화할 수 있는바, 『군사력 상호균형감축(MBFR; mutual balanced force reduction)』은 양적 군비통제의 일종이며, 『신뢰 및 안전수립방법(CSBM: confidence - security building measures)』은 질적 군비통제에 속하는 것이다.

한편 국제적인 군비통제의 경험에서 확대된 군비통제 개념과 그 방법의 다양성은 이론적으로 군비통제의 실용성과 실천가능성을 현저하게 증가시켰지만 실제 군비통제는 국가간의 政治關係의 惡化로 말미암아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었고, 군비통제의 정치적 여건으로서 국가간의 政治關係改善이 새로운 군비통제의 영역으로 그 중요성이 제기되었다. 다시 말하면 양적 질적 군비통제개념의 전제로서 정치관계의 개선이라는 새로운 이유가 군비통제의 독자적인 영역으로 분석되고 부각되었다.

역사적으로도 미소간의 군비통제는 이들간의 평화공존의 정치적 데탕트로부터 시작되었고, 유럽의 CBM도 『데탕트 10원칙』이라고 불리는 1975년 헬싱키 선언의 「最終合意書(final act)」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데탕트 분위기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KAL민항기 격추 등에서 야기된 정치관계의 악화로 말미암아 계획된 「後續會議」가 기대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이것은 군비통제에 있어서 정치적 데탕트의 중요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 중반의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에서 1986년 CBM의 強化方案인 CSBM은 『스톡홀름 문서(stockholm document)』로 확정되었으며, 이 문서의 중요한 의의는 “상실한 헬싱키 정신 즉 정치적 데

당트를 부활시킨 것”¹³⁾으로 평가되었다. 실제로 80년대 중반이후 미소간의 軍縮努力은 근본적으로 미소간의 정치적 關係改善의 기초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군비통제에서 정치적 관계개선의 중요성에 관하여, 불(Hedley Bull)교수는 “군비통제체제는 政治的 條件에 달려 있으며, 정치적 데탕트 방법 없이 군비통제의 여지는 없다.”¹⁴⁾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비통제의 개념에 “군비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조성의 모든 행위를 포함”¹⁵⁾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타당성있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군비통제를 위한 정치적 여건조성의 방법을 『政治的 軍備統制』라고 정의하였다.

2. 包括的인 接近方法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역사적 경험에서 도출된 군비통제의 개념은 『양적 군비축소』, 『질적 군비통제』 그리고 『政治的 軍備統制』로 보완 발전되어 왔다. 이와 같은 전개에서 볼 때, 군비통제의 실천을 위한 방법은 이러한 3가지 개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정치적 데탕트와 군비통제와의 관계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볼때, 정치적 데탕트와 상호작용 및 상호의존의 관계에 있는 군사적 데탕트는 정치적 데탕트 없이 불가능하며, 政治的 데탕트는 양측의 군사적 대

註 13. Richard E. Derilek, “The Future of Conventional Arms Control in Europe: A Tale of Tow City; Stockholm, Vienna, “SIPRI yearbook: 1987, pp.339~340.

14. Hedley Bull, “The Objectives of Arms Control,” Richard A. Falk and Saul S. Mendlovitz, ed., Disarma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World Law Fund, 1968), p.100.

15. 박용옥, “한반도 군축과 한국의 안보체계, 「국제정치논총」, 제18집, (1978), p.56.

치의 수준을 완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장되고 보완되지 못한다면 안정되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적 데탕트가 군비통제의 전제조건이지만 역으로 '군비통제는 정치관계 개선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새로운 假定을 도출할 수 있다. 어떤 시점에서 정치적 데탕트가 이루어지고 또 활발히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과거의 오랜 敵對關係에서 형성된 불신감을 일시에 제거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데탕트는 충분히 신뢰할 만큼 안정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安保 不安感은 정치적 데탕트 상황에서도 군비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군비경쟁은 "데탕트 군비경쟁(detente arms race)"¹⁶⁾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기 단계의 데탕트를 심각하게 沮喪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된 군비통제를 통해서 데탕트 군비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정치적 데탕트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비통제는 실제로 '데탕트 軍備競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군비통제의 개념에서 나타난 군비통제와 군비축소 간의 관계이다. 군축을 포함하여 국가간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개념적으로 포괄한 군비통제는 유럽의 경우 신뢰수립방안과 상호 군사력 均衡減縮을 統合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홀스트(J. J. Holst)는 "信賴樹立方法은 국가의 군사적 행동이 타국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님을 타국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제 방법"¹⁷⁾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러한 개념의 신뢰수립 방법의 목적은 (1)국가간의 緊張을 緩和하고 국제환경을 개선하여 안전보장에 대한 불신감을 제거하고, (2)각 국

註 16. Yoshikaku Sakamoto, "A Political Design for World Disarmament," Thee, ed., op.cit., pp.302~305.

17. Johan J. Holst, "Confidence-Building Measures: A Conceptual Framework," "Survival," Vol.25, No.1, (1983), p.2.

가의 군사적 의도를 공개하여 상호간의 군사적 行動을 豫測할 수 있도록 하여 오해와 오판에 의해서 갈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며, (3)군비경쟁을 가속시키는 불신과 의심을 제거하여 군비통제와 군축협상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¹⁸⁾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유럽의 『신뢰수립 방법』은 합의된 유형의 軍事訓練을 相互通告하고, 參觀人을 招請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은 군사력을 직접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訓練 및 부대의 이동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作戰上의 軍備統制(operational arms control)』라고 부르기도 한다.

작전상의 군비통제방법 즉 신뢰수립의 방법은 군사력의 실질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군비통제의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서는 實質的인 軍備縮小를 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신뢰수립방법은 기존의 양적 통제방법을 대체하거나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군비축소에 관한 협정이 잘 체결되고 효과적으로 실천되게 하기 위하여 과도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가간의 의심, 적개심 그리고 안전보장에 있어서 不確實性을 제거하는 동시에 신뢰의 수립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비축소는 군비통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재래식 분야의 군비축소는 유럽의 『상호 군사력 균형감축(MBFR; mutual balanced force reduction)』이 전형적인 예이며, 군사력을 감축하여 규모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構造上의 軍備統制(structural arms control)』라고 부르기도 한다.

註 18. J. J. Holst and Karen A. Melander, "European Security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hristophe Bertram, ed., Arms Control and Military Force, (Hampshire:Gower, 1980), pp.223~224.

그러나 군사력의 균형감축은 항구적으로 유지할 군사력의 수준, 감축의 대상, 그리고 감축방법 등에서 현저한 見解差가 예상된다. 이러한 견해차는 군축에 대한 만족할 만한 합의가 시간적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요인이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초부터 CBM과 MBFR이 서로 다른 협상의 기구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CBM은 1975년에 기본적인 방법에 대하여 합의를 이루어 당사국들이 협정을 준수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1986년에 CSBM으로 강화되었다. 그러나 MBFR은 1970년대 초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비록 가까운 장래에 基本協定이 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군비통제는 합의가 용이한 신뢰수립 방법등 다양한 방안을 過渡期的으로 먼저 실천하고, 다음 과정에서 군비축소의 방법이 합의되고 실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전체과정에서 본다면, 신뢰수립은 군비축소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군비축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방법을 실천함에 있어서 『協商機構의 一元化』문제를 설명함으로써 전체과정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에서 신뢰수립과 병력감축은 서로 다른 협상의 기구를 통해서 논의되고 있다. 전자는 CSCE에서 논의되고 있고, 후자는 NATO와 WTO의 대표가 논의하는 陣營 對 陣營의 협상이다. 따라서 협상기구와 二元化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가 상호 연계되어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쉽게 조정되지 못하여 유럽에서 군비통제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협상기구를 一元化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바나비(Frank Barnaby)교수에 의하면 “統合的 接近方法(integrated approach)은 점진적으로 접근방법(piecemeal approach)과는 다른 것으로 양적, 질적 제한을 포함하는 일괄적 접근방법(package

approach)”¹⁹⁾이라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군비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호 영향을 미치는 제 방법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점진적인 방법은 실행하기 쉽다는 가정에서 강조되지만 全體體系를 결여한(합의하지 않은) 점진적인 한 단계는 다음 단계를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군비통제의 총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수립과 군사력 감축이 동시에 병행하여 논의되어야 하며, 協商의 難易度와 技術의 複雜性에 비추어 단계별로 실천하는 “多段階의 包括的 計劃 (multiphased comprehensive program)”²⁰⁾이 필요하다. 이것은 협상자체가 단계별로 추진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協商은 동시에 상호 연관되는 사항을 總體的으로 包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實踐에 있어서 점차상 段階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군비통제 개념의 변천과 접근방법에 있어서 국제적인 경험은 남북한 군비통제에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즉 정치적 군비통제, 군사적 신뢰수립의 질적통제 그리고 군비감축의 질적통제를 단계로 하여 包括的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990년 9월 「南北韓 總理會談」에서 제시된 군축제안에서 남한은 정치적 신뢰구축,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군비감축의 3段階 軍縮案을 제시하였고, 북한은 기존의 군축제안에서와 같이 신뢰구축, 남북무력감축 그리고 외국무력철수 등 군축의 一括妥結案을 제시하였다.²¹⁾ 이러한 점에서 남한의 군축

註 19. Frank Barnaby, “An Integrated Approach to Disarmament,” Thee, ed., op.cit., pp.250~253.

20. Jozef Goldblat, Arms Control Agreement: A Handbook (Stockholm: Praeger, 1982), pp.308~309.

21. 북한 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무원 연합회의,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한사이의 군축방안(1988.11.7),”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1990.5.31)” 국토통일원, 『통일 남북관계관련 북한자료』 (서울: 국토통일원, 1990), pp.69~136.

안의 특징은 「신뢰 및 안전수립방안」이며, 북한 군축안의 특징은 「군비축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양적 접근과 남한의 질적 접근이 현재 南北韓 군비통제의 對立樣相임과 동시에 실천을 위하여 상호 절충을 모색하는 입장의 출발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남한이 신뢰수립을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 접근방법으로 군축을 최종단계로 제의하고 있으며, 북한은 군축을 중심으로 하는 일괄적 통제방법을 제의하고 있지만 군비통제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CSBM과 MBFR의 協商機構의 一元化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두가지 방안은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을 포괄하는 전체계획 속에서 시행의 難易性和 實踐可能性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한 군비통제의 접근방법은 政治的 餘件造成的 정치적 군비통제를 전제로 하여 북한의 「총체적인 일괄적 통제방법」과 남한의 「개별적인 점진적 통제방법」을 수립하여 「3段階 包括的인 接近方法」을 모색하였다.

Ⅲ. 南北韓 軍備統制의 主要方案

남북한이 지금까지 제의한 군축방안을 군비통제의 개념에 따라 분석하면 『政治的 軍備統制』로서 정치적 여건조성, 『질적 군비통제』로서 군사적 신뢰수립 그리고 『양적 군비통제』로서 군비축소이며, 이와 같은 3가지 영역의 이슈는 개념간의 상호 관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全體를 속에서 段階的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각 단계에서 다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의 특징은 「신뢰 및 안전수립방안」이며, 북한 군축안의 특징은 「군비축소」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양적 접근과 남한의 질적 접근이 현재 南北韓 군비통제의 對立樣相임과 동시에 실천을 위하여 상호 절충을 모색하는 입장의 출발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남한이 신뢰수립을 중심으로 하는 점진적 접근방법으로 군축을 최종단계로 제의하고 있으며, 북한은 군축을 중심으로 하는 일괄적 통제방법을 제의하고 있지만 군비통제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럽에서 CSBM과 MBFR의 協商機構의 一元化를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두가지 방안은 분리될 수 없고 오히려 이것을 포괄하는 전체계획 속에서 시행의 難易性和 實踐可能性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제시한 군비통제의 접근방법은 政治的 餘件造成的 정치적 군비통제를 전제로 하여 북한의 「총체적인 일괄적 통제방법」과 남한의 「개별적인 점진적 통제방법」을 수립하여 「3段階 包括的인 接近方法」을 모색하였다.

Ⅲ. 南北韓 軍備統制의 主要方案

남북한이 지금까지 제의한 군축방안을 군비통제의 개념에 따라 분석하면 『政治的 軍備統制』로서 정치적 여건조성, 『질적 군비통제』로서 군사적 신뢰수립 그리고 『양적 군비통제』로서 군비축소이며, 이와 같은 3가지 영역의 이슈는 개념간의 상호 관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全體를 속에서 段階的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각 단계에서 다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政治的 軍備統制 : 政治的 與件造成

『정치적 군비통제』는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分斷의 특수한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남북문제는 葛藤의 2重的 構造에서 그 궁극적인 원인을 해소해야만 하는 바, 첫째, 국제적인 차원에서 냉전체제와 동맹관계를 완화하여 국제적인 영향에 의한 葛藤의 惡化를 제거하므로써 문제해결의 국제정치적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남북한의 정치적 자주성을 회복하고, 둘째, 南北分斷體制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적 여건조성은 국제정치적 여건조성과 남북한 관계정상화로 나눌 수 있다. 국제정치적 여건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소간의 정치적 데탕트는 세계적인 수준에서 미소간의 군사적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그 영향은 남북한간의 군비통제에 肯定的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이 미소간의 정치적 데탕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주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冷戰體制의 유산인 군사동맹의 완화는 국제정치군사적 환경 변화에서 객관적으로 조성되는 여건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비록 제한적인 것이 될 것이지만 南北韓의 政策的인 노력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에서는 합의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한간의 관계정상화는 분단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분단의 惡影響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출발점이 되는 것처럼 남북한 군비통제의 필수조건이며, 군비통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군비통제에 있어서 군비통제가 강조되는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한 葛藤의 특징이 정치적이며,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에서

상호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心理的 태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지역을 자신의 관할하에 두려는 명백한 의도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국가가 安全保障을 핵심적인 가치로 인식하고, 국가간의 갈등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간주되지만 독립국가간의 葛藤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평등한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토대위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들간의 갈등은 항상 妥協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렇기 때문에 武力에 의한 통일의 試圖을 배제할 수 없는 현재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대립의 여건에서 상대방을 정당한 정치의 주체로 인정하는 정치적 관계개선 또는 關係正常化 없이 군비통제를 시도하는 것은 설명 어떤 정치적 이유에서 협상을 한다고 하여도 失敗할 수 밖에 없고 부분적인 협정이 체결되어도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 군비통제에 있어서 정치적 여건 조성 즉 「政治的 軍備統制」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정치적 대당트는 상호존재의 부정을 지양하고 분단의 현실을 사실로 받아들여 共存關係에서 남북의 통일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남북한이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침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일어날 수 없다는 共通 認識에 근거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확산은 정치적 대당트에서 확산되고 군비통제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70년대초 국제적인 긴장완화 및 대당트의 분위기에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는 비록 「7.4共同聲明」과 같은 정치적 대당트의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경직되고 첨예한 대립으로 결말지어진 것처럼, 80년대 中半 이후의 국제적 긴장완화의 분위기와 미소간의 군축노력은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冷戰의 解消 및 갈등해결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남북문제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國際政治的 環境에서 분단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南北韓의 獨自的인 정치적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정치적 여건의 조성에서 중요한 냉전체제의 완화와 군사동맹체제의 해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조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계는 있지만 남북한이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서 國際關係를 적극적으로 改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남북한의 외교정책 중에서 국제관계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남한의 『북방정책』과 북한의 對美接近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정책』 즉, ‘交叉接觸’을 가속화하여 ‘ 상호교차승인’ 및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대미 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이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을 『두개의 朝鮮策動』 및 『分斷 固着化』라는 입장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이 한반도의 통일에 장애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相互 交叉承認과 유엔同時加入은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냉전체제 및 동맹체제의 완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남북한간의 갈등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엔동시가입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時限付 加入」을 함으로써 통일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분단고착화를 주장하는 북한의 견해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엔加入을 위한 남북대표회담에서도 그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한 것은 남북한 갈등의 深度를 다시한번 認識케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남북한간의 關係正常化는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관문이며, 分斷體制의 解消를 위한 자주적인 평화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간의 관계정상화는 국제적 여건 조성을 위한 『교차승인』 및 『유엔동시가입』을 훨씬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냉전체제와 동맹체제를 완화시키는데 있어서 동맹국이 남북한을 軍事的으로 지원할 필요성과 그 정당성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高位級會談이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이 회담의 형식을 보다 객관화하기 위하여 남한의 『頂上會談』과 북한의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의 형식을 절충하여 『頂上級會談』으로 부르며, 남북한은 여러 회담제외의 형식에서 『고위급 회담』으로 접근하고 있는 바, 정상급 회담은 남북한 關係改善을 위한 사회전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위한 돌파구를 열것으로 기대된다.

정상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한은 1972년의 『7.4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南北調節委員會」의 기능을 재개하는 한편, 군사협력의 출발로서 무력 불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의 내용에 군비통제를 포함한 軍事協力을 선언해야 한다. 군사협력을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에 두기로 한 「군사분과위원회」를 『南北軍事協力委員會』라고 하고, 이것은 남북한간의 불가침조약을 관리하는 동시에 남북한 군비통제업무를 관장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남북군사협력위원회의 傘下에 『多國籍 檢證委員會』를 설치하여 군비통제의 모든 자료를 검증하여 協商의 자료를 확인하고 협정체결시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駐韓美軍의 철수는 남북한 군비통제에 있어서 핵심적 고리역할을 하는 잇슈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궁극적인 목표로서 軍備縮小를 위한 남북한 군사력 균형은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現場戰力이 방어를 위한 戰爭抑止力으로써 충분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비군개입의 가능성에 대한 북한의 의심은 남한의 군사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따르는 불확실성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과 남한이 북한을 절대 침략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시킬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한간의 신뢰수립을 위한 軍事的인 여러 방안의 실용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안전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미국의 核武器가 존재하면서 북한의 化學武器 제거와 핵무기제조 의도를 포기하라고 제안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논리적으로만 보면 주한미군의 핵무기는 철수하고 재래식 전력만 남는 방안도 모색될 수 있지만 주한미군의 군사력은 戰術核武器를 주요 무기체계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소련의 팽창을 재래식 전력으로만 억지하라는 해석이 가능한 방안은 비현실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駐韓美軍撤收를 국제적인 여건조성으로 분석하고 철수결정에 있어서 남북한의 역할을 제한적인 것으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駐韓美軍의 주둔 목적은 1차적으로 소련의 팽창을 억지하는 것이며, 북한의 남침억지는 2차적인 역할이다. 北韓이 南侵時 소련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미군의 자동개입 또는 자동확대개입은 미국의 政策的 判斷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南韓의 必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國家利益을 보존하기 위한 미군의 세계전략의 범주에서 평가되는 동북아 및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에서 주한미군 없이도 미국의 국가이익이 보존될 수 있다면 南韓의 意志와 無關하게 지금까지의 철수에서 보여준 것처럼 결정되어질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사실은 미국이 정책적 차원에서 미군철수를 결정하였을 경우 남한이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주한미군의 철수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美國政府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논쟁에서 항상 철수하지 않을 것을 확고하게 밝혔지만 이미 3개기지를 폐쇄했고 앞으로 주한미군의 철수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關係正常化가 이루어지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교차접촉이 확대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군사동맹의 군사적 지원의 가능성과 정당성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철수의

여건을 보다 성숙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철폐문제에 남북한이 영향을 미친다면 南北韓 關係改善을 통해서 주한미군철폐를 위한 정치적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상호 신뢰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철폐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치적 과정에서 최소한 남북한은 주한미군의 철폐일정을 명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은 남한의 政治的 努力이 더욱 요구되는 점이다.

2. 質的 軍備統制 : 軍事的 信賴樹立

信賴構築은 국가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수립에 영향을 주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군사적인 신뢰수립은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신뢰구축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신뢰구축은 南北對話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추구되는 정치적 의미의 관계개선이며, 군사적 의미의 신뢰수립은 그 한 부분의 특수한 관계개선으로 軍備統制에 한정할 수 있다. 특히 이 두가지 용어는 남한에서 구별하지 않고 혼용되고 있으며, 군사적 의미의 신뢰수립이 신뢰구축의 유일한 방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정치적 차원의 일반적인 信賴構築方案과 군사적 의미의 信賴樹立方案은 정책적 추진을 위하여 구분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군비통제 개념으로 정치적 군비통제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신뢰구축과 군사적 의미의 신뢰수립을 개념적으로 분리하였다.

정치적 여건조성과 駐韓美軍撤收를 前提로 남북한이 군비축소에 앞서 과도기적으로 군사적 의미의 신뢰수립의 방안을 실천하는 것은 유럽의 군비통제 경험에서 보았듯이 實現可能性이 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신뢰수립방안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休戰協定』에 명시된 「非武裝地帶의 非武裝化」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攻擊武器配

『置禁止區域』과 일정형태의 『軍事訓練禁止區域』을 설정하여, 유럽에서 실천되고 있는 「軍事訓練의 事前通告 및 訓練 參觀人 招請」과 남북한이 대량 파괴무기를 정책수단으로 선택할 것을 배제하는 「非核地帶」를 창설하는 것 등이다.

첫째,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북한이 1988년 제의한 바 있는 『板門店共同警備區域』의 군사력 감축방안은 서로 합의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검증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군비통제에 관한 신뢰를 확인하는 가장 용이한 방법이다.

다음은 休戰協定の 비무장지대의 위반시설 및 주둔 군사력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북한이 준수하도록 규정된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意圖에 대한 의심을 야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을 먼저 확실히 준수하고 끝으로 비무장지대의 강화만을 마련하는 것이다. 휴전협정은 군사분계선 양쪽 2km를 양쪽 군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緩衝地帶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南北韓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의 기동성 및 화력과 양측이 전방에 배치하고 있는 군사력을 감안한다면 상호 기습공격의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남북한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를 강화함으로써 상호 기습공격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

非武裝地帶의 強化方案은 지리적으로 특수한 양측의 행동에 대비하여 완충지대를 확대하는 것으로 군사분계선에 연하여 서울이북지역으로부터 평양이남 지역 약 200km구간을 일정한 유형의 군사훈련 즉, 후술하게 될 군사훈련의 상호 통고의 대상이 되는 군사훈련을 금지하는 『訓練禁止區域』으로 설정하는 한편 이 구역에는 탱크, 장갑차, 100mm이상의 포, 다연장 로켓, 지대지 미사일 및 전술항공기 등의 무기배치를 금지하는 『攻擊武器配置禁止區域』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구간은 서울에서 군사분계선이 약 50km이고 평양에서 군사분계선까지가 약 150km인 점을 고려하면 불공평한 것처럼 보인다. 그리

나 軍事戰略的 측면에서 남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전략목표는 아무리 제한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首都를 점령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수도의 점령을 기본 목표로 하는 군사작전을 制限하는 것은 전략작전을 위한 훈련과 공격무기배치를 금지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軍事訓練의 상호통고와 참관인을 초청하는 것이다. 통고의 대상이 되는 훈련은 모든 多國籍 訓練을 포함하여 지상군 1개사단 이상의 훈련, 해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및 1개여단 이상의 空挺隊 및 上陸部隊가 참여하는 훈련은 30일전에 상호 통고하도록 하며, 모든 다국적 훈련을 포함하여 지상군 2개사단 이상의 훈련, 해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 및 2개사단 이상의 공정대 및 상륙부대가 참여하는 훈련은 사전통고는 물론 參觀人을 초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훈련은 전술한 바와 같이 훈련금지구역에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南北韓의 다국적 훈련은 1차적으로 10만명 이하로 하며 그 수를 점차로 줄이는 동시에 隔年制로 실시하고 증원군 없이 실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전 통고 및 참관인 초청의 대상이 되는 훈련의 기본단위를 1개 사단 이상으로 한 것은 1개사단의 作戰領域은 그 범위에서 전술적이라 할 수 있다. 설령 1개사단이 공군 및 해군과 합동작전을 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의 영토를 단독으로 점령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개사단 이상의 군대가 단일 지휘관의 지휘아래 작전을 실시한다면 戰略的으로 상대방 영토의 점령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략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는 1개사단 이상의 부대가 단일 지휘관의 지휘아래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훈련에 대하여 相互 通告하고 2개사단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 참관인을 초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非核地帶를 창설하여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제거하고 남북한이 안

보의 수단으로 대량파괴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비핵지대창설은 攻擊武器配置禁止區域을 대량파괴무기에 있어서 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신뢰수립의 한 방안으로 볼 수 있으며,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와 더불어 남북한이 이러한 무기를 보유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것으로 남북한 군비축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결할 이슈이다. 특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생화학무기의 생산시설을 평화적인 목적의 생산시설로 변경하고 저장 배치하고 있는 생화학무기를 廢棄시킴은 물론이고 핵시설에 대한 國際安全檢査를 받음으로써 상호간의 의심과 불신의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

남북한의 한반도 非核化는 동북아를 非核化하는 국제적인 제안들과는 다르다. 東北亞 非核化 방안은 우선 일본을 비핵화하기 위한 일환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모색하며 한반도에서 남북한을 非核化하려는 것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일본의 비핵화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비핵화는 먼저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를 위한 制限된 의미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주변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자칫 南北問題가 국제화되어 남북한의 주도적 역할이 제약됨으로써 남북한 군비축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동북아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남북한은 한반도의 비핵화방안을 가지고 공동으로 參與하며 그 합의사항을 준수함으로써 韓半島의 非核化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비핵지대창설은 군비축소를 위한 전제조건이며, 남북한이 非核, 非化學武器의 선언을 하지 않는 한 군비축소의 노력은 무용한 것이다.

3. 量的 軍備統制 : 軍備縮小

남북한 군비통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군비축소의 실천이다. 정치적으로 관

계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주한미군철수의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駐韓美軍의 撤收와 核武器가 제거되며, 북한의 生化學武器가 폐기된 동시에 그러한 생산시설에 대한 檢證이 이루어지고 군사적 의미의 신뢰수립 방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군사력을 감축하기 위한 군비축소를 단행할 수 있다. 이전의 모든 단계는 실질적인 軍備統制의 의미도 있지만 군비축소를 위한 신뢰수립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의 철수는 남북한이 군사력 균형을 합의하여 1차로 양측의 군사력을 합의수준으로 감축을 단행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주한미군없이 남북한의 군사력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일정에는 남북한이 軍事力 均衡을 위한 실질적인 군축의 실행과 일치되는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군비축소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감축대상은 計測可能한 병력과 무기체계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남북한 군비통제는 기습공격의 가능성을 줄이고, 戰時被害의 감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군비축소와 관련하여 대량파괴무기의 폐지, 攻勢的 무기체계의 감축 그리고 병력감축 등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그 대상의 감축 수준은 다루지 않고 다만 국제적인 군축의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軍縮 協商에서 제기된 몇가지 문제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現存 軍事力의 수준을 평가하여 균형상태를 결정하고 감축의 대상을 정하는 문제이다. 현재 남북한의 「軍事力 均衡」에 대한 평가는 평가자의 입장과 견해에 따라 다양하다.²²⁾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에 관한 견해의 차이는 軍縮 協商을 어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計測가능한 군사

註 22. 하영선, “한반도의 군사균형: 신화와 현실,” 하영선, 『한반도의 전쟁과 평화: 군사적 긴장의 구조』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p.1~5.

력을 대상으로 한다할지라도 質的요소를 고려하는 경우 그 어려움은 加重된다.

군비축소를 위하여 정확한 군사력 현황을 만족스럽게 합의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까지 비밀로 유지된 군사력 현황을 단지 군비축소의 필요성과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여 協定の 締結도 확실하지 않고 협정체결시 준수여부도 不確實한 상황에서 모든 자료를 남북한이 쉽게 공개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IISS자료 마저도 신뢰하지 않는 북한'²³⁾이 자신의 군사력에 대한 어떤 자료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軍備統制協商에서도 정확한 자료를 공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이점에 있어서는 남한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유럽의 「軍事力 減縮協商」에서 협상이 부진했던 이유중의 하나는 서로 제시하는 군사력 현황의 자료가 상대방에서 신뢰를 줄 만큼 충분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제는 군사력의 適正水準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북한은 병력에서 10만명을 유지하고 武器體系는 병력에 상응하게 감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준의 결정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면 필자는 民兵組織의 감축과 더불어 병력을 35만명으로 하며 1차로 50만명으로 균형감축하고 그에 따라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하는 동시에 2차로 40만명으로 하여 최종적으로 35만명을 하나의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²⁴⁾ 武器體制의 減縮은 육해공군의 공격무기 및 화력이 큰 무기를 중심으로 할 수 있으나 그 적정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본 논문의 범주밖에 있다.

註 23. 『노동신문』, 1983.10.2.

이재선(역), 『한반도의 군사지도』 (서울: 과학과 사상, 1989), P.102. 재인용 “IISS발표가 실패와 합치하지않는 부정확한 자료이고, 미국과 남조선괴뢰 당국의 선전자료와 동일하다.”

24. 拙稿, op.cit., PP.141~143.

셋째 문제는 減縮의 方法이다. 감축방법은 同一上限線을 유지하는 『대칭적 감축』과 동일비율 및 동일수감축의 『비대칭적 방법』이 있다. 두가지 방법은 모두 상대방에 비하여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군사력이 우위인 국가는 非對稱的인 方法을 주장할 것이고, 질적으로 우세하거나 양적으로 열세인 국가는 대칭적 방법을 주장할 것이다. 북한이 '1988년 11월과 1990년 5월에 제시한 군축제안'에서 밝힌 병력의 단계적 감축의 45만명 (또 30만명), 25만명 (또는 20만명) 그리고 10만명 수준과 무기체계의 감축을 兵力減縮과 상응하게 감축하자고 한 것은 감축의 방법을 「동일상한선의 감축」의 방법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람직한 내용이다. 그러나 어느 일방이 이러한 원칙에서 質的 差異를 고려하자고 하는 경우 기존의 마련은 복잡해지며, 그 差異가 심각한 경우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마지막 문제는 檢證의 문제이다. 군비통제과정에서 검증은 군비통제의 安全裝置로 불리우며, 군비통제를 安定化시키는 검사방법의 총체이다. 이것은 상대방이 협정을 위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상호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검증방법을 거부하는 것은 협정에 입하는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는 바 군비통제 자체를 위협스럽게 하는 것이다.

미국과 소련의 경우에서 미국은 公開的인 現場調査를 위한 검증을 협정에 포함시킬 것을 강조한 반면, 소련은 검증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협정의 체결과 준수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소련의 사회를 현장검증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을 허용하기 어려웠던 이유로 들고 있다. 남북한간의 檢證問題도 유사한 상황에서 전개될 수 있다. 다만 檢證의 制限을 주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협정에 대한 신뢰심을 해침으로써 군비통제협정을 위협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해 둔다.

따라서 남북한의 군비통제는 협상과정에서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서 검증이 요구되며, 협정체결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이 필요한 바 이것은 제도적으로 『南北軍事協力委員會』의 『多國籍 檢證委員會』가 다양한 검증방법을 통해서 수행해야 한다.

IV. 展 望 (結 論)

남북한 군비통제의 현실적인 가능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軍備統制의 방안들을 합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지금까지의 남북한 군축제외에서 북한의 접근방법은 『總體的인 一括的 統制方法』이며, 남한의 접근방법은 『個別的인 漸進的 統制方法』으로 서로 대립적이며 특히 군축방안은 통일방안과 연계되어 '목표의 양립, 불가능한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군비통제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은 남북한의 접근방법을 包括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인 방법에서 개념적으로 政治的 葛藤을 緩和하는 것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政治的 軍備統制」, 「質的 軍備統制」 그리고 「量的 軍備統制」의 3가지 개념으로 군축방안을 3단계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包括的인 통제방법』이다. 이것은 북한의 일괄적인 접근방법을 단계적 접근방법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남한의 점진적 접근방법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보완하여 수렴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한미군철폐를 배제한 신뢰수립 방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폐를 우선하는 군축방안은 어떤 형태로든 그 意見을 수렴하여 調整해야 한다.

군비통제의 개념들과 개념간의 상호관계에서 설명한 것 처럼, 남북한 군비통제의 개념은 「정치적 군비통제」의 政治的 與件造成的 방안, 「질적 군비

서 검증이 요구되며, 협정체결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이 필요한 바 이것은 제도적으로 『南北軍事協力委員會』의 『多國籍 檢證委員會』가 다양한 검증방법을 통해서 수행해야 한다.

IV. 展 望 (結 論)

남북한 군비통제의 현실적인 가능성은 가장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軍備統制의 방안들을 합의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지금까지의 남북한 군축제외에서 북한의 접근방법은 『總體的인 一括的 統制方法』이며, 남한의 접근방법은 『個別的인 漸進的 統制方法』으로 서로 대립적이며 특히 군축방안은 통일방안과 연계되어 '목표의 양립, 불가능한 정치적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이 군비통제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은 남북한의 접근방법을 包括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그 구체적인 방법에서 개념적으로 政治的 葛藤을 緩和하는 것과의 연계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政治的 軍備統制」, 「質的 軍備統制」 그리고 「量的 軍備統制」의 3가지 개념으로 군축방안을 3단계로 실천할 수 있는 『3단계 包括的인 통제방법』이다. 이것은 북한의 일괄적인 접근방법을 단계적 접근방법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남한의 점진적 접근방법을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 보완하여 수렴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면, 남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한미군철폐를 배제한 신뢰수립 방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철폐를 우선하는 군축방안은 어떤 형태로든 그 意見을 수렴하여 調整해야 한다.

군비통제의 개념들과 개념간의 상호관계에서 설명한 것 처럼, 남북한 군비통제의 개념은 「정치적 군비통제」의 政治的 與件造成的 방안, 「질적 군비

통제」의 군사적 信賴樹立 그리고 「양적 군비통제」의 군비축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이며, 앞으로 제시되는 군축방안들도 각 방안의 내용에 따라 위와 같은 3가지 범주에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奇襲攻擊의 가능성을 제거」하고, 「戰時被害의 감소」를 기본목표로 하는 남북한 군비통제의 실천계획은, 남북한 갈등의 정치군사적 특징에서 볼 때, 정치적 여건조성을 전제로 군사적 신뢰수립 그리고 군비축소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남북한 關係正常化등 관계개선을 위한 정치적 노력이 시작될지라도 이것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제,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협력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사문제에 있어서 軍事協力은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며, 국제적 경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정치적 데탕트는 군사적 데탕트가 수반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발전되지 못하는 것이다. 일단 개시된 정치적 緊張緩和은 군사적 협력이 병행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확대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남북한 군비통제에 관한 문제는 국내정치와의 관계에서 一考를 요한다. 즉, 군비통제는 3가지 시각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바, 국가 정책으로서의 군비통제, 군사전략으로서의 군비통제, 그리고 협상주체로서의 군비통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비통제는 일반적인 外交政策에서 보이는 것처럼 政策決定過程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간의 상호과정 즉 관료정치과정이란 집단과정의 결과이든 이들간의 合議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군비통제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이들의 내부적인 영향력 행사가 계속될 것이며, 남북한 각각의 군비통제 협상안은 지극히 제한될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결국 남북한 군비통제를 매우 한정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남북한의 군축제의 의 頻度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50년대로부터 지속적으로 약 250여회에 걸쳐 軍縮案을 提議한 반면, 남한은 70년대

부터 60여회의 군축제의를 해왔지만 매우 소극적이었으며, 남한의 군축제 의 내용도 군축의 주제로서 周邊的이며, 限定的인 것에 불과하였다.

남한이 군축제위에 있어서 북한보다 소극적이었던 이유는 6.25전쟁에서 피 해의 경험이 安保를 가장 중요한 국가목표로 설정하게 하고, 미군이 남한 에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軍縮提議에 필연적으로 연계될 주한미군 철수, 핵무기철거 및 군사력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축을 논의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군비통제의 개념조차 주로 『군비축소』에 한정됨에 따 라 狹義의 軍縮分野에서 북한보다 설득력있는 다른 代案을 제시할 수 없었 기 때문이다. 북한 군사력에 비하여 열세이며 북한의 침략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남한은 군축을 시기상조이며 위험한 생각이라고 평가해 왔 다. 북한은 남한의 이러한 한계를 간파하고 적극적으로 군축을 제의함으로써 세계 및 남한내의 여론에 평화이미지를 高揚시키면서 外交攻勢를 취할 수 있었다. 물론, 북한이 진정으로 군축을 위하여 군축제의를 했는지는 의 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남북한 軍備統制는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적 변혁과정에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第3世界 사회의 軍事化는 국가의 사회화과정에 의해서 군사 중심주의적 경향을 확대하는 바, 사회의 脫 軍事化는 군비통제를 안정적으 로 추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한의 민주화와 아직은 기대할 수 없으나 北韓의 自由化는 남북한 군비통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중 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적으로 긴장완화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존의 동맹체제를 해체 할 정책적인 노력은 특히 한반도에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냉전체제에서 지속된 상호 敵對意識이 여전히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평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는 낙관적으로 전망할 수 있다.

현재의 국제적인 데탕트 분위기가 미소의 軍縮努力에 의해서 지지되고 있고, 남북한의 外交政策의 추진 방향이 군비통제의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즉, 남한의 북방정책은 韓·蘇修交로 큰 전환점에 이르고 있으며 韓·中關係改善도 임박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남방정책은 아직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남북한의 외교정책은 입체적으로 볼 때, 교차접촉의 단계이나 「交叉承認」의 과정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크며, 제도적으로 「유엔동시가입」은 냉전체제와 동맹관계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남북한간 총리회담은 「정상급회담」으로 남북한 關係改善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한 관계정상화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기본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남북한 군비통제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는 「政治的 軍備統制」의 정치적 여건이 성숙되어 나가고 있다고 하는 평가에 기인한다.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여건속에서 남북한이 外交적으로 合議可能한 군축방법을 만들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1990년 9월 총리회담에서 양측이 제시한 군축안처럼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인이 제시한 『3段階 包括的 軍縮方法』은 남북한의 접근 방법상의 차이를 수렴하였고, 남북한이 제시한 군축방안을 포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남북한간에 實踐可能한 군비통제의 한 방법으로 意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社會主義圈의 變化와 北韓開放 問題

1990年 12月 20日 印刷

1990年 12月 27日 發行

用役責任者： 金相俊 (韓國政治學會長)

發行處： 統一院 調查研究室 (第2)

刊行責任者： 朴甲壽

印刷所： 金剛文化印刷

〈非賣品〉